

- 495
1. 이 冊子는 國土統一院의 統一問題 意識調査 計劃에 의거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2. 收錄된 내용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관련된 研究 및 政策樹立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임.

統一問題에 관한 國民意見調査

—輿論 先導階層 中心—



調査 및 分析팀

최영길 (延世大 校授)

김구호 (延世大 大學院)

이종수 (延世大 大學院)

刊行責任

서성우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 | |
|-----------------------------|----|
| 第 1 章 研究節次 | 1 |
| 1. 研究目的 | 1 |
| 2. 研究內容 | 2 |
| 3. 分析方法 | 17 |
| 第 2 章 分析內容 | 23 |
| 第 1 節 社會經濟的 背景 | 23 |
| 1. 性 別 | 23 |
| 2. 年 齡 | 24 |
| 3. 教育水準 | 24 |
| 4. 生活水準 | 25 |
| 5. 職 業 | 26 |
| 6. 出身地域 | 27 |
| 第 2 節 安保 및 反共에 對한 意見 | 28 |
| 概 要 | 28 |
| 1. 體制選好 | 29 |
| 2.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에 對한 認識 | 36 |
| 3. 北韓 및 共產主義 理念 과악 경조 | 38 |
| 4. 韓半島의 戰爭可能性 | 39 |
| 5. 美軍撤收에 對한 見解 | 46 |
| 6. 戰爭再發時의 行動類型 | 51 |

| | |
|-----------------------------------|-----|
| 7. 韓國의 當面 威脅要因 | 53 |
| 8. 北韓의 南侵時 예상되는 結果 | 59 |
| 9. 올림픽과 北韓의 挑發 可能性 | 62 |
| 第3節 北韓觀 | 63 |
| 概要 | 63 |
| 1. 北韓社會 認識 | 64 |
| 2. 北韓에 關한 知識源 | 68 |
| 3. 新聞·冊·政府發表 等を 通한 北韓實情 信賴度 | 72 |
| 4. 北韓同胞에 對한 韓國社會 優位性說明 自信度 | 78 |
| 5. 北韓住民 對面時의 態度 | 82 |
| 6. 北韓禮制에서 本말을 點 | 86 |
| 7. 金日成 死後 南北關係 展望 | 89 |
| 第4節 統一문제에 對한 關心度 | 93 |
| 概要 | 93 |
| 1. 統一의 目的 | 94 |
| 2. 統一의 當爲性 | 97 |
| 3. 統一可能性 | 102 |
| 4. 統一後의 理念體制 | 105 |
| 5. 南北韓의 統一努力 比較 評價 | 110 |
| 6. 統一沮害 要因 | 114 |

| | |
|---|-----|
| 第 5 節 南北韓 統一方案에 對한 認知度 및 評價 | 120 |
| 概要 | 120 |
| 1. 韓國側 統一方案 (民族和合 民主統一案) 理解度 | 121 |
| 2.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提議에 對한 見解 | 122 |
| 3. 政府의 統一對話政策 評價 | 123 |
| 4.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對한 內容補完 | 132 |
| 5. 統一의 輿論收斂 方案 | 135 |
| 6.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에서 제시된 南北韓 基本 關係에 관한 暫定 協定案의 要旨 | 138 |
| 第 6 節 統一의 方案과 對話에 對한 見解 | 139 |
| 概要 | 139 |
| 1. 統一方法 | 149 |
| 2. 統一論議 許容範圍 | 147 |
| 3. 南北對話의 寄與度 評價 | 152 |
| 4. 對話接近 方法 | 154 |
| 5. 北韓의 對話不應 理由 | 158 |
| 6. 南北學生會談에 對한 見解 | 159 |
| 7. 野黨과 北韓 勞動黨間의 直接對話에 對한 見解 | 162 |
| 8. 올림픽 共同開催에 對한 見解 | 164 |
| 9. 南北韓軍事會談에 對한 意見 | 168 |

| | |
|--|-----|
| 第 7 節 統一의 課題와 展望 | 169 |
| 概要 | 169 |
| 1. 統一을 爲한 先決課題 | 169 |
| 2. 統一을 爲한 國際的 課題 | 172 |
| 3. 統一을 爲한 國內的 課題 | 176 |
| 4. 統一安保教育의 重點方向 | 181 |
| 5. 統一政策에 對한 國民의 提言 | 186 |
| 第 8 節 南北韓의 豫想事態 豫測 (1988 ~ 1995) | 192 |
| 1. 主要豫想事態 分析 (韓國) | 192 |
| 2. 主要豫想事態 分析 (北韓) | 195 |
| 3. 政策對案 | 199 |

第1章 研究節次

1. 연구목적

분단이후 6.25 동란을 거치는 동안 통일에의 염원은 국민 각 계층에 강렬하게 스며들었지만 남북한의 체제이념 차이와 상호불신은 갈수록 벽이 두터워지고 있다. 미·소의 신데탕트나 중국의 개방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객관적 이해등이 성숙되고 있는 한편, 남북한의 민족 내부역량으로 통일에의 실현을 달성할 것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의 국력격차와 민족공동체의 인식은 남북우열의 비교를 거부하고, 북한을 현실적 시각으로 인식하며 통일에 대해 탈이데올로기 입장에서 보려는 우리 사회의 흐름이 있다.

이러한 진보적, 때로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우리의 진보적 중산계층은 6.25 미경험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50년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그 어느 세대보다도 합리적으로, 풍요속에서 교육받고 민주사회화되어 있는 세대다. 국민의 7할을 차지하는 이들 6.25 이후 세대는 금후 남북한 관계, 통일정책의 이론적, 정책실현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50대부터의 기성세대는 6.25를 경험하고 공산, 자본주의 체제이념을 생활로 체험한 세대로 이들의 세대는 이제 한국사회의 활동세력의 장에서 지도, 자문세력으로 서서히 역사의 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북한사회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역사의 반복 진행을 경험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의 의사

를 수렴하자면 각계의 소리가 강력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증대되는 진보적 중산계층(Liberal Middle Class)을 중심으로 도시화, 산업화, 직업다양화, 사고의 흑백논리지양으로 규정되는 오늘날의 한국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기능별, 계층별, 집단별의 중추적 지도세력 혹은 여론선도세력의 통일에의 관점과 행동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건전한 미래지향의 통일지향의 통일정책과 2010년대의 새로운 통일안보관 확립과 젊은 세대에의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계속적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2. 연구내용

한국 사회의 여론선도세력 내지 기능별 중추계층의 국민에게서 통일에 관한 의식과 행동유형을 정책도출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8개의 분야에 49개 분항으로 된 설문서를 작성하였다.

8개의 분야는 사회경제배경, 통일문제 관심도,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인지도 및 평가, 안보 및 반공에 대한 의견, 통일방법과 남북대화에 대한 견해, 북한관, 통일 과제와 전망, 1995년까지의 남북한 예상사태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수렴하자면 각계의 소리가 강력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증대되는 진보적 중산계층(Liberal Middle Class)을 중심으로 도시화, 산업화, 직업다양화, 사고의 흑백논리지양으로 규정되는 오늘날의 한국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기능별, 계층별, 집단별의 중추적 지도세력 혹은 여론선도세력의 통일에의 관점과 행동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건전한 미래지향의 통일지향의 통일정책과 2010년대의 새로운 통일안보관 확립과 젊은 세대에의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계속적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2. 연구내용

한국 사회의 여론선도세력 내지 기능별 중추계층의 국민에게서 통일에 관한 의식과 행동유형을 정책도출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8개의 분야에 49개 분항으로 된 설문서를 작성하였다.

8개의 분야는 사회경제배경, 통일문제 관심도,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인지도 및 평가, 안보 및 반공에 대한 의견, 통일방법과 남북대화에 대한 견해, 북한관, 통일 과제와 전망, 1995년까지의 남북한 예상사태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생활수준

- 1. 아주 못사는 편
- 2. 못사는 편
- 3. 중류
- 4. 잘사는 편
- 5. 아주 잘사는 편

5. 직 업

- 1. 농·어업
- 2. 공무원
- 3. 군인
- 4. 정치인
- 5. 기업경영인 (관리직 포함)
- 6. 전문직업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7. 언론인
- 8. 교육자
- 9. 학생회 간부
- 10. 노조 간부
- 11. 예, 재능인
- 12. 종교인
- 13. 사회단체 임직원
- 14. 기타 (연구원)

6. 출신지역

- 1. 서 울
- 2. 경 기
- 3. 강 원
- 4. 충 청
- 5. 전 라
- 6. 경 상
- 7. 제 주
- 8. 이 북

7.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이산가족 결합
- 2. 민족 동질성 회복
- 3. 민족의 번영과 발전
- 4. 전쟁 공포로부터 해방
- 5. 민족통합국가의 성취

8. 귀하는 평소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통일문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2. 통일이 되면 현재보다 오히려 사정이 나빠질 것이다.
 3. 구태여 통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통일은 하는 것이 더 좋다.
 5.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9.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상체제의 대립
 2. 미·소·중·일의 이해관계 대립
 3. 북한지도자의 무성의
 4. 한국지도자의 무성의
 5. 남북한 상호불신
 6. 남북한의 국내정치 불안
 7.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화
10.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의 이념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산주의 체제이어야 한다.
 2. 자본주의 체제이어야 한다.
 3.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이어야 한다.
 4.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이어야 한다.
 5. 새로운 이념의 체제이어야 한다.
11. 남북통일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1. 절대로 불가능하다.
 2. 매우 어려울 것이다.

- 3. 조금 어려울 것이다.
- 4.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5.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12. 남북한 중 어느 쪽이 통일을 위해 더 적극적이라 보십니까?

- 1. 한 국
- 2. 북 한
- 3. 양쪽 모두 적극적
- 4. 양쪽 모두 소극적

13. 우리 정부가 내놓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82년 1.22)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안다.
- 2. 대체로 안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모른다.
- 5. 전혀 모른다.

14. 우리 정부가 내놓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대로가 좋다.
- 2. 통일과 평화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
- 3.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해야 한다.
- 4. 다른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 15. 북한은 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현 대한민국 정권이 퇴진하고 반공정책을 포기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하에서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같은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처음 듣는 소리다.
2. 선전차원의 제의이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3. 전제조건이 있어 거부해야 한다.
4. 일부 수정해서 수락해야 한다.
5. 전적으로 타당한 제의이다.

16. 현재 정부의 통일대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매우 좋게 생각한다.
2. 비교적 좋게 생각한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5.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17.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호혜 평등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2. 군사분쟁 등을 대화로 해결
3. 상대방체제 인정과 내정 불간섭
4. 휴전체제 유지와 군사경쟁 중지
5. 상호 교류와 협력통한 사회개방
6. 통일시까지 각기 체결한 국제조약 존중
7. 서울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18. 금후 우리의 통일방안, 통일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후 결의형식으로 확정해야 한다.
 2. 각계 각층의 의견을 민간 협의체에서 수렴, 국회에서 결의한다.
 3. 행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 국회의 동의로 확정한다.
 4. 민간, 국회, 행정부의 3자 통합기구에서 심의, 확정한다.
 5. 행정부 주도로 자체 보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9.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높다.
 2. 약간 높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낮다.
 5. 아주 낮다.
20. 한국의 당면 위협요인으로 다음중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
1. 북한의 위협
 2. 경제적 불안정
 3. 내부 정치 모순
 4. 강대국의 정치, 경제압력
 5. 가치관 혼란
21. 현 단계에서 미군의 한국주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남침억제를 위해 미군주둔은 계속되어야 한다.
 2. 통일에 방해가 되니 당장 철수되어야 한다.
 3.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4. 아무래도 무방하다.
22. 6.25 와 같은 전쟁이 재발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최전방에 참여하겠다.
2. 현재의 말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다.
3.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
4.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다.
5. 어느 체제하에서나 현재대로 살겠다.

√23. 만일에 북한이 남침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이 개전초기에는 고전할 것이나 결국에는 격퇴할 것이다.
2. 한국이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다.
3.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오히려 북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면전이 되므로 결국은 남북한 모두 승자도 패자도 없이 파괴될 것이다.

24.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론과 실제 모두 나쁘다.
2. 이론은 좋으나 실제가 나쁘다.
3. 이론은 나쁘나 실제는 좋다.
4. 이론과 실제가 다 좋다.
5. 잘 모르겠다.

25. 전체적으로 볼 때 다음중 어느 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1. 자유민주주의 제도
2. 공산사회주의 제도
3. 혼합절충체제
4. 별 차이가 없다.

26. 금년에 개최될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적으로 옳다.
2. 일리가 있다.
3. 별 염려가 안된다.
4. 전혀 옳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27. 다음 중 북한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파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정부 실무자의 강연
2. 칸 바스와 레닌의 저서 등 원전
3. 북한 귀순자의 강연
4. 공산권 연구자나 교수의 강연 및 저서
5. 신문이나 언론매체의 보도
6. 북한의 방송이나 간행물
7. 기 타 ()

28.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
2. 무력통일
3. 강대국 중재에 의한 중립화 통일
4.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5. 연방정부수립에 의한 통일

29.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까?

1. 남북한 최고 책임자 회담

5. 아직도 개방, 대화의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33. 한국의 야당과 북한 노동당의 직접적인 통일대화회담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야당이 통일에 더 적극적이므로 찬성
2. 정부차원의 회담에 도움이 되니 찬성
3. 남북대화 창구 단일화에 혼선을 초래하니 반대
4. 북한의 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
5. 모르겠다.

34. 현재 대학가에서 주장되고 있는 “남북학생회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등의 통일구호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게 생각한다.
2. 비교적 좋게 생각한다.
3.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4.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5. 모르겠다.

35. 현재 북한사회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빈곤한 폐쇄사회
2. 국방력과 경제개발에 힘쓰는 개발도상국
3. 경제적 여유가 다소 있는 인민복지를 고려하는 중진국
4. 경제적으로 상위권의 발전된 선진공업사회
5. 잘 모르겠다.

36. 북한에 관한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1. 신문
2. 텔레비전, 라디오
3. 서적
4. 통일 안보교육
5. 친지, 친구
6. 기타 ()

2.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 개별적 인사 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가하는 정치회담
3.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스포츠회담, 국회회담 등 다각적인 회담
4. 미국, 소련, 중공 등 제 3자가 참가하는 다국적 회담
5. 기타 ()

30.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 그 동안의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1. 아주 많이 기여했다.
2. 어느 정도 기여했다.
3.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4.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31. 각계의 통일문제 논의에 대해 어떤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인제 어디서나 완전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2. 국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가 개방되어야 한다.
3. 통일논의는 질제 혹은 규제되어야 한다.
4. 관심밖의 일이다.
5. 기타 ()

32. 북한이 실질적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북한의 무력 혁명노선에 어긋나므로
2. 북한체제의 변화 위협성 때문에
3.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 정통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 대화를 하면 한국의 개방사회 우위성만 입증되기 때문에

41. 김일성이 죽은 후에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무력남침이 있을 것이다.
2. 상호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3. 현재대로 유지될 것이다.
4. 점진적인 교류로 관계가 나아질 것이다.
5. 남북한 관계개선이 급진전될 것이다.

42.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적 과제로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1. 미·일·중·소의 남북한 교차승인
2. 미·일 등 우방국과의 유대강화
3. 중·소와의 관계개선
4. 제3세계의 협력
5. 유엔의 협력

43.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국내적 과제로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1. 국방력 강화
2. 민주주의 확립
3. 경제발전
4. 복지사회 건설
5.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 강화
6. 기타 ()

44. 현 남북관계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37. 신문, 책, 정부발표 등에서 들어온 북한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습니까?
 - 1. 전혀 믿지 않는다.
 - 2. 거의 믿지 않는다.
 - 3. 그저 그렇다.
 - 4. 어느 정도 믿는다.
 - 5. 대부분 믿는다.
- 38. 현 시점에 있어 북한동포를 만난다면 한국사회의 상대적 우위성을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 1. 아주 자신 있음.
 - 2. 약간 자신 있음.
 - 3. 만나서 대화해봐야 알겠다.
 - 4. 별로 자신 없음.
 - 5. 남북한 우위성 설명자체가 의미없다.
- 39. 북한공산체제 중 우리의 이익을 위해 본받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조직력과 단결력
 - 2. 자주성과 주체성
 - 3. 인내와 내핍생활
 - 4. 균등한 소득분배
 - 5. 본받을 것이 없다.
- 40. 북한동포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입니까?
 - 1.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대할 것이다.
 - 2. 외국인같은 기분으로 대할 것이다.
 - 3. 관심밖의 사람들로 볼 것이다.
 - 4. 경계해야 할 사람들로 대할 것이다.
 - 5.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할 것이다.

1.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긴장완화

2. 비정치분야부터 해결

3. 정치군사분야부터 해결

4. 모든 분야를 통털어서 해결

45. 우리나라의 통일 안보교육에서 더욱 힘써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북한위협 강조

2. 북한실정 소개

3. 대내 반체제 위협 강조

4. 정부 통일정책 해설

5. 남북 통일정책 비교 해설

6. 국민의 통일의식 고취

7. 기타 ()

46. 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 인구비례에 의해 경기 종목을 분할, 개최한다.

3. 소수종목만을 북한에서 개최한다.

4. 성공적 개최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

5. 공동개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47. 북한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군사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략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군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부터 필요하다.

3. 남북간에 관계개선을 위해 조만간 군사회담도 해야 한다.

4.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5. 잘 모르겠다.

48. 금후 1995년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각각 어떤 사태발생이
예상되는지 그 내용과 시기를 생각나시는대로 명기해 주십시오.

예>

예상사태

시 기

1. 올림픽 개최

1988. 9.

2.

3.

<한 국>

예상사태

시 기

1.

2.

3.

4.

5.

<북 한>

예상사태

시 기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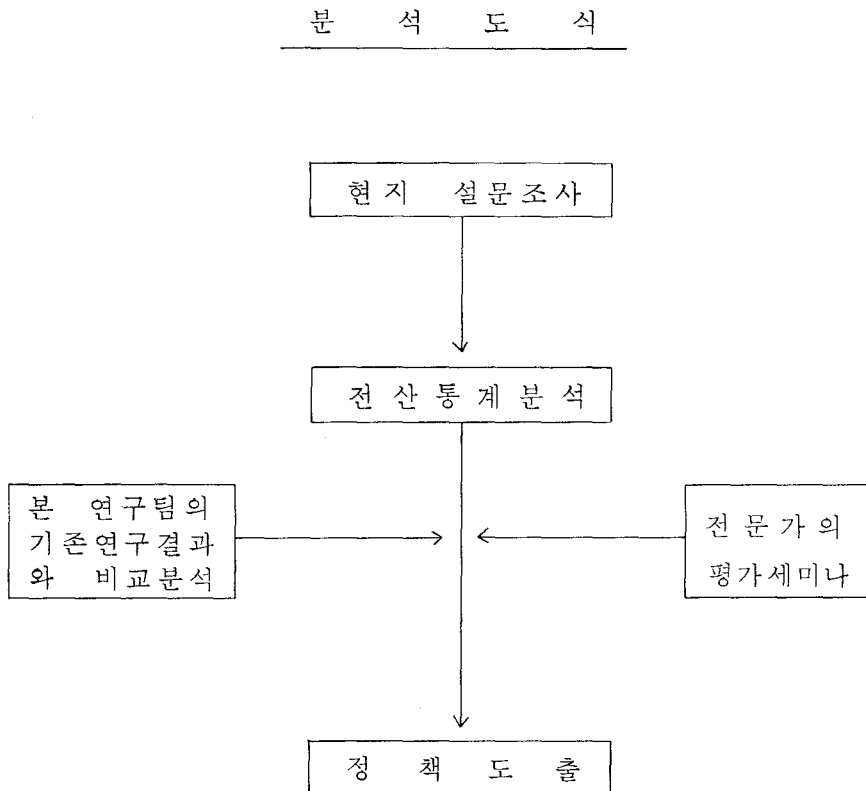
4.

5.

3. 분석방법

설문서는 전국단위로 각 기능별, 집단별의 여론선도계층 3,000명을 체계적으로 그러나 유의표출 (Purposive Sampling)로 선정, 이들에게 설문서를 배포 기재케 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서는 전산통계분석과장을 거쳐 본 연구팀의 기존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면서 연구토론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 직능별 분류와 표본현황 ⊗⊗

1. 정 치

(1) 공무원 (600)

- 안보분야
안기부 (50), 국방부 (현역 포함) (60),
통일원 (60), 통일원 (60), 경찰 (70)
- 비안보분야
그외 공무원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문교부, 체신부 각 40)
- 지방공무원
부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강원도청, 충남도청 각 40

(2) 정치인 (165)

- 사무국 요원
민정당 25, 평민당 15, 민주당 15, 공화당 10
- 국회의원
민정당 35, 평민당 20, 민주당 20, 공화당 10
- 재야단체 임원
민통련 산하 3개 단체 각 5

(3) 사 법 (65)

- 법원사무처 20
- 판 사 10
- 서울지방검찰청 15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

2. 경제 (360)

- 전경련회원 및 임원 40
- 기업체 간부 과장급 이상 각 20
삼성 현대
대우 금성
선경 쌍룡
포철 코오롱
효성 롯데
- 중소기업연합회 회원 및 임원 50
- 상공회의소 회원 및 임원 20
- 노총 간부 30
- 무역협회 20

3. 사회 문화

(1)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750)

1 차 : 6월 27-28일 500

2 차 : 6월 30일 250

(2) 언론인

- 4대 일간지의 기자 및 임원
동아 조선 중앙 한국 각 10

- 지방신문의 기자 및 임원
서울 한겨레 부산 대구매일 광주 강원 충청 경인 각 30

(3) 종교인 (130)

- 목 사
장로교 총회 50
- 신 부
서울대교구 40
- 승 려
대한조계종 35
- 천도교인
수운회관 15

(4) 예체능인 (50)

- 예총 임원 25
- 대한체육회 임원 25

(5) 대 학 (525)

- 사회과학분야교수와 보직교수 300
서울대
연 대
고 대
서강대
이 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

중앙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강원대 각 20

- 대학생 (학생회, 씨클 간부) 225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

중앙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강원대 각 15

(6) 연구소 (40)

- 국책 연구소

KDI의 연구원 및 임원 20

- 민간연구소

현대사회 연구소의 연구원 및 임원 20

(7) 농촌 지도자 (1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시의 인접 농촌지역의 면장, 이장, 농협단위 조합장, 새마을 지도자 각 5

第2章 分析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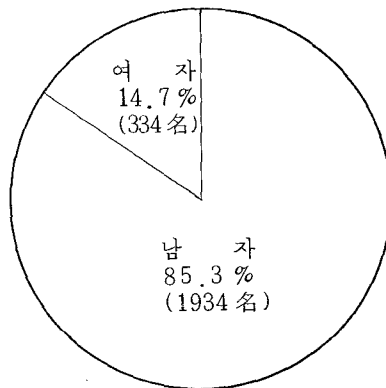
제 1 절 社會經濟的 背景

개 요

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행동은 상당한 정도까지 有形化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배경요소로서 성,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직업, 출신지역 등의 여섯가지 人口統計學的 요인들 (Demographic Factors) 을 들고 이것을 설문화시켰다.

② 분석결과 성별로는 남자가 85.3%로 다수인 가운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또 8학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7할 정도가 자신을 중류층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직업으로는 공무원, 출신지역으로는 慶尙出身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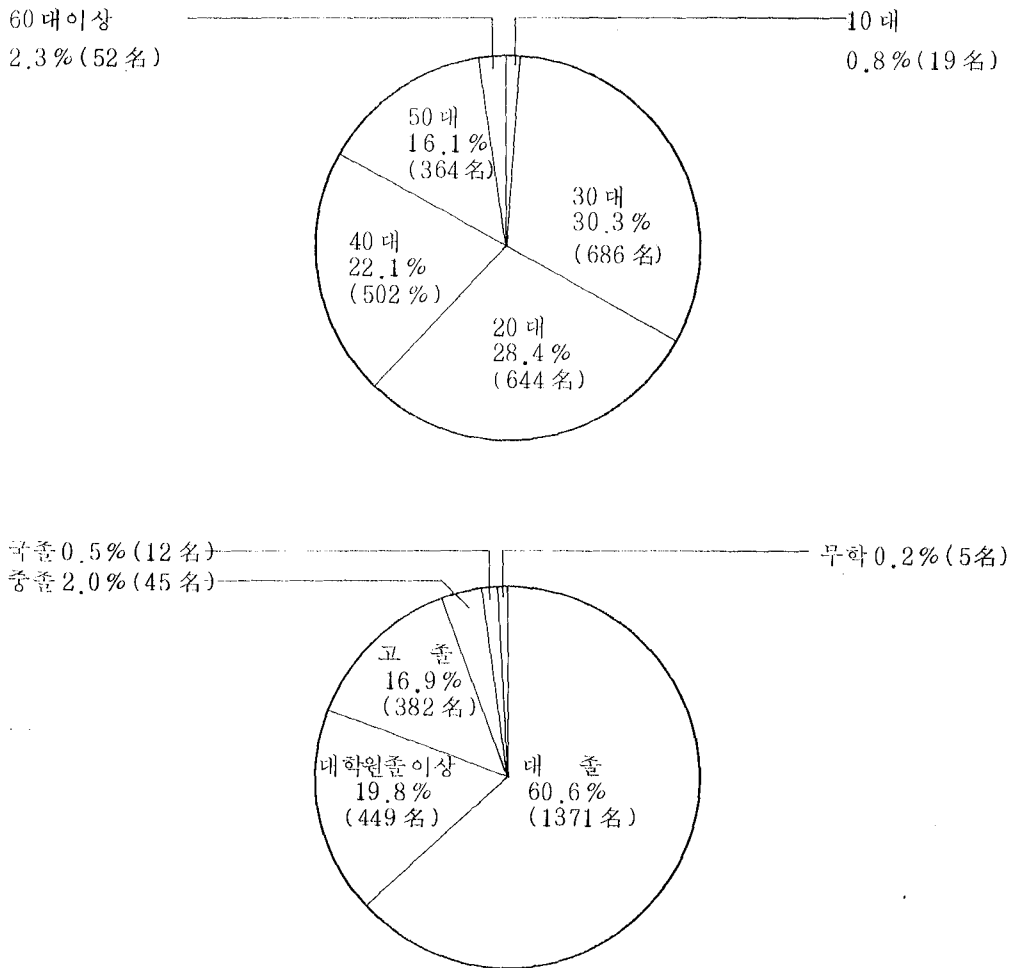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나라 여론선도 계층은 대학졸업 수준인 30대 남성을 주축으로 20대와 40대, 50대를 주변으로 각 기능분야에서 전위세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수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소지한 여론지도계층은 전체의 약 8할 정도 (80.4%)에 이르렀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졸출신이 6할정도 (6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졸 이상 (19.8%), 고졸 (16.9%), 중졸 (2.0%), 국졸 (0.5%), 무학 (0.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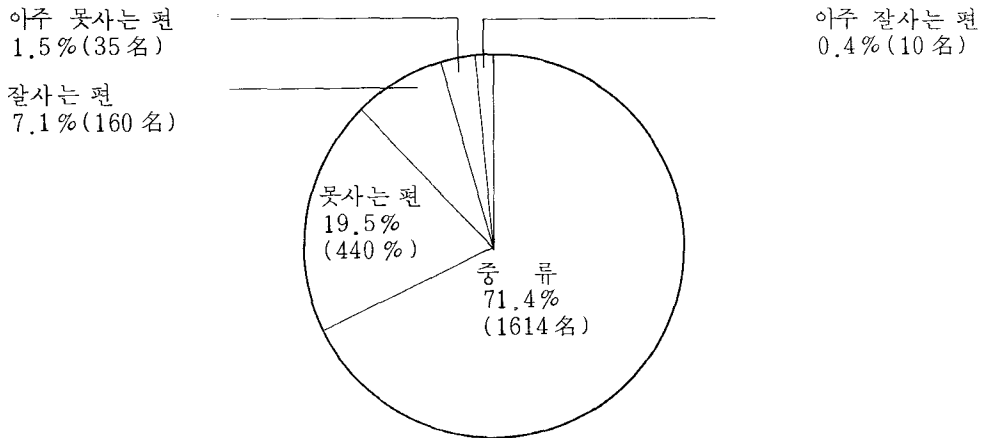
<표 1-3>



4. 생활수준

응답자의 생활수준인식을 살펴보면, 7 할 이상 (71.4%, 1,614 명) 의 응답자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류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못사는 편 (19.5%, 440 명), 잘사는 편 (7.1 %, 160 명), 아주 못사는 편 (1.5%, 35 명), 아주 잘사는 편 (0.4 %, 10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직능별 간부계층인 이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다.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묻는 이 질문은, 소득이나 직업의 지표를 통해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본 설문 의 조사대상자들은 중산층으로의 귀속의식을 대부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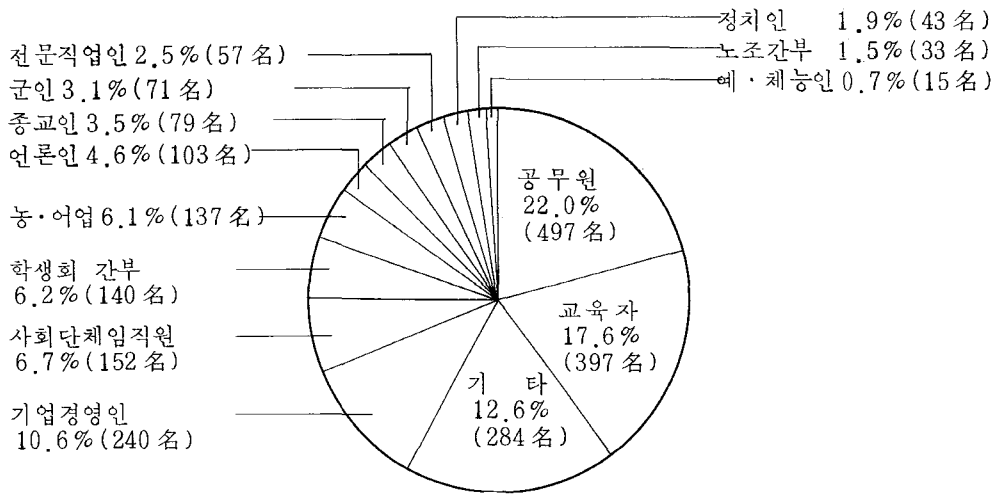
<표 1-4-1 > 가정경제상태 비교

(단위 : %)

| 년 도 | 구 분 | 아주 부유 | 약간 부유 | 보 통 | 약간 가난 | 아주 가난 |
|------|------------------|-------|-------|-------|-------|-------|
| 1977 | 대 학 생 (전 국) | 3.5 | 14.5 | 70.0 | 9.9 | 1.3 |
| 86 | 대 학 생 (전 국) | 1.15 | 10.76 | 56.08 | 24.18 | 7.3 |
| 78 | 고 교 생 (서울 전 역) | 2.5 | 12 | 64.5 | 19 | 2 |
| 86 | 고 교 생 (전 국) | 0.79 | 9.33 | 66.91 | 19.91 | 2.93 |
| 79 | 30 대 이 상 국 민 | 1.5 | 5.6 | 70.7 | 18.4 | 3.8 |
| 81 | 현 역 장 병 | 1 | 7 | 75 | 15 | 3 |
| 81 | 예 비 역 장 병 | 3 | 9 | 64 | 18 | 6 |
| 82 | 기 능 별 지 도 계 층 | 1.6 | 7.6 | 70.3 | 14.4 | 6.6 |
| 82 | 일 반 국 민 | 1.4 | 6.7 | 70.3 | 17.3 | 4.8 |
| 85 | 정 부 공 직 자 | 0.2 | 1.2 | 57.26 | 34.9 | 6.17 |
| 85 | 일 반 국 민 | 0.38 | 5.98 | 65.25 | 21.66 | 6.22 |
| 86 | 고 교 , 교 사 | 0.78 | 8.44 | 67.34 | 20.83 | 2.36 |
| 87 | 전 국 민 | 0.7 | 3.7 | 61.8 | 28.2 | 5.36 |
| 88 | 여 론 선 도 계 층 | 0.4 | 7.1 | 71.4 | 19.5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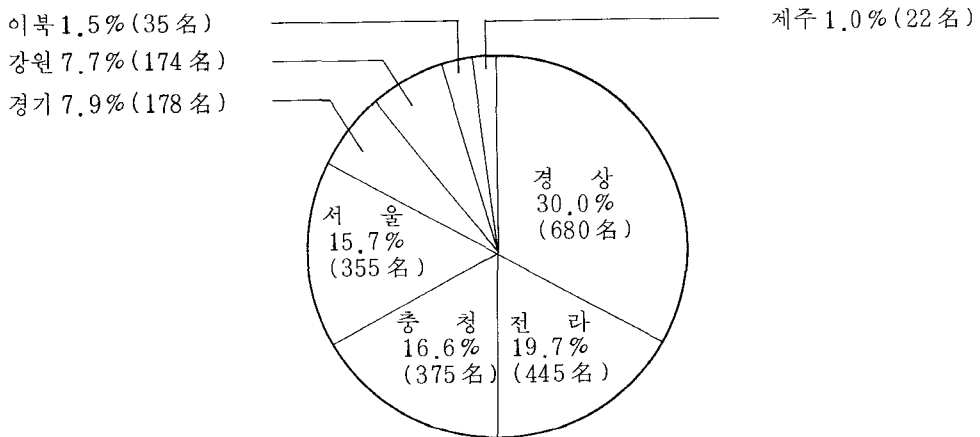
5. 직 업

공무원이 2할 정도 (22.0%, 49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자 (17.6%, 397명), 기업경영인 (10.6%, 240명), 사회단체 임직원 (6.7%, 152명), 학생회간부 (6.2%, 140명), 농·어업 (6.1%, 137명), 언론인 (4.6%, 103명), 종교인 (3.5%, 79명) 등의 순이다.



6. 출신지역

경상지역이 3할 (30.0%, 680명)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 (19.7%, 445명), 충청 (16.6%, 375명), 서울 (15.7%, 355명) 등의 순인데 이중 경상, 전라지역 출신을 합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반수정도 (49.7%)에 이른다. <표 1-6>



第2節 安保 및 反共에 대한 意見

개 요

①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아직도 그 어떤 체제보다도 선호하나, 共產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적대감이 서서히 희석되고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배타적 신념 또한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의 이탈세력은 混合折衷體制에 대한 선호층으로 흡수되는 추세에 있다.

② 共產主義 理論에 대해서는 심정적 동정을 하는 비율이 다소 있으나 공산주의 現實에 대해서는 약 9할 정도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및 공산이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강연이나 저서를 통해 접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③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戰爭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비율은 4할에 못미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戰爭再發 可能性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추세가 들어가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전쟁재발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④ 현 단계에서 美軍의 撤收는, 단계적 철수 내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의 약 9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미군의 철수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작전지휘권을 포함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⑤ 6.25와 같은 戰爭이 再發한다면 現職務에 충실하겠다는 응답자가 6할로 가장 많다. 다른 조사대상집단에 비해 이같은 응답이

두드러진 것은 여론선도계층이 자신의 현 직무에 중요성과 확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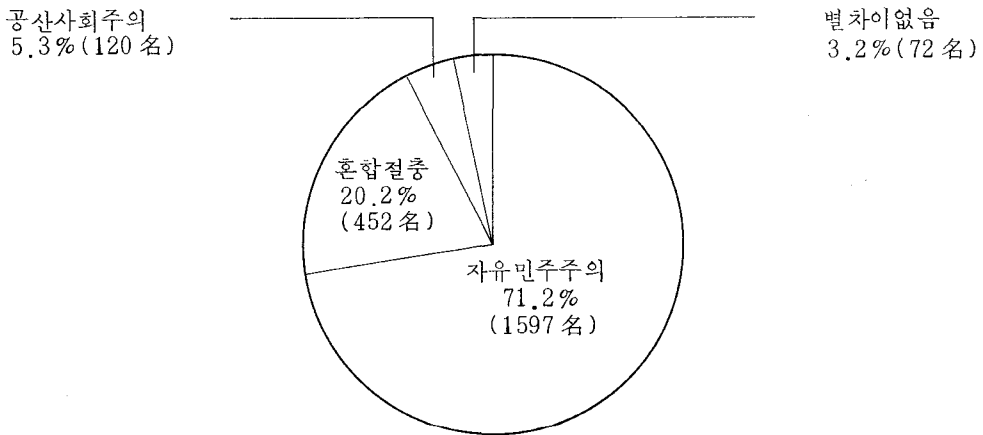
⑥ 内部政治矛盾과 價値觀의 혼란이 가장 큰 한국의 當面 威脅 要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強大國의 壓力이 당면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⑦ 북한이 만일 남침을 강행한다면 남북한 모두 승자·패자가 없는 전면전에 휩싸여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응답이 7할을 상회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같은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1. 體制選好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전체 응답자의 7할 이상 (71.2% , 1,597명) 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혼합절충체제가 약 2할 (20.2% , 452명) 그리고 공산사회주의체제 (5.3% , 120명) , 별 차이없음 (3.2% , 7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체 제 선 호



이 같은 응답은 1977년 이래의 의식구조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배타적 신념을 서서히 상실해가는 반면 공산사회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서서히 희석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이가 곧 공산사회체제에 대한 선호로 직결되진 않고 있지만, 혼합절충체제라는 중간적 응답이 급증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국민 및 젊은 세대의 체제이념 인식실태와 비교하면 10년전 70년대에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9할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5할로 격감되고 그대신 절충형 내지 새로운 이념, 체제를 선호하는 혁신적 성격을 띄고 있다. 반면 6.25 경험세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체제, 이념 선호도는 8할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지하나 20-40대를 주축으로 하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인 여론선도세력은 7할이 고전적 자본주의 자유민주체제를 선호하고 있어 우파보수적 국민성향과 광의의 혁신성향의 젊은 세대사이의 중간지대에 있는 진보적 중산계층(Liberal middle class)이 여론선도지도계층이 아닌가 한다.

<표 4-1-1>

체 제 선 호 비 교

(단위: %)

| 년 도 | 대 상 | 자 유 민 주 체 제 | 공 산 사 회 체 제 | 혼 결 체 제 | 합 충 체 제 | 차 이 없 음 | 생 각 적 없 음 | 무 응 답 |
|------|----------------|-------------------|-------------------|---------------|---------------|------------------|-----------------------|-------------|
| 1977 | 대 학 생 | 89.3 | 3.5 | | | | 7.1 | |
| 1986 | 대 학 생 | 87.33 | 8.33 | | | | | 3.85 |
| 1987 | 대 학 생 | 53.4 | 5.5 | 36.6 | | | 4.4 | |
| 1979 | 고 교 생 (서울) | 88.04 | 8.75 | | | | 3.2 | |
| 1986 | 고 교 생 (서울) | 97.08 | 2.47 | | | | | 0.43 |
| 1986 | 고 교 교 사 | 98.98 | 0.33 | | | | | 0.67 |
| 1987 | 국 민 | 80.9 | 1.0 | 13.8 | | 3.1 | | 1.2 |
| 1988 | 국 민 | 84.7 | 0.8 | 12.4 | | 2.1 | | |
| 1988 | 여 론 선 도 계 층 | 71.2 | 5.3 | 20.2 | | 3.2 | | |

한편 체제이념 선호도와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경향과 교차상관분석 (χ^2 Test)을 시도해 보면 북한사회를 빈곤폐쇄사회라고 응답할 수록 (85.9%)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로 보는 반면 북한을 중진국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 중 약 반수 (43.9%)는 공산사회주의체제를 우월한 체제라 생각한다. 또한 북한이 선진공업사회라 생각할수록 (40.0%)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우월한 체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빈곤폐쇄사회로 볼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중진국 또는 선진공업사회로 볼수록 공산사회주의 또는 혼합절충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과 연령과도 관련이 있어 고학력, 젊은 세대일수록 혼합 절충체제를 선호하고 북한을 현실적 시각으로 볼려는 경향이 있다.

또 북한남침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반면에, 한국에 불리한 상황 즉 한국이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승자·패자가 없는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여론선도계층은 이에 비해 자유민주주의체제 선호도는 다소 떨어지고 (55.4%, 68.9%), 공산사회주의나 혼합절충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다소 높다.

<표 4-1-2>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과 체제선호의 관계

| 선호 체제 북한사회에 관한 견해 | 자 유 민주주의 | 공 산 사회주의 | 혼 합 절충체제 | 별 차 이 없 다 | 합 계 |
|-------------------------|-------------|-------------|-------------|--------------|-------|
| 빈곤. 폐쇄사회 | 1065 | 14 | 148 | 13 | 1240 |
| | 85.9 | 1.1 | 11.9 | 1.0 | 56.4 |
| | 67.8 | 12.0 | 33.5 | 19.1 | |
| | 48.4 | .6 | 6.7 | .6 | |
| 개발도상국 | 342 | 17 | 188 | 30 | 578 |
| | 59.2 | 2.9 | 32.5 | 5.2 | 26.3 |
| | 21.8 | 14.5 | 42.5 | 44.1 | |
| | 15.5 | .8 | 8.5 | 1.4 | |
| 중진국 | 35 | 68 | 43 | 9 | 155 |
| | 22.6 | 43.9 | 27.7 | 5.8 | 7.0 |
| | 2.2 | 58.1 | 9.7 | 13.2 | |
| | 1.6 | 3.1 | 2.0 | .4 | |
| 선진공업사회 | 2 | 6 | 5 | 2 | 15 |
| | 13.3 | 40.0 | 33.3 | 13.3 | .7 |
| | .1 | 5.1 | 1.1 | 2.9 | |
| | .1 | .3 | .2 | .1 | |
| 모르겠다 | 126 | 11 | 58 | 14 | 210 |
| | 60.0 | 5.2 | 27.6 | 6.7 | 9.5 |
| | 8.0 | 9.4 | 13.1 | 20.6 | |
| | 5.7 | .5 | 2.6 | .6 | |
| 합 계 | 1571 | 117 | 442 | 68 | 2200 |
| | 71.4 | 5.3 | 20.1 | 3.1 | 100.0 |

<표 4-1-3> 당면 위협요인과 체제선호와의 관계

| 체제우위도 당면 위협요인 | 자 유 민주주의 | 공 산 사회주의 | 혼합 절충 | 별 차이없다 | 합 계 |
|-------------------|-------------|-------------|-------|--------|-------|
| 북한의 위협 | 271 | 6 | 19 | 2 | 298 |
| | 90.9 | 2.0 | 6.4 | .7 | 13.4 |
| | 17.1 | 5.2 | 4.2 | 2.8 | |
| | 12.2 | .3 | .9 | .1 | |
| 경제적 불안정 | 129 | 6 | 25 | 3 | 163 |
| | 79.1 | 3.7 | 15.3 | 1.8 | 7.3 |
| | 8.1 | 5.2 | 5.6 | 4.2 | |
| | 5.8 | .3 | 1.1 | .1 | |
| 내부 정치모순 | 581 | 47 | 230 | 27 | 886 |
| | 65.6 | 5.3 | 26.0 | 3.0 | 39.8 |
| | 36.6 | 40.5 | 51.1 | 37.5 | |
| | 26.1 | 2.1 | 10.3 | 1.2 | |
| 강대국의 정치 경제적 압력 | 232 | 55 | 107 | 31 | 426 |
| | 54.5 | 12.9 | 25.1 | 7.3 | 19.1 |
| | 14.6 | 47.4 | 23.8 | 43.1 | |
| | 10.4 | 2.5 | 4.8 | 1.4 | |
| 가치관 혼란 | 374 | 2 | 69 | 9 | 454 |
| | 82.4 | .4 | 15.2 | 2.0 | 20.4 |
| | 23.6 | 1.7 | 15.3 | 12.5 | |
| | 16.8 | .1 | 3.1 | .4 | |
| 합 계 | 1588 | 116 | 450 | 72 | 2228 |
| | 71.3 | 5.2 | 20.2 | 3.2 | 100.0 |

< 표 4-1-5 > 적극적 통일추구세력 인식과 체제선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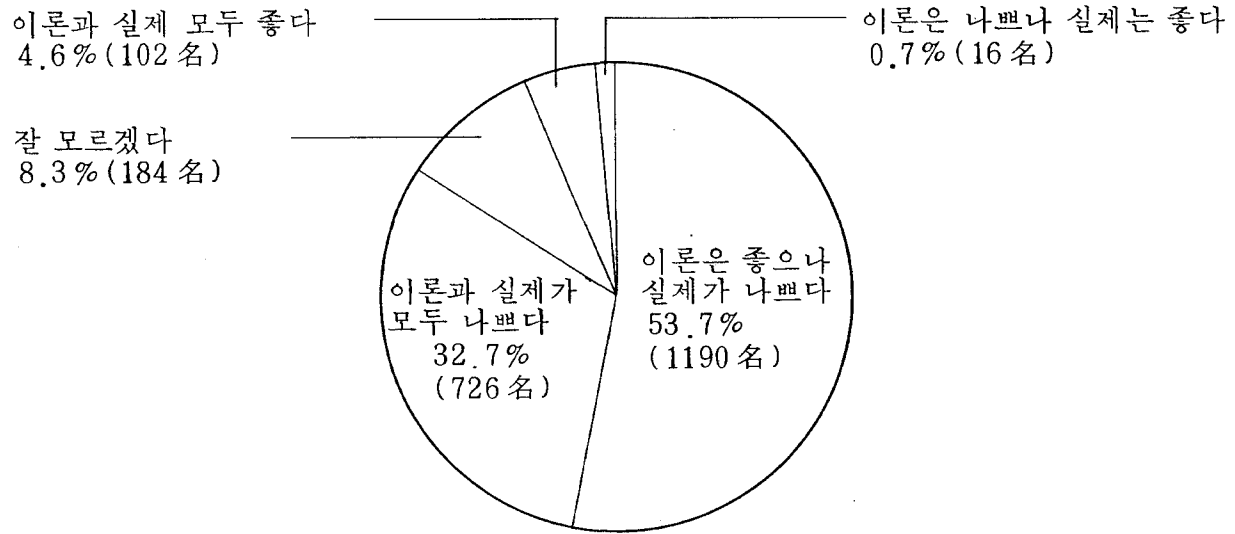
| 체제의 우월성 적극적 통일추구세력 | 자유민주주의 제 도 | 공산사회주의 제 도 | 혼합 절충 체 제 | 별 차이가 없 다 | 합 계 |
|-----------------------------|------------------|------------------|--------------------|--------------------|--------|
| 한 국 | 717 | 17 | 72 | 10 | 816 |
| | 87.9 | 2.1 | 8.8 | 1.2 | 36.5 |
| | 45.0 | 14.4 | 16.0 | 13.9 | |
| | 32.1 | .8 | 3.2 | .4 | |
| 북 한 | 76 | 85 | 61 | 14 | 236 |
| | 32.2 | 36.0 | 25.8 | 5.9 | 10.6 |
| | 4.8 | 72.0 | 13.6 | 19.4 | |
| | 3.4 | 3.8 | 2.7 | .6 | |
| 양쪽 모두 적극적 | 45 | 2 | 16 | 4 | 67 |
| | 67.2 | 3.0 | 23.9 | 6.0 | 3.0 |
| | 2.8 | 1.7 | 3.6 | 5.6 | |
| | 2.0 | .1 | .7 | .2 | |
| 양쪽 모두 소극적 | 755 | 14 | 300 | 44 | 1115 |
| | 67.7 | 1.3 | 26.9 | 3.9 | 49.9 |
| | 47.4 | 11.9 | 66.8 | 61.1 | |
| | 33.8 | .6 | 13.4 | 2.0 | |
| 합 계 | 1594 | 118 | 449 | 72 | 2235 |
| | 71.3 | 5.3 | 20.1 | 3.2 | 100.0 |

이같은 성향을 적극적 통일추구세력에 대한 평가와 연결시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적극적 통일추구세력이 누구이든간에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을 적극적 통일추구세력으로 인식한 여론주도세력일수록 공산사회주의제도를 우월하게 보는 입장이 (36.0%)이며,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선호하는 비율은 (32.2%) 약간 낮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을 적극적 통일추구세력이라고 파악한 사람들 중 제일 많은 비율이 공산사회주의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중 32.2%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음은 공산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2.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에 대한 認識

공산주의이론과 실제에 관해서는, 이론은 좋으나 실제가 나쁘다는 입장이 전체의 과반수 (53.7%)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론과 실제가 모두 나쁘다는 입장 (32.7%, 726명), 잘 모르겠다는 입장 (8.3%, 18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9할 가까이 (86.4%)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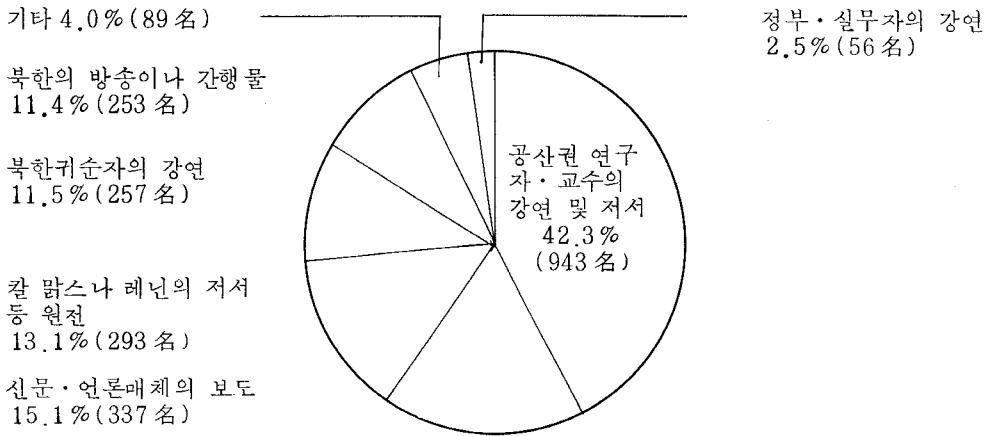
<表 4 - 2 > 共產主義理論과 實際에 대한 認識



3. 北韓 및 共產主義 理念 파악 경로

북한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파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관해서는 공산권 연구자나 교수의 강연 및 저서가 4할 이상 (42.3%) 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문·언론매체의 보도 (15.1%), 칼막스나 레닌의 저서등 원전 (13.1%), 북한 귀순자의 강연 (11.5%), 북한의 방송이나 간행물 (11.4%), 정부실무자의 강연 (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공산권 연구자나 교수의 강연 및 저서 그리고 신문이나 언론매체의 보도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6할로서 북한 및 공산주의 이념파악에 중요매체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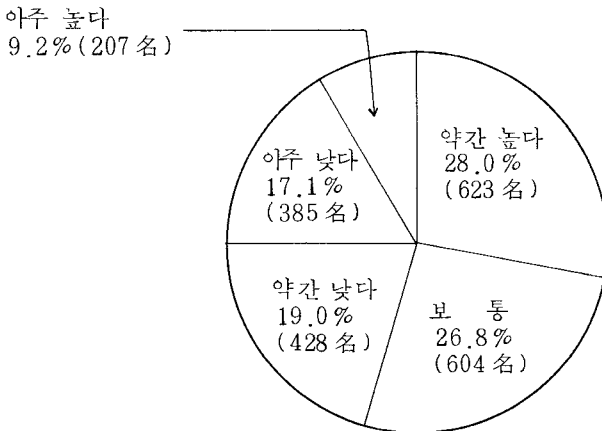
<表 4 - 3> 北韓 및 共產主義 理念 파악 경로



4. 韓半島의 戰爭可能性

현 시점에서서의 한반도의 전쟁발발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때, 약간 높다는 입장이 약 3할 가까이 (28.2%, 632명) 나타나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보통 정도 (26.8%, 604명), 약간 낮다 (19.0%, 428명), 아주 낮다 (17.1%, 385명), 아주 높다 (9.2%, 20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쟁발발가능성은 4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는 3할이상 4할을 육박하여 금후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약간 높은 편이다.

<表 4 - 4> 韓半島의 戰爭可能性



이같은 여론선도계층의 응답은 1986년 이래의 여러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전쟁가능성을 가장 희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987년 이래 걸어진 국제관계상의 “신데탕트” 무드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인위적 위기의식 고취에 대한 하나의 반사작용으로도 해석된다.

< 표 4-4-1 > 국민의 한반도 전쟁가능성 비교

(단위 : %)

| 전쟁 가능성 \ 대상 (연도) | 국 민 ('87) | 고 교 교 사 ('86) | 고 교 생 ('86) | 대 학 생 ('87) | 여 론 선 도 계 층 ('88) |
|------------------------|------------------|----------------------------|-----------------------|-----------------------|--------------------------------------|
| 아주 높다 | 9.4 | 14.52 | 38.31 | 14.75 | 9.2 |
| 약간 높다 | 35.6 | 41.89 | 40.35 | 33.82 | 28.0 |
| 보통 정도 | 25.8 | 25.22 | 8.54 | 17.51 | 26.8 |
| 약간 낮다 | 16.6 | 9.9 | 6.5 | 14.69 | 19.0 |
| 아주 낮다 | 10.6 | 6.41 | 5.52 | 17.58 | 17.1 |

이같은 결과를 직업별로 보면 농촌지도자 (62%),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60.8%), 공무원 (49%)의 경우가 약간 높다 또는 아주 높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생간부 (59.5%), 언론인 (53.5%), 연구소 (48.8%), 교수 (44.5%)의 경우에는 약간 낮다. 또는 아주 낮다는 대답이 많았다.

따라서 고학력자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 표 4-4-2 > 직업과 전쟁가능성의 관계

| 전 쟁 가 능 성 작 업 | 전 쟁 가 능 성 | | | | | |
|---------------------|-----------|-------|------|-------|-------|------|
| | 아주 높음 | 약간 높음 | 보 통 | 약간 낮음 | 아주 낮음 | 합 계 |
| 공 무 원 | 49 | 169 | 124 | 56 | 47 | 445 |
| | 11.0 | 38.0 | 27.9 | 12.6 | 10.6 | 19.7 |
| | 23.7 | 26.7 | 20.5 | 13.1 | 12.2 | |
| | 2.2 | 7.5 | 5.5 | 2.5 | 2.1 | |
| 정 치 인 | 5 | 11 | 24 | 20 | 29 | 89 |
| | 5.6 | 12.4 | 27.0 | 22.5 | 32.6 | 3.9 |
| | 2.4 | 1.7 | 4.0 | 4.7 | 7.5 | |
| | .2 | .5 | 1.1 | .9 | 1.3 | |
| 법 조 인 | 0 | 7 | 9 | 1 | 3 | 20 |
| | 0 | 35.0 | 45.0 | 5.0 | 15.0 | .9 |
| | 0 | 1.1 | 1.5 | .2 | .8 | |
| | 0 | .3 | .4 | .0 | .1 | |
| 기 업 체 간 부 | 11 | 53 | 65 | 43 | 33 | 205 |
| | 5.4 | 25.9 | 31.7 | 21.0 | 16.1 | 9.1 |
| | 5.3 | 8.4 | 10.8 | 10.0 | 8.6 | |
| | .5 | 2.3 | 2.9 | 1.9 | 1.5 | |
| 경 제 노 동 단 체 | 6 | 22 | 26 | 25 | 19 | 98 |
| | 6.1 | 22.4 | 26.5 | 25.5 | 19.4 | 4.3 |
| | 2.9 | 3.5 | 4.3 | 5.8 | 4.9 | |
| | .3 | 1.0 | 1.2 | 1.1 | .8 | |
| 언 론 인 | 2 | 22 | 23 | 33 | 21 | 101 |
| | 2.0 | 21.8 | 22.8 | 32.7 | 20.8 | 4.5 |
| | 1.0 | 3.5 | 3.8 | 7.7 | 5.5 | |
| | .0 | 1.0 | 1.0 | 1.5 | .9 | |
| 종 교 인 | 13 | 27 | 24 | 9 | 10 | 83 |
| | 15.7 | 32.5 | 28.9 | 10.8 | 12.0 | 3.7 |
| | 6.3 | 4.3 | 4.0 | 2.1 | 2.6 | |
| | .6 | 1.2 | 1.1 | .4 | .4 | |

| 전쟁가능성 직업 | 아주 높음 | 약간 높음 | 보 통 | 약간 낮음 | 아주 낮음 | 합 계 |
|----------------|---------------------------|----------------------------|----------------------------|---------------------------|---------------------------|---------------|
| 예 체 능 인 | 6 13.0 2.9 .3 | 15 32.6 2.4 .7 | 12 26.1 2.0 .5 | 6 13.0 1.4 .3 | 7 15.2 1.8 .3 | 46 2.0 |
| 대 학 교 수 | 4 1.8 1.9 .2 | 41 18.1 6.5 1.8 | 81 35.7 13.4 3.6 | 57 25.1 13.3 2.5 | 44 19.4 11.4 2.0 | 227 10.1 |
| 학 생 회 각 부 | 30 14.3 14.5 1.3 | 29 13.8 4.6 1.3 | 26 12.4 4.3 1.2 | 47 22.4 11.0 2.1 | 78 37.1 20.3 3.5 | 210 9.3 |
| 연 구 소 | 0 0 0 0 | 11 26.8 1.7 .5 | 10 24.4 1.7 .4 | 10 24.4 2.3 .4 | 10 24.4 2.6 .4 | 41 1.8 |
| 농 촌 지도자 | 19 21.8 9.2 .8 | 35 40.2 5.5 1.6 | 19 21.8 3.1 .8 | 8 9.2 1.9 .4 | 6 6.9 1.6 .3 | 87 3.9 |
| 기 타 | 31 7.2 15.0 1.4 | 114 26.6 18.0 5.1 | 128 29.9 21.2 5.7 | 93 21.7 21.7 4.1 | 62 14.5 16.1 2.7 | 428 19.0 |
| 평 통 자 문 위 원 | 31 17.6 15.0 1.4 | 76 43.2 12.0 3.4 | 33 18.8 5.5 1.5 | 20 11.4 4.7 .9 | 16 9.1 4.2 .7 | 176 7.8 |
| 합 계 | 207 9.2 | 632 28.0 | 604 26.8 | 428 19.0 | 385 17.1 | 2256 100.0 |

또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전쟁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거의 비슷한 수준(37.2%, 36.1%)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쟁가능성을 높게 보는 정도가 커지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쟁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의식성향이 낮아지고 있다.(20대 45.6%, 60대 18%) 따라서 6.25 경험세대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쟁발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쟁발발가능성 인식도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경우는 국졸(63.7%), 중졸(57.8%), 고졸(53.2%), 대졸(35.7%), 대학원졸(25.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쟁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이 나타난다.

반대로 전쟁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약간, 아주 낮음)에 대해선 국졸(18.2%), 중졸(17.8%), 고졸(24%), 대졸(38.3%), 대학원졸(41.7%)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쟁가능성을 낮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4-3 > 연령에 따른 한국의 전쟁가능성 인식도

| 전쟁가능성 연령 | 아주 높음 | 약간 높음 | 보 통 | 약간 낮음 | 아주 낮음 | 합 계 |
|-------------|-------|-------|------|-------|-------|-------|
| 10 대 | 1 | 7 | 4 | 5 | 1 | 18 |
| | 5.6 | 38.9 | 22.2 | 27.8 | 5.6 | .8 |
| | .5 | 1.1 | .7 | 1.2 | .3 | |
| | .0 | .3 | .2 | .2 | .0 | |
| 20 대 | 60 | 141 | 147 | 135 | 157 | 640 |
| | 9.4 | 22.0 | 23.0 | 21.1 | 24.5 | 28.4 |
| | 29.0 | 22.3 | 24.3 | 31.5 | 40.8 | |
| | 2.7 | 6.3 | 6.5 | 6.0 | 7.8 | |
| 30 대 | 44 | 190 | 201 | 140 | 111 | 686 |
| | 6.4 | 27.7 | 29.3 | 20.4 | 16.2 | 30.4 |
| | 21.3 | 30.1 | 33.3 | 32.7 | 28.8 | |
| | 2.0 | 8.4 | 8.9 | 6.2 | 4.9 | |
| 40 대 | 47 | 161 | 134 | 93 | 66 | 501 |
| | 9.4 | 32.1 | 26.7 | 18.6 | 13.2 | 22.2 |
| | 22.7 | 25.5 | 22.2 | 21.7 | 17.1 | |
| | 2.1 | 7.1 | 5.9 | 4.1 | 2.9 | |
| 50 대 | 48 | 112 | 104 | 50 | 46 | 360 |
| | 13.3 | 31.1 | 28.9 | 13.9 | 12.8 | 16.0 |
| | 23.2 | 17.7 | 17.2 | 11.7 | 11.9 | |
| | 2.1 | 5.0 | 4.6 | 2.2 | 2.0 | |
| 60 대 이상 | 7 | 20 | 14 | 5 | 4 | 50 |
| | 14.0 | 40.0 | 28.0 | 10.0 | 8.0 | 2.2 |
| | 3.4 | 3.2 | 2.3 | 1.2 | 1.0 | |
| | .3 | .9 | .6 | .2 | .2 | |
| 합 계 | 207 | 631 | 604 | 428 | 385 | 2255 |
| | 9.2 | 28.0 | 26.8 | 19.0 | 17.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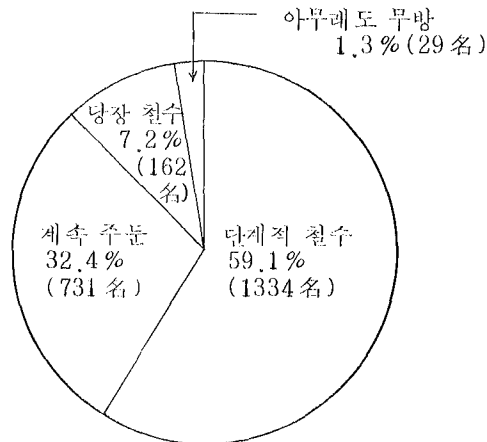
<표 4-4-4> 교육수준에 따른 전쟁가능성 인식도

|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교육수준 | 아주 높음 | 약간 높음 | 보 통 | 약간 낮다 | 아주 낮다 | 합 계 |
|------------------------|-------|-------|------|-------|-------|-------|
| 무 학 | 0 | 0 | 3 | 1 | 1 | 5 |
| | 0 | 0 | 60.0 | 20.0 | 20.0 | .2 |
| | 0 | 0 | .5 | .2 | .3 | |
| | 0 | 0 | .1 | .0 | .0 | |
| 국 졸 | 3 | 4 | 2 | 2 | 0 | 11 |
| | 27.3 | 36.4 | 18.2 | 18.2 | 0 | .5 |
| | 1.4 | .6 | .3 | .5 | 0 | |
| | .1 | .2 | .1 | .1 | 0 | |
| 중 졸 | 12 | 14 | 11 | 4 | 4 | 45 |
| | 26.7 | 31.1 | 24.4 | 8.9 | 8.9 | 2.0 |
| | 5.8 | 2.2 | 1.8 | .9 | 1.0 | |
| | .5 | .6 | .5 | .2 | .2 | |
| 고 졸 | 57 | 145 | 87 | 49 | 42 | 380 |
| | 15.0 | 38.2 | 22.9 | 12.9 | 11.1 | 16.9 |
| | 27.5 | 23.0 | 14.4 | 11.5 | 10.9 | |
| | 2.5 | 6.4 | 3.9 | 2.2 | 1.9 | |
| 대 졸 | 116 | 371 | 354 | 270 | 252 | 1363 |
| | 8.5 | 27.2 | 26.0 | 19.8 | 18.5 | 60.5 |
| | 56.0 | 58.9 | 58.7 | 63.2 | 65.5 | |
| | 5.2 | 16.5 | 15.7 | 12.0 | 11.2 | |
| 대학원졸 | 19 | 96 | 146 | 101 | 86 | 448 |
| | 4.2 | 21.4 | 32.6 | 22.5 | 19.2 | 19.9 |
| | 9.2 | 15.2 | 24.2 | 23.7 | 22.3 | |
| | .8 | 4.3 | 6.5 | 4.5 | 3.8 | |
| 합 계 | 207 | 630 | 603 | 427 | 385 | 2252 |
| | 9.2 | 28.0 | 26.8 | 19.0 | 17.1 | 100.0 |

5. 美軍撤收에 대한 見解

현 단계에서의 미군의 한국주둔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의 약 6할정도(59.1%)도 과반수를 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남침억제를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32.4%), 봉일에 방해가 되니 당장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7.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보적 입장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 내지는 계속 주둔을 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약 9할이상(91.5%)으로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5> 美軍撤收에 대한 見解



미군철수에 대한 여론 선도계층의 이같은 견해는 1984년, 1987년 및 1988년의 여타 조사대상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 해당한다. 특히 1987년의 대학생들 중 3.3%만이 “계속 주둔”을 원한데 비해, 금번 조사의 여론선도계층 중 32.4%가 “계속 주둔”

을 희망한 것은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 표 4-5-1 > 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군사력동등 시까지연기 | 군사력우세 시까지연기 | 계속 주둔 | 당장 철수 |
|------|---------|----------------|----------------|-------|-------|
| 1986 | 고 교 생 | 30.79 | 49.25 | 16.06 | 2.87 |
| 1986 | 고 교 교 사 | 24.66 | 52.02 | 20.27 | 0.78 |
| 1986 | 대 학 생 | 43.21 | 32.1 | 7.47 | 13.45 |
| 1987 | 대 학 생 | 46.3 | 29.9 | 3.3 | 19.8 |
| 1987 | 국 민 | 33.5 | 42.3 | 16.3 | 5.5 |
| 1988 | 국 민 | 25.9 | 29.5 | 26.1 | 12.1 |
| 1988 | 여론선도계층 | 59.1 | | 32.4 | 7.2 |

이같은 반응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남성의 경우 단계적 철수(57.5%), 계속 주둔(34.0%) 순으로 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단계적 철수(68.7%), 계속 주둔(23.2%), 즉각 철수(7.5%)로서 남자의 경우보다 철수에 대한 요망이 약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4-5-2 > 性別에 따른 미군철수에 대한 견해

| 미군철수에 관한견해 성 별 | 남침억제를위해 계속주둔바람직 | 통일에 방해되니 철 수 요 망 | 단계적 철수 | 무 방 | 합 계 |
|----------------------|--------------------|---------------------|--------|------|------|
| 남 | 654 | 137 | 1106 | 27 | 1924 |
| | 34.0 | 7.1 | 57.5 | 1.4 | |
| | 89.5 | 84.6 | 82.9 | 93.1 | |
| | 29.0 | 6.1 | 49.0 | 1.2 | |
| 여 | 77 | 25 | 228 | 2 | 332 |
| | 23.2 | 7.5 | 68.7 | .6 | |
| | 10.5 | 15.4 | 17.1 | 6.9 | |
| | 3.4 | 1.1 | 10.1 | .1 | |
| 계 | 731 | 162 | 1334 | 29' | 2256 |
| | 32.4 | 7.2 | 59.1 | 1.3 | |

또 북한사회를 빈곤, 폐쇄사회로 보는 응답자들 중 46%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바라고 있는 반면 53.1%는 철수를 바라고 있는데 대부분이 단계적 철수를 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을 개발도상국가로 보는 응답자들은 15.3%가 계속주둔, 84.1%가 철수를 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이 단계적 철수를 바라고 있다.

반면 북한을 중진국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8.8%만이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하고 있으며 그중 반이상이 즉각적인 철수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중진국 이상으로 생각하는 여론선도계층일수록 주한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5-3 > 북한사회에 대한 견해와 미군철수에 대한 견해의 관계

| 북한 사회에 관한 견해 \ 미군철수에 관한 견해 | 계속 주둔 | 당장 철수 | 단계적 철수 | 무 방 | 합 계 |
|----------------------------|-----------------------------|---------------------------|-----------------------------|-------------------------|--------------|
| 빈곤. 폐쇄사회 | 569 46.0 79.1 25.8 | 8 .6 5.2 .4 | 650 52.5 49.7 29.4 | 11 .9 37.9 .5 | 1238 56.1 |
| 개발도상국 | 89 15.3 12.4 4.0 | 39 6.7 25.5 1.8 | 451 77.4 34.5 20.4 | 4 .7 13.8 .2 | 583 26.4 |
| 중진국 | 14 8.8 1.9 .6 | 82 51.6 53.6 3.7 | 59 37.1 4.5 2.7 | 4 2.5 13.8 .2 | 159 7.2 |
| 선진공업사회 | 3 20.0 .4 .1 | 6 40.0 3.9 .3 | 3 20.0 .2 .1 | 3 20.0 10.3 .1 | 15 .7 |
| 모르겠다 | 43 20.4 6.9 1.9 | 17 8.1 11.1 .8 | 144 68.2 11.0 6.5 | 7 3.3 24.1 .3 | 211 9.6 |
| 합 계 | 719 32.6 | 153 6.9 | 1307 59.2 | 29 1.3 | 2 .1 |

주한미군에 관한 연령별 시각을 보면 무학과 국졸의 경우 남침 억제를 위해 계속 주둔요망(60%, 54.5%)이 즉각 철수요망(40%, 36.4%)보다 강하며 고졸이상인 경우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요망성향이 주둔희망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남침억제를 위한 미군주둔요망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계속주둔 희망정도가 높으며 (무학 60%, 국졸 54.5%, 중졸 50%, 대졸 28%) 단계적 철수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단계적 철수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국졸 36.4%, 고졸 50.3%, 대학원졸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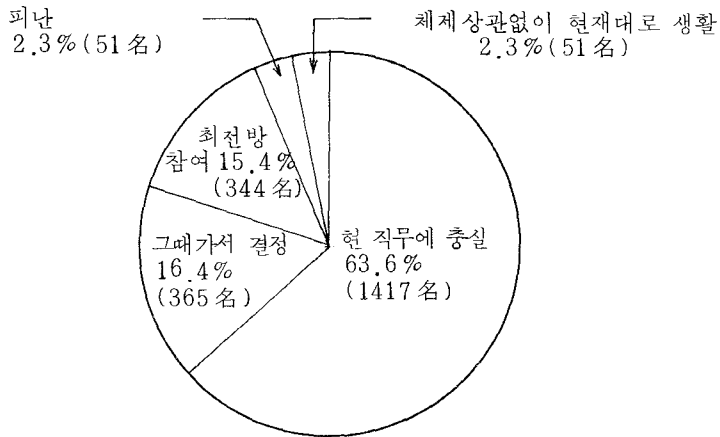
< 표 4-5-4 > 교육수준에 따른 미군철수 견해

| 미군철수에 관한 견해 교육수준 | 남침억제를위해 계속주둔바람직 | 통일에방해되니 철수요망 | 단계적 철수 | 별 무 | 합 계 |
|------------------------|-----------------------------|----------------------------|-----------------------------|-------------------------|---------------|
| 무 학 | 3 60.0 .4 .1 | 0 0 0 0 | 2 40.0 .2 .1 | 0 0 0 0 | 5 .2 |
| 국 졸 | 6 54.5 .8 .3 | 0 0 0 0 | 4 36.4 .3 .2 | 1 9.1 3.4 .0 | 11 .5 |
| 중 졸 | 22 50.0 3.0 1.0 | 1 2.3 .6 .0 | 20 45.5 1.5 .9 | 1 2.3 3.4 .0 | 44 2.0 |
| 고 졸 | 177 46.6 24.3 7.9 | 6 1.6 3.7 .3 | 191 50.3 14.3 8.5 | 6 1.6 20.7 .3 | 380 16.9 |
| 대 졸 | 382 28.0 52.4 17.0 | 141 10.3 87.0 6.3 | 829 60.7 62.2 36.8 | 14 1.0 48.3 .6 | 1366 60.7 |
| 대학원졸 | 139 31.2 19.1 6.2 | 14 3.1 8.6 .6 | 286 64.1 21.5 12.7 | 7 1.6 24.1 .3 | 446 19.8 |
| 합 계 | 729 32.4 | 162 7.2 | 1332 59.1 | 29 1.3 | 2252 100.0 |

6. 戰爭再發時의 行動類型

6.25 와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 재발했을 경우 현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 전체의 63.6% (63.6%)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그때가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 (16.4%), 최전방에 참여하여 싸우겠다는 입장 (15.4%),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다는 입장 (2.3%), 체제에 관계없이 현재대로 살겠다는 입장 (2.3%) 등의 순이다. 그러므로 전쟁재발시에 행동유형으로 그때까지 결정하겠다는 거나 안전지대피신, 체제관계없이 적응해 살겠다는 회피적, 소극적,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는 지도계층은 전체의 2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6 > 전쟁재발시의 행동유형



이것을 1977년부터의 여러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여론선도계층은 자신의 현 직무에 확신과 중요성을 느끼는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의 연령과 비슷한 1979년의 '30대 이상 사회인' 조사의 결과에 비해 '최전방 참여'가 현격히 낮지만, 반면 '피난, 해외이주' 역시 현격히 낮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들 계층의 전쟁위기시 행동유형이 전반적으로 매우 체제 수호적이긴 하나 소수이긴해도 유동적 소극적인 경향도 있다.

< 표 4-6-1 > 전쟁재발시 행동유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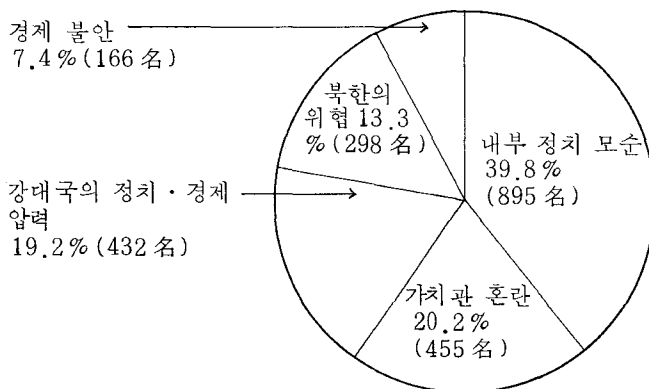
(단위 : %)

| 년 도 | 대 상 | 최 전 방 참 여 | 현 직 무 충 실 | 그 때 가 서 결 정 | 피 난 해 외 이 주 | 북 한 에 협 조 |
|------|----------------|--------------|--------------|----------------|----------------|--------------|
| 1977 | 대 학 생 | 48.7 | | 3.7 | 11.8 | 2.5 |
| 1986 | 대 학 생 | 41.86 | | 49.26 | 4.27 | 1.17 |
| 1987 | 대 학 생 | 35.5 | | 58.3 | 3.3 | 2.1 |
| 1978 | 고 교 생 (서울) | 59.2 | | 30.42 | 10.38 | |
| 1986 | 고 교 생 (전국) | 45.75 | | 48.29 | 4.47 | 0.47 |
| 1978 | 산업근로자 | 60.9 | | 23.15 | 16.95 | |
| 1979 | 30대이상 사 회 인 | 68.62 | | 15.56 | 15.82 | |
| 1981 | 현역장병 | 31 | 65 | 4 | 1 | |
| 1981 | 예비역장병 | 26 | 59 | 1 | 5 | |
| 1986 | 고 교 교 사 | 50.67 | | 44.7 | 1.68 | 0.11 |
| 1988 | 국 민 | 19.0 | 49.8 | 22.0 | 5.3 |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15.4 | 63.6 | 16.4 | 2.3 | |

7. 韓國의 當面 威脅要因

한국의 당면위협요인에 관해서는 내부정치모순이 가장 크다고 보는 입장이 약 4할정도(39.8%)로 가장 많아 매우 국내정치지향의 식이 팽배해 있다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치관의 혼란(20.2%), 강대국의 정치·경제 압력(19.2%), 북한의 위협(13.3%), 경제적 불안정(7.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약 7할 가까이(67.4%)가 한국의 당면위협요인을 국내적요인(내부정치모순, 가치관 혼란, 경제불안)에서 찾고 있다. 반면에 특히 북한의 위협이 당면 위협요인이라는 입장은 1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당 면 위 협 요 인



여론선도계층의 이같은 응답은 다른 어느 국민층보다도 한국의 당면 위협요인으로서 외부압력과 내부정치모순을 높게 드는 편이고 외부의 안보군사위협요인으로 북한의 한국적화, 남침위협을 당면국가 위협으로 보는 경향은 국민 각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표 4-7-1> 한국의 당면위협요인 비교

(단위: %)

| 년 도 | 대 상 | 북한 위협 | 내부 정치 모순 | 외부 압력 | 불가교 | 빈부 격차 | 불의 부정 | 인구 환경 | 경제 모순 | 사회 범죄 | 가치 혼란 | 경제 불안 |
|------|----------------|----------|----------------|----------|-------|----------|----------|----------|----------|----------|----------|----------|
| 1977 | 대 학생 | 32.54 | 24.31 | | 4.79 | 18.96 | 8.97 | 10.38 | | | | |
| 1986 | 대 학생 | 17.38 | 46.64 | 16.85 | 0.62 | 13.19 | 7.91 | 0.76 | | | | |
| 1987 | 대 학생 | 9.2 | 37.1 | 17.9 | | 15.0 | 14.7 | 2.2 | 3.9 | | | |
| 1979 | 고 교 생 (서울) | 24.4 | 9.52 | | 18.82 | 14.2 | 9.23 | 23.79 | | | | |
| 1986 | 고 교 생 (전국) | 49.97 | 27.91 | 6.45 | 0.39 | 5.95 | 5.41 | 3.39 | | | | |
| 1978 | 산 업 근 로 자 | 34.63 | 5.78 | | 14.79 | 13.22 | 9.31 | 21.26 | | | | |
| 1979 | 30대이상 사 회 인 | 29.69 | 10.23 | | 18.43 | 14.16 | 4.16 | 18.06 | | | | |
| 1981 | 현역장병 | 26 | 13 | | 18 | 19 | 11 | 14 | | | | |
| 1981 | 예비역 장 병 | 28 | 9 | | 18 | 17 | 12 | 16 | | | | |
| 1986 | 고교교사 | 39.97 | 28.94 | 4.72 | 0.22 | 13.06 | 7.77 | 3.26 | | | | |
| 1982 | 국 민 | 29.5 | 16.7 | | 26.8 | | 12.5 | 14.5 | | | | |
| 1987 | 국 민 | 18.1 | 22.5 | 2.8 | | 16.7 | 17.9 | 5.2 | 13.7 | | | |
| 1988 | 국 민 | 19.6 | 35.7 | 8.9 | | | | 10.7 | 8.4 | 16.7 | |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13.3 | 39.8 | 19.2 | | | | | | | 20.2 | 7.4 |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무학의 경우 내부정치모순(40%)과 가치관의 혼란(40%)을 들며 국졸, 여론선도계층은 북한의 위협(54.5%)과 내부정치모순(18.2%), 강대국의 정치경제압력을 들며 중졸의 경우는 내부정치모순(28.9%)과 북한의 위협(24.5%)을 들고 있다. 고졸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내부정치모순(34%, 40%, 46%)을 가장 중요한 국가위협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내부정치모순, 가치관의 혼란, 강대국의 정치경제압력을 주요위협요인으로 꼽고 있다.

< 표 4-7-2 > 교육수준과 한국의 당면 위협요인과의 관계

| 한국의당면 교육수준 위협 | 북한 위협 | 경 제 적 불 안 정 | 내부정치 모 순 | 강대국의정 치경제압력 | 가치관혼란 | 합 계 |
|---------------------|-------|----------------|-------------|----------------|-------|-------|
| 부 학 | 0 | 0 | 2 | 1 | 2 | 5 |
| | 0 | 0 | 40.0 | 20.0 | 40.0 | .2 |
| | 0 | 0 | .2 | .2 | .4 | |
| | 0 | 0 | .1 | .0 | .1 | |
| 국 졸 | 6 | 0 | 2 | 2 | 1 | 11 |
| | 54.5 | 0 | 18.2 | 18.2 | 9.1 | .5 |
| | 2.0 | 0 | .2 | .5 | .2 | |
| | .3 | 0 | .1 | .1 | .0 | |
| 중 졸 | 11 | 7 | 13 | 6 | 8 | 45 |
| | 24.4 | 15.6 | 28.9 | 13.3 | 17.8 | 2.0 |
| | 3.7 | 4.2 | 1.5 | 1.4 | 1.8 | |
| | .5 | .3 | .6 | .3 | .4 | |
| 고 졸 | 81 | 44 | 129 | 52 | 72 | 379 |
| | 21.4 | 11.6 | 34.0 | 13.7 | 19.0 | 16.9 |
| | 27.3 | 26.5 | 14.0 | 12.0 | 15.9 | |
| | 3.6 | 2.0 | 5.8 | 2.3 | 3.2 | |
| 대 졸 | 155 | 92 | 543 | 320 | 247 | 1357 |
| | 11.4 | 6.8 | 40.0 | 23.6 | 18.2 | 60.5 |
| | 52.2 | 55.4 | 60.7 | 74.1 | 54.5 | |
| | 6.9 | 4.1 | 24.2 | 14.3 | 11.0 | |
| 내 학원졸 | 44 | 23 | 205 | 51 | 123 | 446 |
| | 9.9 | 5.2 | 46.0 | 11.4 | 27.6 | 19.9 |
| | 14.8 | 13.9 | 22.9 | 11.8 | 27.2 | |
| | 2.0 | 1.0 | 9.1 | 2.3 | 5.5 | |
| 합 계 | 297 | 166 | 894 | 432 | 453 | 2243 |
| | 13.2 | 7.4 | 39.9 | 19.3 | 20.2 | 100.0 |

직업에 따라서는 한국사회의 당면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농어업종사자와 군인이 다른 분야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24.6%, 24.3%로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과 노조간부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13.6%와 12.1%로 타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의 혼란을 지적한 사람들은 언론인(29.1%), 종교인(38%)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인, 전문직업인, 교육자, 노조간부의 약 5할이 내부정치모순을 국가위협요인으로 우려하고 예체능인의 6할도 내부정치모순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학생회간부의 경우 내부정치모순에 대한 지적도 4할로 높게 나타나지만 강대국의 압력에 대한 반응이 5할에 가깝게 나타나 아주 민감하게 이를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4-7-3> 직업과 한국의 당면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 직업 \ 요인 | 북한의 위협 | 경제적 불안정 | 내부정치모순 | 강대국의 압력 | 가치관 혼란 | 합계 |
|---------|--------|---------|--------|---------|--------|-----|
| 농·어업 | 33 | 12 | 44 | 20 | 25 | 134 |
| | 24.6 | 9.0 | 32.8 | 14.9 | 18.7 | |
| | 11.1 | 7.3 | 5.0 | 4.7 | 5.5 | |
| | 1.5 | .5 | 2.0 | .9 | 1.1 | |
| 공무원 | 84 | 67 | 168 | 63 | 111 | 494 |
| | 17.0 | 13.6 | 34.0 | 12.8 | 22.5 | |
| | 28.3 | 40.6 | 19.0 | 14.7 | 24.4 | |
| | 3.8 | 3.0 | 7.5 | 2.8 | 5.0 | |
| 군인 | 17 | 2 | 24 | 13 | 14 | 70 |
| | 24.3 | 2.9 | 34.3 | 18.6 | 20.0 | |
| | 5.7 | 1.2 | 2.7 | 3.0 | 3.1 | |
| | .8 | .1 | 1.1 | .6 | .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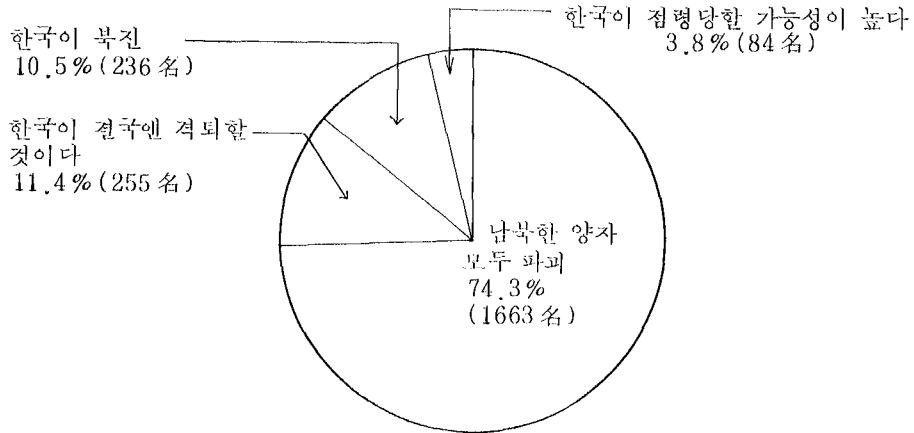
| 요인 직업 | 북한의 위협 | 경제적 불안정 | 내부정치 모순 | 강대국의 압력 | 가치관 혼란 | 합계 |
|-------------|---------------------------|-------------------------|----------------------------|---------------------------|---------------------------|-------------|
| 정치인 | 4 9.3 1.3 .2 | 3 7.0 1.8 .1 | 21 48.8 2.4 .9 | 8 18.6 1.9 .4 | 7 16.3 1.5 .3 | 43 1.9 |
| 기업경영인 | 31 13.0 10.4 1.4 | 21 8.8 12.7 .9 | 90 37.8 10.2 4.0 | 54 22.7 12.6 2.4 | 42 17.6 9.2 1.9 | 238 10.7 |
| 전문직업인 | 7 12.5 2.4 .3 | 4 7.1 2.4 .2 | 30 53.6 3.4 1.3 | 7 12.5 1.6 .3 | 8 14.3 1.8 .4 | 56 2.5 |
| 언론인 | 8 7.8 2.7 .4 | 5 4.9 8.0 .2 | 40 38.8 4.5 1.8 | 20 19.4 4.7 .9 | 30 29.1 6.6 1.3 | 103 4.6 |
| 교육자 | 46 11.7 15.5 2.1 | 18 4.6 10.9 .8 | 190 48.2 21.4 8.5 | 53 13.5 12.3 2.4 | 87 22.1 19.1 3.9 | 394 17.6 |
| 학생회간부 | 2 1.4 .7 .1 | 6 4.3 3.6 .3 | 56 40.6 6.3 2.5 | 64 46.4 14.9 2.9 | 10 7.2 2.2 .4 | 138 6.2 |
| 노조간부 | 6 18.2 2.0 .3 | 4 12.1 2.4 .2 | 16 48.5 1.8 .7 | 4 12.1 .9 .2 | 3 9.1 .7 .1 | 33 1.5 |
| 예체능인 | 0 0 0 0 | 0 0 0 0 | 8 57.1 .9 .7 | 4 28.6 .9 .2 | 2 14.3 .4 .1 | 14 .6 |
| 종교인 | 13 16.5 4.4 .6 | 1 1.3 .6 .0 | 30 38.0 3.4 1.3 | 5 6.3 1.2 .2 | 30 38.0 6.6 1.3 | 79 3.5 |
| 사회단체 임직원 | 23 15.3 7.7 1.0 | 11 7.3 6.7 .5 | 52 34.7 5.9 2.3 | 27 18.0 6.3 1.2 | 37 24.7 8.1 1.7 | 150 6.7 |

| 요인 직업 | 북한의 위협 | 경제적 불안정 | 내부정치 모순 | 강대국의 압력 | 가치관 혼란 | 합계 |
|----------|------------------------|------------------------|----------------------------|---------------------------|---------------------------|---------------|
| 기타 | 21 7.5 7.1 .9 | 11 3.9 6.7 .5 | 113 40.2 12.8 5.1 | 87 31.0 20.2 3.9 | 49 17.4 10.8 2.2 | 281 12.6 |
| 합계 | 297 13.3 | 165 7.4 | 886 39.7 | 430 19.2 | 455 20.4 | 2234 100.0 |

8. 北韓의 南侵時 豫상되는 結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였을 경우의 결과에 관해서는 全面戰이 될 것이므로 남북한 모두 승자도 패자도 없이 결국엔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입장이 전체의 7할을 상회(74.3%)하고 있어 전쟁은 민족적 소멸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본다. 그 다음으로 한국이 개전초에는 고전할 것이나 결국에는 격퇴할 것이라는 입장(11.4%), 한국이 오히려 북진할 것이라는 입장(10.5%), 한국이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3.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 남침시 전면전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파멸이라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표 4-8 > 북한의 남침시 예상되는 결과



연령에 따른 남침시의 결과예측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승패없는 파괴 (10대 94.7%, 30대 76%, 60대 56%)라고 예측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 반면 초기에는 고전하나 결국에는 격퇴하리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짐 (20대 5.9%, 40대 12.4%, 60대 24%)을 보여준다. 그리고 점령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희박한 응답을 드러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쟁결과에 대한 예측은 승패없는 파괴만이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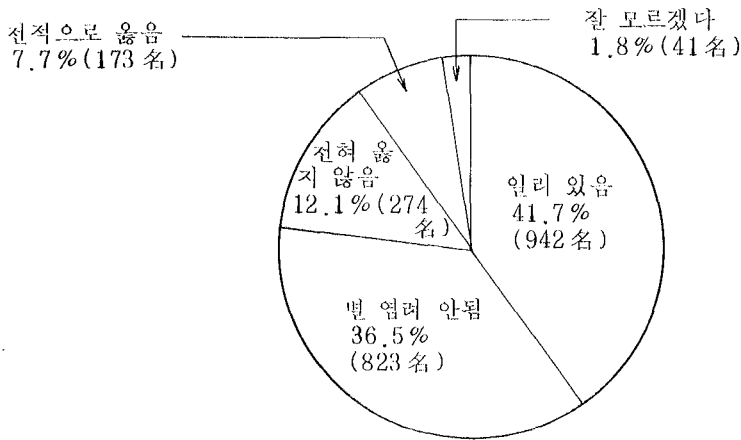
< 표 4-8-1 > 연령에 따른 남침시의 결과예측

| 전쟁시 결과 연령 예측 | 초기고전 결국격퇴 | 점령가능성 농 후 | 북진도 가능 | 승자.패자없이 전면적파괴 | 합 계 |
|-----------------|--------------|--------------|-------------|------------------|---------------|
| 10 대 | 0 | 0 | 1 | 18 | 19 .8 |
| | 0 | 0 | 5.3 | 94.7 | |
| | 0 | 0 | .4 | 1.1 | |
| | 0 | 0 | .0 | .8 | |
| 20 대 | 37 | 20 | 45 | 525 | 627 28.0 |
| | 5.9 | 3.2 | 7.2 | 83.7 | |
| | 14.5 | 23.8 | 19.1 | 31.6 | |
| | 1.7 | .9 | 2.0 | 23.5 | |
| 30 대 | 88 | 24 | 49 | 518 | 679 30.4 |
| | 13.0 | 3.5 | 7.2 | 76.3 | |
| | 34.5 | 28.6 | 20.8 | 31.2 | |
| | 3.9 | 1.1 | 2.2 | 23.2 | |
| 40 대 | 62 | 20 | 73 | 346 | 501 22.4 |
| | 12.4 | 4.0 | 14.6 | 69.1 | |
| | 24.3 | 23.8 | 30.9 | 20.8 | |
| | 2.8 | .9 | 3.3 | 15.5 | |
| 50 대 | 56 | 19 | 59 | 227 | 361 16.1 |
| | 15.5 | 5.3 | 16.3 | 62.9 | |
| | 22.0 | 22.6 | 25.0 | 13.7 | |
| | 2.5 | .8 | 2.6 | 10.1 | |
| 60 대 이상 | 12 | 1 | 9 | 28 | 50 2.2 |
| | 24.0 | 2.0 | 18.0 | 56.0 | |
| | 4.7 | 1.2 | 3.8 | 1.7 | |
| | .5 | .0 | .4 | 1.3 | |
| 합 계 | 255 11.4 | 84 3.8 | 236 10.5 | 1662 74.3 | 2237 100.0 |

9. 올림픽과 北韓의 挑發 可能性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 약 4할(41.7%, 924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별 염려가 안된다는 입장(36.5%, 823명), 전혀 옳지 않다는 입장(12.1%, 274명), 전적으로 옳다는 입장(7.7%, 173명), 잘 모르겠다(1.8%, 41명) 등의 순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49.4%, 1,115명)과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48.6%, 1,097명)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표 4-9 > 올림픽과 북한이 도발가능성



第3節 北韓觀

개 요

① 한국의 여론선도계층은 북한사회를,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폐쇄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많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개발에 힘쓰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는 객관적, 현실적 북한 인식 시각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② 북한에 관한 지식은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 얻게 되는 경우가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며, 통일안보 교육이나 TV를 통해 얻는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③ 신문, 책, 정부발표 등을 통해 나오는 북한정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6할에 이르며 약 2할 정도는 믿지 않는 편에 속한다. 북한에 관한 情報源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귀순자의 강연이다.

④ 현 시점에서 북한동포 대면시 한국사회의 상대적 우위성을 설명할 자신이 있는냐는 질문에 약 과반수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약 3할 정도는 만나보아야 알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또 15.3%는 ‘그런 설명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 그룹은 상당히 진보적 견해를 갖고있는 사람들이다.

⑤ 북한주민 대면시에는 약 6할 정도가 동일민족이라는 동포의식을 갖고 대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대하거나 외국인처럼 대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약 4할

에 달한다. 특히 강원과 이북 출신자들이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⑥ 북한체제에서 남한이 본받아야 할 측면으로는 자주성과 주체성이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 조직력과 단결력이다. 여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주성과 주체성 그리고 관등소득분배를 본받을 점으로 드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학력이 낮을수록 조직력과 단결력을 본받아야 할 것으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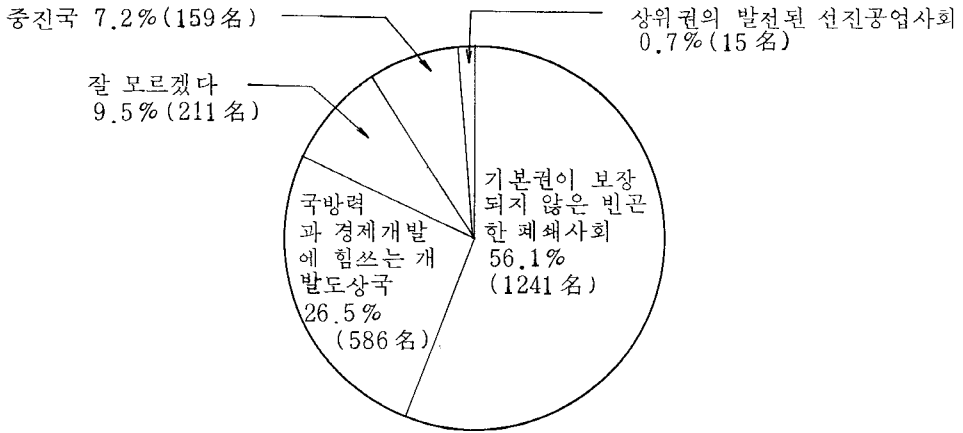
⑦ 김일성 사망후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약 5할, 긴장고조 내지 무력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약 3할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낙관적 방향으로 기우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 北韓 社會 認識

북한사회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빈곤한 폐쇄사회라는 입장이 과반수(56.1%)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국방력과 경제개발에 힘쓰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입장(26.5%), 경제적 여유가 다소 있는 인민복지를 고려하는 중진국이라는 견해(7.2%), 경제적으로 상위권의 발전된 선진공업사회(0.7%)로 보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6-1 >

북한 사회 인식



이같은 여론선도계층의 응답은 1977년 이래의 조사결과 추세를 놓고 볼 때, 북한을 「공산권 개발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일반국민들도 북한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표 6-1-1 > 북한사회 인식성향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폐쇄 독재 사회 | 공산권 저개발 국 | 공산권 개도국 | 공산권 중진국 | 공산권 선진국 | 주체적 민족 사회 | 모르겠다 |
|------|-----------------------|----------------|-----------------|------------|------------|------------|-----------------|------|
| 1977 | 대학생 | 77.3 | | 17.5 | 2.8 | 2.4 | | |
| 1986 | 대학생 | 55.52 | 18.79 | 15.68 | 7.73 | 0.42 | | |
| 1987 | 대학생 | 46.5 | 25.2 | 13.4 | 6.3 | 0.5 | 8.2 | |
| 1978 | 산 업 근 로 자 | 75.2 | | 11.5 | 2.96 | 3.96 | | |
| 1979 | 국 민 | 83.7 | | 13.68 | 14.2 | 0.25 | | |
| 1980 | 현역장병 | 66 | | 24 | 8 | 2 | | |
| 1981 | 국 민 | 73 | | 17.3 | 0.9 | 3.8 | | |
| 1985 | 공 직 자 | 87 | | 10.03 | 2.34 | 0.2 | | |
| 1986 | 고 교 생 | 83.33 | 0.58 | 3.79 | 1.75 | 0.68 | | |
| 1986 | 고 교 교 사 | 86.82 | 6.19 | 3.94 | 1.01 | | | |
| 1987 | 국 민 | 39.0 | 51.2 | 1.7 | 6.3 | 0.7 | | |
| 1988 | 국 민 | 53.2 | | 17.1 | 4.0 | 1.1 | | 24.5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56.1 | | 26.5 | 7.2 | 0.7 | | 9.5 |

한편 북한인식시각과 체제이념선호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의 6할이상이 북한을 빈곤폐쇄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할이상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반수이상(58.1%)이 북한을 중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우월하다고 보는 한국사회의 지도계층일수록 북한사회수준을 저급하고 낙후됐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산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지도계층인사일수록 북한사회를 중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체제이념선호도와 북한인식 태도와는 깊은 상관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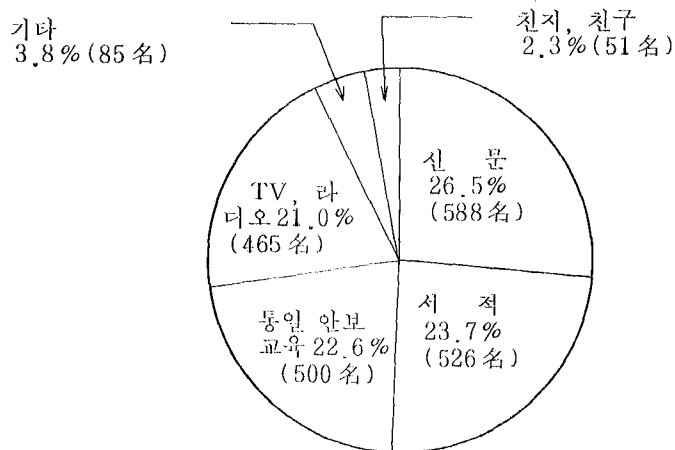
<표 6-1-2> 선호체제와 북한사회 인식과의 관계

| 현재 북한 선호 사회의수준 체제 | 빈곤폐쇄 사 회 | 개 발 도 상 국 | 중 진 국 | 선 진 공업사회 | 잘 모르겠다 | 합 계 |
|-------------------------|------------------------------|-----------------------------|---------------------------|------------------------|---------------------------|---------------|
| 자유민주주의 제 도 | 1065 67.8 85.9 48.4 | 342 21.8 59.2 15.5 | 35 2.2 22.6 1.6 | 2 .1 13.3 .1 | 126 8.0 60.0 5.7 | 1571 71.4 |
| 공산사회주의 제 도 | 14 12.0 1.1 .6 | 17 14.5 2.9 .8 | 68 58.1 43.9 3.1 | 6 5.1 40.0 .3 | 11 9.4 5.2 .5 | 117 5.3 |
| 혼합절충체제 | 148 33.5 11.9 6.7 | 188 42.5 32.5 8.5 | 43 9.7 27.7 2.0 | 5 1.1 33.3 .2 | 58 13.1 27.6 2.6 | 442 20.1 |
| 모르겠다 | 13 19.1 1.0 .6 | 30 44.1 5.2 1.4 | 9 13.2 5.8 .4 | 2 2.9 13.3 .1 | 14 20.6 6.7 .6 | 68 3.1 |
| 합 계 | 1240 56.4 | 578 26.3 | 155 7.0 | 15 .7 | 210 9.5 | 2200 100.0 |

2. 北韓에 관한 知識源

북한에 관한 지식 습득경로에 있어서는, 신문에 의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고 (26.5%), 그 다음으로 서적 (23.7%), 통일안보 교육 (22.6%), TV나 라디오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 북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반수정도 (5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2> 북한에 관한 지식원



상대적으로 여론선도계층은 공산권 연구자의 강연이나 저서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칼 맑스나 레닌 등의 원전을 통한 인식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6-2-1> 북한 및 공산주의 이념 파악경로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공 산 권 연구자의 강연·저서 | 신문·언론 매 체 의 보 도 | 칼 맑 스 레 닌 저 서 등 원 전 | 북 한 귀 순 자 강 연 | 북 한 의 방 송 간 행 물 | 정 부 실 무 자 강 연 | 기 타 |
|------|----------------|------------------------|-----------------------|---------------------------|---------------------|-----------------------|---------------------|-----|
| 1977 | 대 학 생 | 17.7 | 64.4 | 6.7 | | | 5.4 | 5.4 |
| 1986 | 대 학 생 | 26.98 | 17.78 | 42.65 | | 5.15 | 3.67 | |
| 1986 | 고 교 생 | 20.62 | 38.12 | 20.6 | | 7.58 | 11.08 | |
| 1986 | 고 교 교 사 | 40.65 | 29.27 | 11.59 | | 2.92 | 11.48 | |
| 1987 | 국 민 | 22.7 | 26.8 | 9.0 | 26.0 | 2.1 | 4.4 | 6.2 |
| 1988 | 여 론 선 도 계 층 | 42.3 | 15.1 | 13.1 | 11.5 | 11.4 | 2.5 | 4.0 |

연령에 따른 북한정보의 습득원을 보면 10대는 TV, 라디오 (36.8%)에서 주로 얻고 20대는 서적(34.1%)에서 주로 얻으며 30, 40대는 신문(29.7%, 28.5%)에서 주로 얻고 50대는 통일안보교육(34.3%)에서, 60대는 신문(35.4%)에서 주로 획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론선도계층 중 젊은 세대(10, 20, 30대)일수록 신문과 서적에서 주로 정보를 얻으며 50, 60대는 신문, 통일안보교육에서 주로 얻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 연령계층은 신문, TV·라디오, 서적, 통일안보교육에서 골고루 정보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6-2-2 >

연령과 북한정보원과의 관계

| 연령 \ 북한 지식원 | 신 문 | T V . 라 디 오 | 서 적 | 통일안보 교 육 | 친지·친구 | 기 타 | 합 계 |
|----------------|------|----------------|------|-------------|-------|------|-------|
| 10 대 | 2 | 7 | 4 | 3 | 2 | 1 | 19 |
| | 10.5 | 36.8 | 21.1 | 15.8 | 10.5 | 5.3 | .9 |
| | .3 | 1.5 | .8 | .6 | 3.9 | 1.2 | |
| | .1 | .3 | .2 | .1 | .1 | .0 | |
| 20 대 | 118 | 144 | 213 | 89 | 25 | 36 | 625 |
| | 18.9 | 23.0 | 34.1 | 14.2 | 4.0 | 5.8 | 28.2 |
| | 20.1 | 31.0 | 40.5 | 17.8 | 49.0 | 42.4 | |
| | 5.3 | 6.5 | 9.6 | 4.0 | 1.1 | 1.6 | |
| 30 대 | 199 | 151 | 154 | 133 | 13 | 21 | 671 |
| | 29.7 | 22.5 | 23.0 | 19.8 | 1.9 | 3.1 | 30.3 |
| | 33.9 | 32.5 | 29.3 | 26.6 | 25.5 | 24.7 | |
| | 9.0 | 6.8 | 7.0 | 6.0 | .6 | .9 | |
| 40 대 | 142 | 101 | 97 | 141 | 3 | 14 | 498 |
| | 28.5 | 20.3 | 19.5 | 28.3 | .6 | 2.8 | 22.5 |
| | 24.2 | 21.7 | 18.4 | 28.2 | 5.9 | 16.5 | |
| | 6.4 | 4.6 | 4.4 | 6.4 | .1 | .6 | |
| 50 대 | 109 | 51 | 53 | 121 | 7 | 12 | 353 |
| | 30.9 | 14.4 | 15.0 | 34.3 | 2.0 | 3.4 | 15.9 |
| | 18.6 | 11.0 | 10.1 | 24.2 | 13.7 | 14.1 | |
| | 4.9 | 2.3 | 2.4 | 5.5 | .3 | .5 | |
| 60대이상 | 17 | 11 | 5 | 13 | 1 | 1 | 48 |
| | 35.4 | 22.9 | 10.4 | 27.1 | 2.1 | 2.1 | 2.2 |
| | 2.9 | 2.4 | 1.2 | 2.6 | 2.0 | 1.2 | |
| | .8 | .5 | .2 | .6 | .0 | .0 | |
| 합 계 | 587 | 465 | 526 | 500 | 51 | 85 | 2214 |
| | 26.5 | 21.0 | 23.8 | 22.6 | 2.3 | 3.8 | 100.0 |

이같은 북한 정보의 습득원을 생활수준별로 보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아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은 통일안보교육(26.7%), 서적(26.7%), 신문(20%)에서 북한 및 공산권 지식을 주로 얻으며 약간 못하는 편은 서적(32.2%), 교육(22.4%)에서, 중류여론선도계층은 신문(28.6%) 교육(23.3%)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여론선도계층은 서적(31.2%), TV·라디오(27.3%), 신문(23.4%)에서 주로 북한 지식을 얻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신문이 가장 큰 정보원이며 다음으로 서적과 통일안보교육매개체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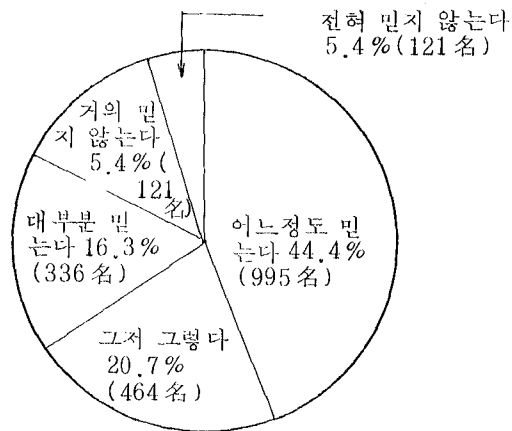
< 표 6-2-3 > 생활수준과 북한정보원과의 관계

| 북한지식 생활수준 | 신 문 | TV· 라디오 | 서 적 | 통일안보 교 육 | 친지·친구 | 기 타 | 합 계 |
|--------------|-----------------------------|-----------------------------|-----------------------------|-----------------------------|--------------------------|--------------------------|---------------|
| 아 주 못사는편 | 6 20.0 1.3 .3 | 4 13.3 .9 .2 | 8 26.7 1.5 .4 | 8 26.7 1.6 .4 | 2 6.7 3.9 .1 | 2 6.7 2.4 .1 | 30 1.4 |
| 못사는편 | 87 20.3 14.8 3.9 | 84 19.6 18.1 3.8 | 138 32.2 26.3 6.3 | 96 22.4 19.3 4.3 | 6 1.4 11.8 .3 | 18 4.2 21.4 .8 | 429 19.4 |
| 중 류 | 453 28.6 77.3 20.5 | 333 21.0 71.8 15.1 | 329 20.8 62.7 14.9 | 369 23.3 74.1 16.7 | 40 2.5 78.4 1.8 | 59 3.7 70.2 2.7 | 1583 71.7 |
| 잘 사는편 | 36 23.4 6.1 1.6 | 42 27.3 9.1 1.9 | 48 31.2 9.1 2.2 | 22 14.3 4.4 1.0 | 1 .6 2.0 .0 | 5 3.2 6.0 .2 | 154 7.0 |
| 아 주 잘 사는편 | 2 20.0 .3 .1 | 1 10.0 .2 .0 | 2 20.0 .4 .1 | 3 30.0 .6 .1 | 2 20.0 3.9 .1 | 0 0 0 0 | 10 .5 |
| 합 계 | 586 26.5 | 464 21.0 | 525 23.8 | 498 22.6 | 51 2.3 | 84 3.8 | 2208 100.0 |

3. 신문, 책, 정부발표 등을 통한 북한실정 신뢰도

신문, 책, 정부발표 등을 통해 들어온 북한 실정이나 지식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 보면 어느 정도 믿는다는 사회지도계층은 4할 이상(44.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는 견해표명자(20.7%), 신문, 책, 정부발표내용을 대부분 믿는다는 입장(16.3%), 거의 믿지 않는다는 의견(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믿는다는 입장이 전체 여론선도계층의 6할을 상회(60.7%)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사회지도계층도 약 2할 가량(18.6%)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신문, 책, 정부발표 등을 통한 북한실정 신뢰도



그간 조사해온 다양한 사회계층과 국민 전체의 의식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여론선도계층의 이러한 응답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표 6-3-1> 신문, 책, 정부발표를 통한 북한실정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년 도 | 대 상 | 대부분 믿는다 | 어느 정도 믿는다 | 그 저 그렇다 | 거의 믿지 않는다 | 전혀 믿지 않는다 |
|------|-------------|------------|--------------|------------|--------------|--------------|
| 1986 | 대 학 생 | 4.18 | 58.59 | 7.62 | 18.84 | 9.12 |
| 1986 | 고 교 생 | 24.83 | 55.20 | 8.18 | 8.45 | 2.81 |
| 1986 | 고교교사 | 28.94 | 52.36 | 10.24 | 4.05 | 1.80 |
| 1987 | 국 민 | 20.2 | 42.0 | 20.7 | 12.1 | 4.1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16.3 | 44.4 | 20.7 | 13.2 | 5.4 |

북한이나 공산주의 이념파악방법과 북한 실정에 관한 신문, 책, 정부 발표문에 대한 신뢰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부실무자의 강연을 공산권어해의 효과적 방편으로 보는 여론선도계층은 신문, 책, 정부발표등에서 들어온 북한 실정에 대해서 약간 믿는 사람들과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각각 35.8%, 28.3%를 나타냈다.

특히 교수의 강연이나 저서에 대해서는 약간 믿는다고 느끼는 계층은 5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문, 책, 정부발표에 의한 북한 실정은 6할 이상이 믿고 있으며 이념파악의 방법으로는 교수의 강연이나 저서가 전체 4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스컴, 귀순자의 강연, 맑스레닌의 저서가 각각 1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표 6-3-2 > 공산주의 이념파악방법과 북한정보 신뢰도와 관계

| 신뢰도 이념파악 | 전혀 믿지 않음 | 거 의 믿지 않음 | 보 통 | 약간 믿음 | 대부 분 믿음 | 합 계 |
|------------------|--------------------------|---------------------------|----------------------------|-----------------------------|----------------------------|---------------|
| 정부실무자 의 강연 | 6 11.3 5.1 .3 | 6 11.3 2.1 .3 | 7 13.2 1.5 .3 | 19 35.8 1.9 .9 | 15 28.3 4.1 .7 | 53 2.4 |
| 칼 맑스 와 레닌의 저서 | 20 6.8 16.9 .9 | 75 25.6 26.0 3.4 | 85 29.0 18.8 3.8 | 103 35.2 10.4 4.7 | 10 3.4 2.7 .5 | 293 13.2 |
| 귀순자의 강 연 | 9 3.5 7.6 .4 | 13 5.1 4.5 .6 | 26 10.2 5.7 1.2 | 113 44.3 11.4 5.1 | 94 36.9 25.7 4.2 | 255 11.5 |
| 교수의 강의 빛 저 서 | 39 4.2 33.1 1.8 | 94 10.0 32.5 4.2 | 204 21.8 45.0 9.2 | 460 49.1 46.6 20.8 | 140 14.9 38.3 6.3 | 937 42.3 |
| 매스컴의 보 도 | 13 3.9 11.0 .6 | 21 6.3 7.3 .9 | 55 16.4 12.1 2.5 | 178 53.0 18.0 8.0 | 69 20.5 18.9 3.1 | 336 15.2 |
| 북한의 방송 이나 간행물 | 21 8.3 17.8 .9 | 53 21.0 18.3 2.4 | 54 21.4 11.9 2.4 | 96 38.1 9.7 4.3 | 28 11.1 7.7 1.3 | 252 11.4 |
| 기 타 | 10 11.6 8.5 .5 | 27 31.4 9.3 1.2 | 21 24.4 4.6 .9 | 18 20.9 1.8 .8 | 10 11.6 2.7 .5 | 86 3.9 |
| 합 계 | 118 5.3 | 289 13.1 | 453 20.5 | 987 44.6 | 366 16.5 | 2213 100.0 |

그리고 북한에 관한 지식전달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인식태도를 보면 공산주의가 이론·실제에서 모두 나쁘다는 견해를 가진 여론선도계층중에서 북한에 관한 신문, 책, 정부발표에 어느 정도 믿거나 대부분 믿는 사람이 75.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이론·실제에서 모두 좋다는 여론선도계층은 그러한 정보매체에 의한 북한실정에 회의를 표시한 사람이 7할에 육박하고 있다. (전혀믿지 않음 : 32.0%, 거의 믿지않음 : 37.0%)

따라서 공산주의를 이론과 실제면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정보에 관하여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신문, 서적, 정부발표 등의 북한실정을 어느정도 믿느냐에 대해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믿는 정도(42.1%, 44.8%)가 50%를 넘지 못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실정의 신뢰도(30대 63%, 40대 69.9%, 50대 71.5%, 60대 71.4%)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실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정도가 최고 29%로서 대체로 전 연령계층에 걸쳐서 북한실정을 어느정도 믿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 표 6-3-3 >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관한 정보의 신뢰도와의 관계

| 북한실정에 대한 신뢰도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 | 전혀 믿지 않음 | 거의 믿지 않음 | 보 통 | 이 느 정 도 믿 음 | 대 부 분 믿 음 | 합 계 |
|-----------------------------|-------------|-------------|--------|----------------------------|-----------------------|--------|
| 이론·실제 모두 나쁨 | 34 | 45 | 97 | 350 | 194 | 720 |
| | 4.7 | 6.3 | 13.5 | 48.6 | 26.9 | 32.8 |
| | 29.1 | 16.0 | 21.4 | 35.6 | 53.4 | |
| | 1.5 | 2.0 | 4.4 | 15.9 | 8.8 | |
| 이론은 좋으나 실제는 나쁨 | 34 | 159 | 286 | 551 | 150 | 1180 |
| | 2.9 | 13.5 | 24.2 | 46.7 | 12.7 | 53.7 |
| | 29.1 | 56.6 | 63.1 | 56.0 | 41.3 | |
| | 1.5 | 7.2 | 13.0 | 25.1 | 6.8 | |
| 이론은 나쁘나 실제는 좋음 | 1 | 2 | 3 | 6 | 4 | 16 |
| | 6.3 | 12.5 | 18.8 | 37.5 | 25.0 | .7 |
| | .9 | .7 | .7 | .6 | 1.1 | |
| | .0 | .1 | .1 | .3 | .2 | |
| 모두 좋음 | 32 | 37 | 14 | 11 | 6 | 100 |
| | 32.0 | 37.0 | 14.0 | 11.0 | 6.0 | 4.5 |
| | 27.4 | 13.2 | 3.1 | 1.1 | 1.7 | |
| | 1.5 | 1.7 | .6 | .5 | .3 | |
| 잘 모름 | 16 | 38 | 53 | 66 | 9 | 182 |
| | 8.8 | 20.9 | 29.1 | 36.3 | 4.9 | 8.3 |
| | 13.7 | 13.5 | 11.7 | 6.7 | 2.5 | |
| | .7 | 1.7 | 2.4 | 3.0 | .4 | |
| 합 계 | 117 | 281 | 453 | 984 | 363 | 2198 |
| | 5.3 | 12.8 | 20.6 | 44.8 | 16.5 | 100.0 |

< 표 6-3-4 > 연령과 신문, 서적, 정부발표의 북한실정
신뢰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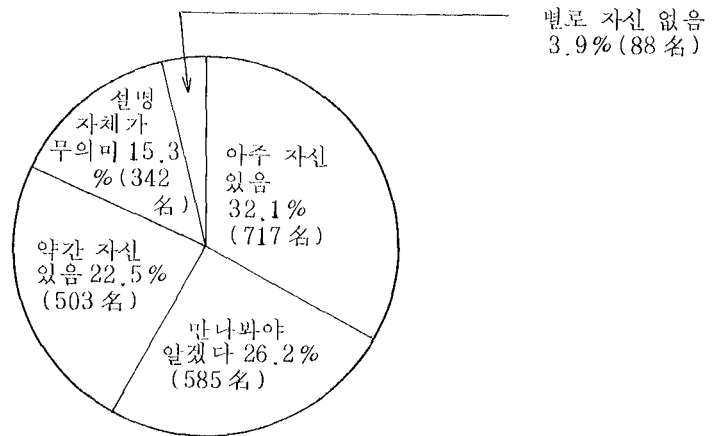
| 북한 실정 연령 신뢰도 | 전 혀 안 믿음 | 거 의 안 믿음 | 보 통 | 어 느 정도 믿 음 | 대 부분 믿 음 | 합 계 |
|-----------------|-------------|-------------|------|---------------|-------------|-------|
| 10 대 | 0 | 6 | 5 | 5 | 3 | 19 |
| | 0 | 31.6 | 26.3 | 26.3 | 15.8 | .8 |
| | 0 | 2.0 | 1.1 | .5 | .8 | |
| | 0 | .3 | .2 | .2 | .1 | |
| 20 대 | 46 | 139 | 167 | 228 | 58 | 638 |
| | 7.2 | 21.8 | 26.2 | 35.7 | 9.1 | 28.5 |
| | 38.0 | 47.0 | 36.0 | 22.9 | 15.8 | |
| | 2.1 | 6.2 | 7.5 | 10.2 | 2.6 | |
| 30 대 | 25 | 73 | 155 | 334 | 96 | 683 |
| | 3.7 | 10.7 | 22.7 | 48.9 | 14.1 | 30.5 |
| | 20.7 | 24.7 | 33.4 | 33.6 | 26.2 | |
| | 1.1 | 3.3 | 6.9 | 14.9 | 4.3 | |
| 40 대 | 20 | 42 | 88 | 253 | 95 | 498 |
| | 4.0 | 8.4 | 17.7 | 50.8 | 19.1 | 22.2 |
| | 16.5 | 14.2 | 19.0 | 25.5 | 26.0 | |
| | .9 | 1.9 | 3.9 | 11.3 | 4.2 | |
| 50 대 | 23 | 33 | 45 | 156 | 97 | 354 |
| | 6.5 | 9.3 | 12.7 | 44.1 | 27.4 | 15.8 |
| | 19.0 | 11.1 | 9.7 | 15.7 | 26.5 | |
| | 1.0 | 1.5 | 2.0 | 7.0 | 4.3 | |
| 60 대 이상 | 7 | 3 | 4 | 18 | 17 | 49 |
| | 14.3 | 6.1 | 8.2 | 36.7 | 34.7 | 2.2 |
| | 5.8 | 1.0 | .9 | 1.8 | 4.6 | |
| | .3 | .1 | .2 | .8 | .8 | |
| 합 계 | 121 | 296 | 464 | 994 | 366 | 2241 |
| | 5.4 | 13.2 | 20.7 | 44.4 | 16.3 | 100.0 |

4. 북한동포에 대한 한국사회 우위성설명 자신도

현 시점에서 북한 동포를 만났을 경우 한국사회의 상대적 우위성을 설명할 자신이 있는가에 관해 살펴볼 때, 자신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54.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만나봐야 알겠다는 유보적 입장내지는 별로 자신이 없다는 소극적 입장도 약 3할 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론선도계층의 일부나 일반국민중 일부, 특히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서는 한국의 우위성을 북한 동포에 설명하는 자체가 대결을 조장하므로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지양하자는 견해가 대두되어 한국의 대북한 우위성설명 자체를 의미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표 6-4> 북한 동포에 대한 한국사회 우위성 설명 자신도



여타 조사대상집단들의 응답결과에 비교해 볼 때 ‘ 만나 봐야 알겠다 ’ 는 유보적 입장이 많은 폭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표 6-4-1> 북한 동포에 대한 한국사회 우위성 설명
자신도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아주 자신 있 음 | 약간 자신 있 음 | 만나 봐야 알 겠 다 | 별로 자신 없 음 | 우위성설명 자체가무의미 |
|------|-------------|--------------|--------------|----------------|--------------|-----------------|
| 1977 | 대 학 생 | 33.0 | 35.5 | 17.0 | 13.1 | |
| 1986 | 대 학 생 | 33.0 | 33.5 | 17.0 | 13.1 | |
| 1987 | 대 학 생 | 23.6 | 31.6 | 13.0 | 25.7 | |
| 1986 | 고 교 생 | 44.75 | 26.10 | 14.64 | 11.81 | |
| 1986 | 고교교사 | 48.19 | 30.18 | 12.16 | 5.85 |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32.1 | 22.5 | 26.2 | 3.9 | 15.3 |

이에 대한 성별시각의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신있다 (57.5 %) 가 과반수를 넘으며 여성의 경우 자신있음 (37.2 %) 이 남성 에 비해 훨씬 밀돌고 있다. 대신 상황에 처해 봐야 알겠다는 응답 은 여성 (38 %) 이 남성 (24.1 %) 보다 훨씬 높으며 여성·남성의 구별없이 의미없는 물음이라고 여김 (14.5 % , 19.9 %) 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리고 한국의 체제우위성 설명에 자신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3.8 % , 4.9 %) 은 극소수에 달해 잠재적으로 체제 우위성을 긍정하 고 있는것 같다.

< 표 6-4-2 > 성별에 따른 남한사회의 우위성 설명 자신감

| 성별 \ 설명 자신도 | 아주 자신 | 약간 자신 | 대화해 봐야 알겠음 | 자신없음 | 의미없음 | 합계 |
|-------------|-------|-------|------------|------|------|-------|
| 남 | 665 | 434 | 461 | 72 | 277 | 1909 |
| | 34.8 | 22.7 | 24.1 | 3.8 | 14.5 | 85.4 |
| | 92.7 | 86.3 | 78.8 | 81.8 | 81.0 | |
| | 29.8 | 19.4 | 20.6 | 3.2 | 12.4 | |
| 여 | 52 | 69 | 124 | 16 | 65 | 326 |
| | 16.0 | 21.2 | 38.0 | 4.9 | 19.9 | 14.6 |
| | 7.3 | 13.7 | 21.2 | 18.2 | 19.0 | |
| | 2.3 | 3.1 | 5.5 | .7 | 2.9 | |
| 합계 | 717 | 503 | 585 | 88 | 342 | 2235 |
| | 32.1 | 22.5 | 26.2 | 3.9 | 15.3 | 100.0 |

그런데 한국사회의 우위성 설명자신도 한반도전쟁가능성 인식태도와
의 관계를 보면 전쟁가능성이 약간 낮다고 응답한 여론선도집단에서
는 한국사회의 우위성 설명을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해 봐야 한다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응답하였으며 (29.8%) 전쟁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응답한 계층일수록 우위성 설명자체는 의미없는 것이라고 생
각하는 성향이 높다.

< 표 6-4-3 > 전쟁가능성 인식도와 한국사회의 우위성 설명
자신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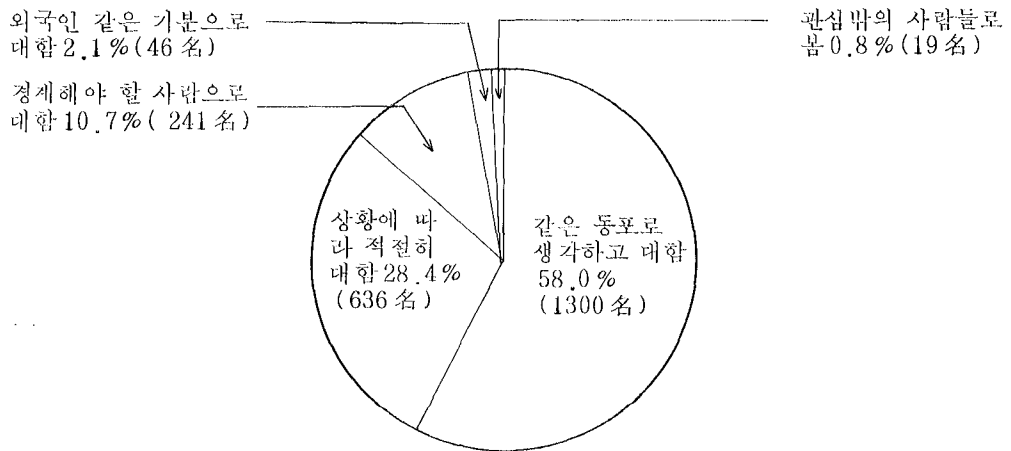
| 우위성설명 전쟁 가능성 인식도 | 아 주 자신있다 | 약 간 자신있다 | 만 나 서 대 화 해 봐야한다 | 별 로 자 신 없 다 | 우 위 성 설 명 자 체 가 의 미 없 다 | 합 계 |
|---------------------------|-----------------------------|----------------------------|----------------------------|--------------------------|-------------------------------|---------------|
| 아주 높다 | 91 44.6 12.7 4.1 | 43 21.1 8.6 1.9 | 32 15.7 5.5 1.4 | 6 2.9 6.9 .3 | 32 15.7 9.4 1.4 | 204 9.2 |
| 약간 높다 | 254 40.5 35.4 11.4 | 160 25.5 31.9 7.2 | 155 24.7 26.6 7.0 | 13 2.1 14.9 .6 | 45 7.2 13.2 2.0 | 627 28.1 |
| 보통이다 | 168 28.1 23.4 7.5 | 155 26.0 30.9 7.0 | 173 29.0 29.7 7.8 | 23 3.9 26.4 1.0 | 78 13.1 22.9 3.5 | 597 26.8 |
| 약간 낮다 | 109 25.6 15.2 4.9 | 97 22.8 19.3 4.4 | 127 29.8 21.8 5.7 | 16 3.8 18.4 .7 | 77 18.1 22.6 3.5 | 426 19.1 |
| 아주 낮다 | 95 25.3 13.2 4.3 | 47 12.5 9.4 2.1 | 96 25.6 16.5 4.3 | 29 7.7 33.3 1.3 | 108 28.8 31.8 4.8 | 375 16.8 |
| 합 계 | 717 32.2 | 502 22.5 | 583 26.2 | 87 3.9 | 340 15.3 | 2229 100.0 |

5. 北韓 住民 對面時의 態度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 6할정도의 여론선도계층(58.0%) 이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대할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한다는 입장(28.4%), 경계해야 할 사람들로 대한다는 입장(10.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동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북한 동포를 대한다는 견해가 6할로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에,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대하거나 외국인처럼 대한다는 견해역시 약 4할을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5> 북한 주민 대면시의 태도



그런데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보면 출신지역에 따라 이같은 북한 동포와의 대면시 취할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동포를 같은 동포로 대한다는 태도에는 지역관계없이 다수가 이에 민족 동포애를 보였지만, 북한 동포에 대한 경계와 상황에 따라 대처 하겠다는 것은 출신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경계한다는 항목에서 이북, 강원출신 여론선도계층일수록 경계심이 타지역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북한 동포를 대하겠다는 태도 역시 서울, 경기, 충청출신자들이 3할이 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활수준별로 보면 같은 동포 대하듯 해야 한다는 여론선도 계층은 자신이 아주 못사는 편 (73.5%) 일수록 동포애발휘가 높으며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중류 57.6%, 잘 사는 편 48.4%) 북한 동포를 외국인 대하듯 하든지 관심외의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사회지도계층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 동포가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중류계층을 비롯하여 못사는 지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아주 못사는 편 5.9%, 못사는 편 14.1%, 중류 9.8%, 잘 사는 편 12.6%)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계층도 전체의 3할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고르게 같은 동포대하듯 해야한다 (57.9%) 는 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6-5-1 > 출신지역과 북한동포 대면시 태도와의 관계

| 태도 지역 | 동포로 대함 | 외국인처럼 대함 | 관심밖으로 대함 | 경 계 |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함 | 합 계 |
|----------|-----------|-------------|-------------|------|------------------|-------------|
| 서 울 | 195 | 9 | 4 | 31 | 112 | 351 15.7 |
| | 55.6 | 2.9 | 1.1 | 8.8 | 31.9 | |
| | 15.0 | 19.6 | 21.1 | 12.9 | 17.6 | |
| | 8.7 | .4 | .2 | 1.4 | 5.0 | |
| 경 기 | 97 | 1 | 1 | 22 | 54 | 175 7.8 |
| | 55.4 | .6 | .6 | 12.6 | 30.9 | |
| | 7.5 | 2.2 | 5.3 | 9.1 | 8.5 | |
| | 4.3 | .0 | .0 | 1.0 | 2.4 | |
| 강 원 | 95 | 7 | 6 | 31 | 34 | 173 7.7 |
| | 54.9 | 4.0 | 3.5 | 17.9 | 19.7 | |
| | 7.3 | 15.2 | 31.6 | 12.9 | 5.3 | |
| | 4.2 | .3 | .3 | 1.4 | 1.5 | |
| 충 청 | 200 | 9 | 1 | 39 | 120 | 369 16.5 |
| | 54.2 | 2.4 | .3 | 10.6 | 32.5 | |
| | 15.4 | 19.6 | 5.3 | 16.2 | 18.9 | |
| | 8.9 | .4 | .0 | 1.7 | 5.4 | |
| 전 라 | 270 | 9 | 3 | 40 | 115 | 437 19.5 |
| | 61.8 | 2.1 | .7 | 9.2 | 26.3 | |
| | 20.8 | 19.6 | 15.8 | 16.6 | 18.1 | |
| | 12.1 | .4 | .1 | 1.8 | 5.1 | |
| 경 상 | 403 | 10 | 3 | 72 | 189 | 677 30.2 |
| | 59.5 | 1.5 | .4 | 10.6 | 27.9 | |
| | 31.1 | 21.7 | 15.8 | 29.9 | 29.7 | |
| | 18.0 | .4 | .1 | 3.2 | 8.4 | |
| 제 주 | 15 | 0 | 0 | .1 | 6 | 22 1.0 |
| | 68.2 | .0 | 0 | 4.5 | 27.3 | |
| | 1.2 | .0 | 0 | .4 | .9 | |
| | .7 | .0 | 0 | .0 | .3 | |
| 이 북 | 22 | 1 | 1 | 5 | 6 | 35 1.6 |
| | 62.9 | 2.9 | 2.9 | 14.3 | 17.1 | |
| | 1.7 | 2.2 | .3 | 2.1 | .9 | |
| | 1.0 | .0 | .0 | .2 | .3 | |
| 합 계 | 1297 | 46 | 19 | 241 | 636 | 2239 |
| | 57.9 | 2.1 | .8 | 10.8 | 28.4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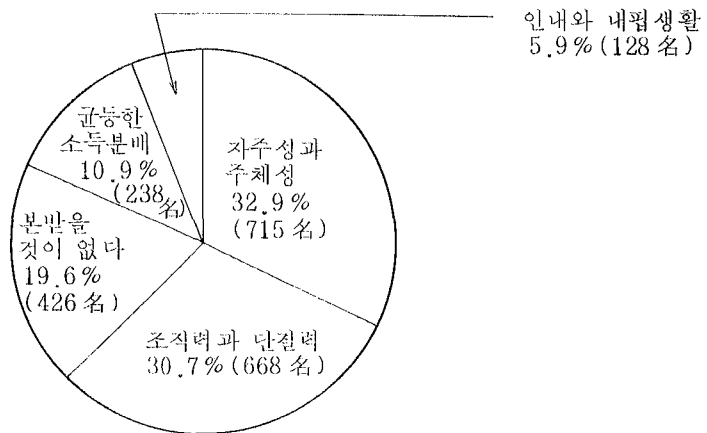
<표 6-5-2 > 생활수준에 따라 북한동포를 보는 시각

| 북한동포에 대한태도 생활 수준 | 같은 동포 | 외국인 대하듯 | 관심외 사람 | 경계의 대상 | 상황에 따라 | 합계 |
|---------------------|-------|------------|-----------|-----------|-----------|-------|
| 아주 못사는 편 | 25 | 3 | 1 | 2 | 3 | 34 |
| | 73.5 | 8.8 | 2.9 | 5.9 | 8.8 | 1.5 |
| | 1.9 | 6.5 | 5.3 | .8 | .5 | |
| | 1.1 | .1 | .0 | .1 | .1 | |
| 못사는 편 | 265 | 7 | 8 | 61 | 93 | 434 |
| | 61.1 | 1.6 | 1.8 | 14.1 | 21.4 | 19.4 |
| | 20.5 | 15.2 | 42.1 | 25.3 | 14.7 | |
| | 11.9 | .3 | .4 | 2.7 | 4.2 | |
| 중류 | 920 | 33 | 7 | 156 | 480 | 1596 |
| | 57.6 | 2.1 | .4 | 9.8 | 30.1 | 71.4 |
| | 71.0 | 71.7 | 36.8 | 64.7 | 75.7 | |
| | 41.2 | 1.5 | .3 | 7.0 | 21.5 | |
| 잘사는 편 | 77 | 2 | 3 | 20 | 57 | 159 |
| | 48.4 | 1.3 | 1.9 | 12.6 | 35.8 | 7.1 |
| | 5.9 | 4.3 | 15.8 | 8.3 | 9.0 | |
| | 3.4 | .1 | .1 | .9 | 2.6 | |
| 아주 잘사는 편 | 6 | 1 | 0 | 2 | 1 | 10 |
| | 60.0 | 10.0 | 0 | 20.0 | 10.0 | .4 |
| | .5 | 2.2 | 0 | .8 | .2 | |
| | .3 | .0 | 0 | .1 | .0 | |
| 합계 | 1295 | 46 | 19 | 241 | 634 | 2235 |
| | 57.9 | 2.1 | .9 | 10.8 | 28.4 | 100.0 |

6. 北韓體制에서 본받을 점

북한 공산체제가 갖는 성격 중 우리가 본받을 점에 관해서는 자주성과 주체성이라는 견해표명 여론선도계층은 약 3할정도로 가장 많고 (32.9%), 그 다음으로 조직력과 단결력 (30.7%), 본받을 것이 없다. (19.6%) 균등한 소득분배 (10.9%), 인내와 내핍생활 (5.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주성과 주체성 및 조직력과 단결력이 북한 공산체제로부터 우리 한국이 본받을 점이라는 입장이 전체 응답자의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6> 북한 체제에서 본받을 점



이를 한반도 전쟁가능성 인식도와 북한 공산체제에서 본받을 내용과의 관계를 보면 전쟁가능성이 아주 높다, 약간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지도 계층일수록 북한 체제에서 본받을 점은 조직력, 단결력이라고 보며 (39.9%) 전쟁 가능성이 약간 낮다, 아주 낮다고 응답한 지도 계층일수록 북한의 자주성, 주체성이 본받을 점이라고 보는 견해가 높다. (48.6%)

< 표 6-6-1 > 전쟁가능성 인식도와 북한 공산체제에서 본받을 점과의 관계

| 본받을 점 인식도 | 조직력 단결력 | 자주성 주체성 | 인내와 내핍생활 | 균등한 소득분배 | 본받을 것 없다 | 합계 |
|--------------|-----------------------------|----------------------------|--------------------------|---------------------------|----------------------------|---------------|
| 아주 높다 | 86 42.4 12.9 4.0 | 40 19.7 5.6 1.8 | 14 6.9 10.9 .6 | 11 5.4 4.6 .5 | 52 25.6 12.3 2.4 | 203 9.4 |
| 약간 높다 | 229 37.3 34.3 10.5 | 135 22.0 18.9 6.2 | 42 6.8 32.8 1.9 | 52 8.5 21.8 2.4 | 156 25.4 36.8 7.2 | 614 28.3 |
| 보통이다 | 187 32.1 28.0 8.6 | 189 32.4 26.5 8.7 | 31 5.3 24.2 1.4 | 66 11.3 27.7 3.0 | 110 18.9 25.9 5.1 | 583 26.9 |
| 약간 낮다 | 97 23.8 14.5 4.5 | 174 42.6 24.4 8.0 | 26 6.4 20.3 1.2 | 56 13.7 23.5 2.6 | 55 13.5 13.0 2.5 | 408 18.8 |
| 아주 낮다 | 68 18.7 10.2 3.1 | 176 48.5 24.6 8.1 | 15 4.1 11.7 .7 | 53 14.6 22.3 2.4 | 51 14.0 12.0 2.3 | 363 16.7 |
| 합계 | 667 30.7 | 714 32.9 | 128 5.9 | 238 11.0 | 424 19.5 | 2171 100.0 |

또한 북한 사회에서 본받을 점과 지도계층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고졸이하의 저학력계층일수록 자주성, 주체성보다 조직력, 단결력 면에서 북한을 더욱 본받을 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대학과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집단일수록 조직력, 단결력보다 자주성, 주체성이 본받을 점이거나 균등소득분배를 본받을만 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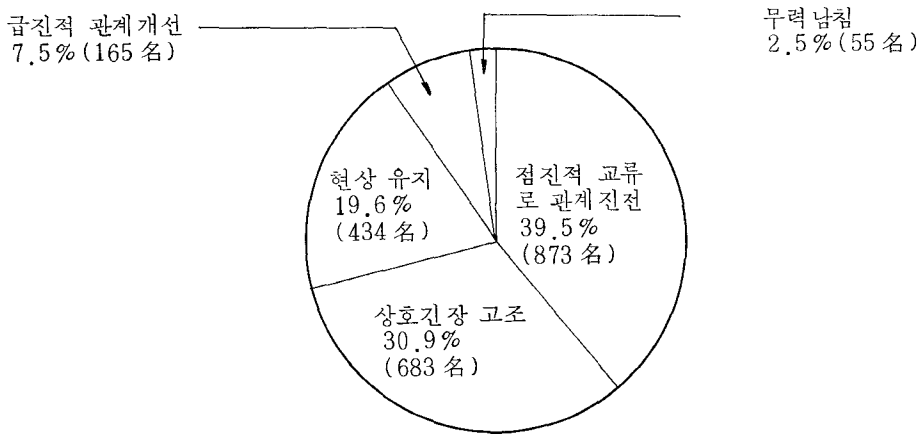
<표 6-6-2> 교육수준과 북한체제에서 본받을 점과의 관계

| 교육수준 \ 본받을 점 | 조직력 단결력 | 자주성 주체성 | 인내·내핍 생활 | 균등소득 분배 | 없음 | 합계 |
|--------------|-----------------------------|-----------------------------|---------------------------|----------------------------|-----------------------------|---------------|
| 무학 | 1 25.0 .1 .0 | 1 25.0 .1 .0 | 0 0 0 0 | 0 0 0 0 | 2 50.0 .5 .1 | 4 .2 |
| 국졸 | 4 44.4 .6 .2 | 0 0 0 0 | 0 0 0 0 | 0 0 0 0 | 5 55.6 1.2 .2 | 9 .4 |
| 중졸 | 23 54.8 3.4 1.1 | 4 9.5 .6 .2 | 1 2.4 .8 .0 | 3 7.1 1.3 .1 | 11 26.2 2.6 .5 | 42 1.9 |
| 고졸 | 169 46.6 25.3 7.8 | 54 14.9 7.6 2.5 | 22 6.1 17.2 1.0 | 23 6.3 9.7 1.1 | 95 26.2 22.3 4.4 | 363 16.7 |
| 대졸 | 381 28.8 57.1 17.5 | 501 37.9 70.3 23.1 | 61 4.6 47.7 2.8 | 144 10.9 60.5 6.6 | 234 17.7 54.9 10.8 | 1321 60.8 |
| 대학원졸 | 89 20.6 13.3 4.1 | 153 35.3 21.5 7.0 | 44 10.2 34.4 2.0 | 68 15.7 28.6 3.1 | 79 18.2 18.5 3.6 | 433 19.9 |
| 합계 | 667 30.7 | 713 32.8 | 128 5.9 | 238 11.0 | 426 19.6 | 2172 100.0 |

7. 金日成 死後 南北關係 展望

우리나라 여론선도 계층은 김일성 사망후의 남북관계의 변화에 관해서는 점진적 교류로 관계가 진전되리라고 전망하는 견해가 전체의 약 4할정도(3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상호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입장(30.9%), 현재 상태대로의 현상유지(19.6%) 관계개선 급진전(7.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발전적으로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전체 응답자의 약 5할 가까운 정도(47.0%)인 반면에 상호 긴장고조 내지는 무력남침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약 3할정도(33.4%)로 대체로 한국여론선도계층은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표 6-7> 김일성 사후 관계전망



이것은 1987년도의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6-7-1 > 김일성 사망후 남북관계 전망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무력남침 | 상호긴장 고 조 | 현상유지 | 점진적교류 로관계진전 | 급진적 관계개선 |
|------|-------------|------|-------------|------|----------------|-------------|
| 1987 | 국 민 | 5.0 | 40.0 | 27.7 | 21.3 | 4.8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2.5 | 30.9 | 19.6 | 39.5 | 7.5 |

통일장애요인과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지도자의 무성의를 통일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반응한 지도계층일수록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는 상호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본 반면에 다른 요인을 제시한 사람들은 점진적 교류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여러가지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점진적 교류가 발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며, 북한지도자가 성의를 보인다면 상호긴장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 표 6-7-2 > 통일 장애요인과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
전망과의 상관관계

| 통일 장애요인 \ 김일성사후 남북관계 | 무력 남침 | 상호 긴장 | 현상 유지 | 점진적교류 | 관계개선 급진전 | 합 계 |
|----------------------|-------------------------|----------------------------|----------------------------|----------------------------|--------------------------|---------------|
| 사상체제의 대립 | 15 3.0 27.3 .7 | 174 34.3 25.5 7.9 | 94 18.5 22.1 4.3 | 192 37.8 22.1 8.8 | 33 6.5 20.4 1.5 | 508 23.2 |
| 미·소·중·일의 이해관계 대립 | 9 1.8 16.4 .4 | 153 31.1 22.4 7.0 | 101 20.5 23.8 4.6 | 187 38.0 21.5 8.5 | 42 8.5 25.9 1.9 | 492 22.4 |
| 북한지도자의 무성의 | 6 4.9 10.9 .3 | 46 37.4 6.7 2.1 | 11 3.9 2.6 .5 | 45 36.6 5.2 2.1 | 15 12.2 9.3 .7 | 123 5.6 |
| 한국지도자의 무성의 | 5 5.5 9.1 .2 | 12 13.2 1.8 .5 | 30 33.0 7.1 1.4 | 31 34.1 3.6 1.4 | 13 14.3 8.0 .6 | 91 4.2 |
| 남북한 상호불신 | 10 2.3 18.2 .5 | 106 24.8 15.5 4.8 | 84 19.7 19.8 3.8 | 200 46.8 23.0 9.1 | 27 6.3 16.7 1.2 | 427 19.5 |
| 남북한의 국내 정치 불안 | 1 1.2 1.8 .0 | 35 42.7 5.1 1.6 | 14 17.1 3.3 .6 | 28 34.1 3.2 1.3 | 4 4.9 2.5 .2 | 82 3.7 |
|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화 | 9 1.9 16.4 .4 | 155 33.1 22.7 7.1 | 91 19.4 21.4 4.2 | 185 39.5 21.3 8.4 | 28 6.0 17.3 1.3 | 468 21.4 |
| 합 계 | 55 2.5 | 682 31.1 | 425 19.4 | 868 39.6 | 162 7.4 | 2192 100.0 |

그리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선도계층일수록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에 대해 긴장이 고조된다는 관계개선에 회의적인 경향이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에 부정적인 응답자일수록 김일성 사망후 남북관계 개선은 낙관적 혹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 표 6-7-3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김일성 사망후 남북관계 분석

| 남북관계 통일방안 평가 | 무려 남침 | 상 호 긴장고조 | 현상유지 | 점진적개선 | 급 진 적 | 합 계 |
|--------------------|-------|-------------|------|-------|-------|-------|
| 그 대 로 | 9 | 75 | 21 | 49 | 12 | 166 |
| | 5.4 | 45.2 | 12.7 | 29.5 | 7.2 | 7.7 |
| | 17.3 | 11.2 | 4.9 | 5.7 | 7.4 | |
| | .4 | 3.5 | 1.0 | 2.3 | .6 | |
| 통일·평화부각 | 22 | 317 | 150 | 325 | 62 | 876 |
| | 2.5 | 36.2 | 17.1 | 37.1 | 7.1 | 40.4 |
| | 42.3 | 47.5 | 35.0 | 37.8 | 38.3 | |
| | 1.0 | 14.6 | 6.9 | 15.0 | 2.9 | |
| 전면 수정 | 6 | 88 | 117 | 204 | 43 | 458 |
| | 1.3 | 19.2 | 25.5 | 44.5 | 9.4 | 21.1 |
| | 11.5 | 13.2 | 27.3 | 23.7 | 26.5 | |
| | .3 | 4.1 | 5.4 | 9.4 | 2.0 | |
| 추 가 | 7 | 61 | 44 | 111 | 27 | 250 |
| | 2.8 | 24.4 | 17.6 | 44.4 | 10.8 | 11.5 |
| | 13.5 | 9.1 | 10.3 | 12.9 | 4.3 | |
| | .3 | 2.8 | 2.0 | 5.1 | 11.1 | |
| 모 림 | 8 | 127 | 96 | 170 | 18 | 419 |
| | 1.9 | 30.3 | 22.9 | 40.6 | 4.3 | 19.3 |
| | 15.4 | 19.0 | 22.4 | 19.8 | 11.1 | |
| | .4 | 5.9 | 4.4 | 7.9 | .8 | |
| 합 계 | 52 | 668 | 428 | 859 | 162 | 2169 |
| | 2.4 | 30.8 | 19.7 | 39.6 | 7.5 | 100.0 |

第 4 節 統一問題에 대한 關心度

개 요

①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는 한국 여론 선도계층의 절대다수가 當爲性을 느끼고 있으며, 통일이 필요한 理由로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 (약 5 할), 민족동질성의 회복 (2.5 할) 등을 들고 있다.

10 대와 20 대는 민족 동질성회복, 30 대와 40 대는 민족 번영과 발전, 50 대와 60 대는 전쟁공포에서의 해방을 상대적으로 당위성의 논거로 주장한다.

② 통일의 可能性에 대하여는 약 6 할정도의 응답자들이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중 공산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극단적 낙관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역적으로 제주와 이북출신 가운데 소수의 극단적 비관론자가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③ 통일후의 이념체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비율이 자본주의 체제의 혼합체제를 선호하고 그 다음이 새로운 이념체제,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의 순이나 1977년부터 큰 흐름을 추적해보면 혼합체제 내지 새로운 이념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법조인, 예체능인, 정치인 등이 우파적 보수성향을 강력히 선호하여 진보적 성향을 나타낸다. 또 통일후의 정치체제로서 자본주의체제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통일방법으로서 점진적 교류를 중시하고있고, 공산주의적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연

방정부 수립에 의한 신속한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 ④ 남북한중 어느쪽이 통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가 소극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5할정도로 가장 우세하고 이중 대학교 학생회 간부의 경우 0.5할 정도는 북한을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진체적으로는 북한(10.7%)보다 남한(36.4%)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통일의 당위성을 9.5할이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심각한 불만 및 불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⑤ 통일의 저해요인으로서 과거 사상체계의 대립이 주류를 이루던 응답이었던 것에 반해 강대국 및 지도집단의 이해관계를 주목하는 추세가 집중되고 있다.

1. 統一의 目的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여론 선도 계층 전체 응답자의 약 반수정도(48.9%)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민족동질성의 회복(25.0%), 민족통합국가의 성취(18.4%),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6.1%), 이산가족의 결합(1.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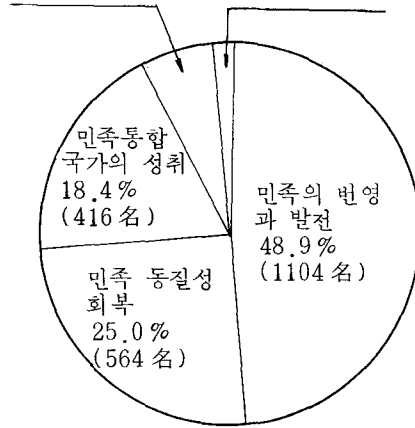
따라서 남북의 민족 공존·공영 차원에서 통일을 보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연령면에서 보면 10대에서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42.1%), 민족동질성회복(36.8%)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20대에서도 민족 번영과 발전(48.4%), 민족동질성회복(32.8%)이며 30대와 40대

<表 2 - 1> 統一의 目的

전쟁공포로부터 해방
6.1% (137名)

이산가족 결합
1.5% (34名)



< 표 2-1-2 > 연령에 따른 통일의 목적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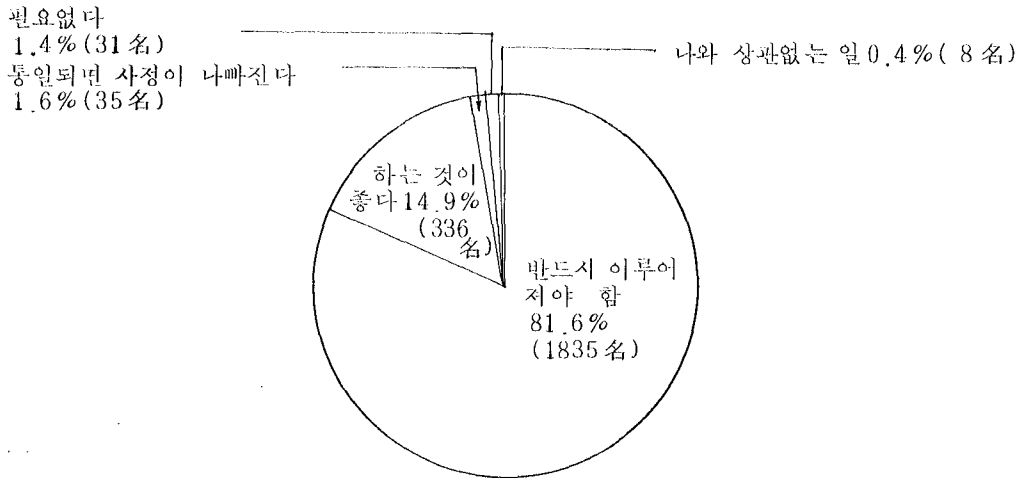
| 연령 | 통일이돼야 할 이유 | 이산가족 결합 | 민족동질성 회복 | 민족의번영과 발전 | 전쟁공포에서의해방 | 민족통합 국가의 성취 | 합 계 |
|------|------------|---------|----------|-----------|-----------|-------------|------|
| 10 代 | 0.0 | 0.0 | 36.8 | 42.1 | 5.3 | 15.8 | 19.8 |
| 20 代 | 7.1 | 1.1 | 209 | 308 | 19 | 93 | 637 |
| 30 代 | 10.5 | 1.5 | 168 | 356 | 37 | 115 | 6868 |
| 40 代 | 14.7 | 0.5 | 93 | 289 | 41 | 73 | 501 |
| 50 代 | 25.5 | 2.5 | 77 | 127 | 35 | 112 | 360 |
| 60 代 | 5.8 | 3 | 10 | 16 | 3 | 20 | 52 |
| 이 상 | 8.8 | 8.8 | 1.8 | 30.8 | 5.8 | 38.5 | 2.3 |
| 합 계 | 34.5 | 1.5 | 564 | 1104 | 136 | 416 | 2255 |

에서도 역시 같은순 (51.9 % , 24.5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0 대에서는 민족번영과 발전 (35.3 %) , 민족통합국가의 성취 (31.1%) 로 바뀌며 60 대이상에서는 민족통합국가성취 (38.5 %)가 최우선 이유로 나타난다.

2. 統一의 當爲性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의 약 8할이상 (81.6 %)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 (14.9 %)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까지도 통일에 대한 염원내지 필요인식이 절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 - 2 > 統一의 當爲性



이같은 여론선도계층의 의식은 같은해인 1988년 조사된 일반국민의 통일당위성에 대한 의식보다 상당히 적극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인 차이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1980년 통일연주소 연수대상자들보다도 통일에 대한 타당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하겠다.

< 표 2-2-1 >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하는것이 좋다 | 통일되면 상황이 나빠진다 | 필요 없다 | 나와 상관 없는 일이다 |
|------|----------------|-------------|---------|---------------|-------|--------------|
| 1980 | 통일연주소 연수대상자 | 77.5 | 15.8 | 0.9 | 4.9 | 0.4 |
| 1988 | 국 민 | 63.5 | 20.8 | 7.4 | 6.5 | 1.5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81.6 | 14.9 | 1.6 | 1.4 | 0.4 |

그런데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결합과 전쟁공포에서의 해방을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로 선택한 사람들일수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보다 낮으며, 이산가족 결합을 통일이유로 든 사람일수록 통일이 되면 현재보다 나빠진다는 응답이 9.1%로서 여타 응답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리고 전쟁공포에서의 해방을 통일이유로 내세운 사람일수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 6할로 높은편이다.

이것을 연령별로 본다면 각 연령층에서 한결같이 통일의 당위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특히 60대이상의 연령층에서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표 2-2-2 >

통일의 목적과 통일의 당위성의 관계

| 결 혜 이유 | 전혀상관 | | 통일이되면 | | 통일하는 것이더좋다 | 반 드 시 이 루 어 야 함 | 합 계 |
|------------------|--------|------------------|-------|------|---------------|--------------------------------------|--------|
| | 없 다 | 나 빠 진 다 | 통일불필요 | 통일필요 | | | |
| 이산가족 | 0 | 3 | 0 | 5 | 25 | | |
| 결 합 | 0 | 9.1 | 0 | 15.2 | 75.8 | 33 | |
| | 0 | 8.6 | 0 | 1.5 | 1.4 | 1.5 | |
| | 0 | .1 | 0 | .2 | 1.1 | | |
| 민족동질성 | 1 | 9 | 8 | 77 | 767 | | |
| | .2 | 1.6 | 1.4 | 13.7 | 83.1 | 562 | |
| 회 복 | 14.3 | 25.7 | 25.8 | 22.9 | 25.6 | 25.1 | |
| | .0 | .4 | .4 | 3.4 | 20.9 | | |
| 민족의번영 | 2 | 16 | 11 | 183 | 878 | | |
| | .2 | 1.5 | 1.0 | 16.8 | 80.5 | 1091 | |
| 과 발 전 | 28.6 | 45.7 | 35.5 | 54.5 | 48.1 | 48.8 | |
| | .1 | .7 | .5 | 8.2 | 39.2 | | |
| 전쟁공포 | 3 | 6 | 8 | 41 | 79 | | |
| | .2 | 4.4 | 5.8 | 29.9 | 57.7 | 137 | |
| 에 서 해 방 | 2.9 | 17.1 | 25.8 | 12.2 | 4.3 | 6.1 | |
| | 42.1 | .3 | .4 | 1.8 | 3.5 | | |
| 민족통합 | 1 | 2 | 4 | 30 | 375 | | |
| | .2 | .1 | 1.0 | 7.3 | 90.8 | 413 | |
| 국가의성취 | 14.3 | 2.9 | 12.9 | 8.9 | 20.5 | 18.5 | |
| | .0 | .0 | .2 | 1.3 | 16.8 | | |
| | 7 | 35 | 31 | 336 | 1825 | 2237 | |
| | .3 | 1.6 | 1.4 | 15.0 | 81.6 | 100.0 | |

< 표 2-2-3 >

연령에 따른 통일의 당위성

| 연령 | 견 해 나와 무관 | 통 일 후 사정악 화 | 통일의필요 성못느낌 | 통 일 함 이 중 음 | 반 드 시 통일되어야함 | 합 계 |
|------------|--------------|----------------|---------------|----------------|-----------------|---------------|
| 10 대 | 0 | 0 | 3 | 4 | 2 | 19 .8 |
| | 0 | 0 | 8 | 1 | 2 | |
| | 0 | 0 | 7 | 2 | 7 | |
| | 0 | 0 | 1 | 2 | 5 | |
| 20 " | 3 | 17 | 8 | 92 | 516 | 637 28.3 |
| | .5 | 2.7 | 1.3 | 14.4 | 81.0 | |
| | 25.5 | 48.6 | 25.8 | 27.4 | 28.1 | |
| | 1 | .8 | .4 | 4.1 | 23.0 | |
| 30 " | 2 | 8 | 7 | 121 | 540 | 679 30.2 |
| | .3 | 1.2 | 1.0 | 17.8 | 79.5 | |
| | 25.0 | 22.9 | 22.6 | 36.0 | 29.4 | |
| | .1 | .4 | .3 | 5.4 | 24.0 | |
| 40 " | 1 | 3 | 8 | 71 | 416 | 499 22.2 |
| | .2 | .6 | 1.6 | 14.2 | 83.4 | |
| | 12.5 | 8.6 | 25.8 | 21.1 | 22.7 | |
| | .0 | .1 | .4 | 3.2 | 18.5 | |
| 50 " | 1 | 5 | 4 | 47 | 303 | 361 16.1 |
| | .3 | 1.4 | 1.1 | 13.0 | 83.9 | |
| | 12.5 | 14.3 | 1.9 | 14.0 | 16.5 | |
| | .0 | .2 | .2 | 2.1 | 13.5 | |
| 60 대 이상 | 1 | 2 | 1 | 1 | 47 | 52 2.3 |
| | 1.9 | 3.8 | 1.9 | 1.9 | 90.4 | |
| | 12.5 | 5.7 | 3.2 | .3 | 2.6 | |
| | .0 | .1 | .0 | .0 | 2.1 | |
| 합계 | 8 .4 | 35 1.6 | 31 1.4 | 336 15.0 | 1834 81.6 | 2247 100.0 |

생활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자기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 하는 여론 선도 계층일수록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수있다. (아주못사는편 94.3%, 중류 82.9%, 잘사는편 65.6%)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은 계층은 통일이되면 현재보다 나으리라는 여건변화에 기대한다고 풀이될수 있다.

한편은 통일은 하는것이 좋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어떤 경제수준의 사람이건 공통으로 인식하는데 통일에 대한 긍정적시각(하는것이 좋음 & 반드시 해야 함)은 거의 모든 수준에 걸쳐 90%를 넘고 있으며 통일후 사정이 악화되리라는 응답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그 우려의 정도가 커짐(못사는편 0.9% 중류 1.4% 잘사는편 4.5% 아주잘사는편 11.1%)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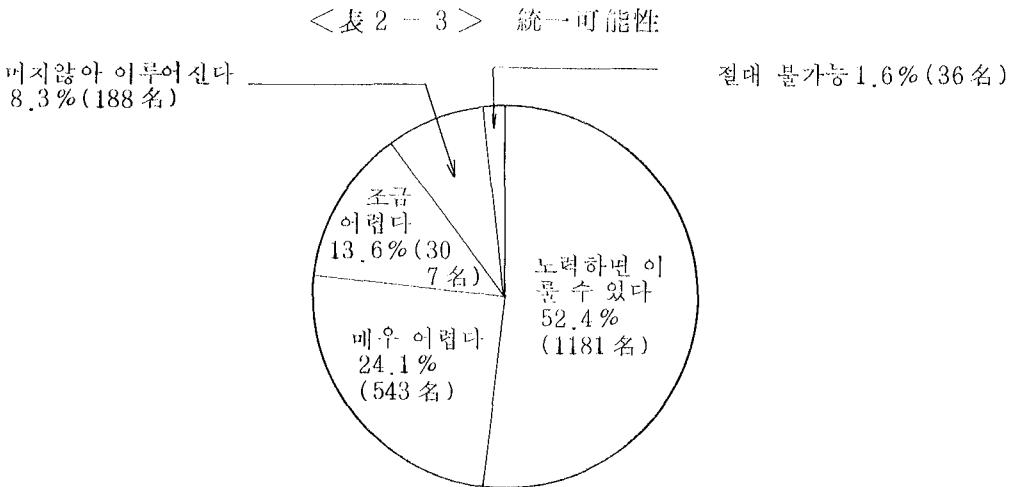
< 표 2-2-4 >

생활수준과 통일당위성과의 관계

| 평 소 생활 수준 | 통일관 나 와 무 관 | 통 일 후 | 통일필요성 | 하 는 것 이 | 반 드 시 | 합 계 |
|-----------------|----------------|-------|-------|---------|-------|---------------|
| | | 사정악화 | 없 음 | 중 음 | 해 야 함 | |
| 아주 못 삼 | 0 | 2 | 0 | 0 | 33 | 35 1.6 |
| | 0 | 5.7 | 0 | 0 | 94.3 | |
| | 0 | 5.7 | 0 | 0 | 1.8 | |
| | 0 | .1 | 0 | 0 | 1.5 | |
| 못 사는 편 | 4 | 4 | 4 | 65 | 357 | 435 19.4 |
| | .9 | .9 | .9 | 14.9 | 82.1 | |
| | 50.0 | 11.4 | 12.9 | 19.4 | 19.5 | |
| | .2 | .2 | .2 | 2.9 | 15.9 | |
| 중 류 | 3 | 21 | 23 | 225 | 1329 | 1603 71.5 |
| | .2 | 1.3 | 1.4 | 14.0 | 82.9 | |
| | 37.5 | 60.0 | 74.2 | 67.2 | 72.7 | |
| | .1 | .9 | 1.0 | 10.0 | 59.3 | |
| 잘 사는 편 | 1 | 7 | 4 | 42 | 103 | 157 7.0 |
| | .6 | 4.5 | 2.5 | 26.8 | 65.6 | |
| | 12.5 | 20.0 | 12.9 | 12.5 | 5.6 | |
| | .0 | .3 | .2 | 1.9 | 4.6 | |
| 아 주 잘 사는 편 | 0 | 1 | 0 | 3 | 5 | 9 .4 |
| | 0 | 11.1 | 0 | 33.3 | 55.6 | |
| | 0 | 2.9 | 0 | .9 | .3 | |
| | 0 | 0 | 0 | .1 | .2 | |
| 합 계 | 8 | 35 | 31 | 335 | 1829 | 2241 100.0 |
| | .4 | 1.6 | 1.4 | 14.9 | 81.6 | |

3. 統一可能性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막론하고 대체로 낙관적 견해가 6 할을 차지하고 있다. 비관적 견해는 약 4 할에 이르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출신자들이 통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는데 동의 하지 않는데 반해 제주 (9.1 %)와 이북 (5.7 %) 출신가운데 극단적 비관론자들이 나타난다.



이념체제 선호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제도가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42.7%이나, 공산사회주의제도를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는 겨우 1 할을 넘는 정도의 사람들 (14.4 %)만이 통일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매우 또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

그리하여 공산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중에는 9 할에 육박하는 사람 (85.6 %)들이 통일은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거나 조만간 이루어

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공산사회주의 체제이념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해 낙관적인 경향을 갖는것이 특징이다.

< 표 2-3-1 > 선호체제와 통일가능성과의 관계

| 통일의 체제가능성 의우월성 | 절대불가능 | 매우어려움 | 조금어려움 | 노력하면 성취 | 머지않아 성취 | 합 계 |
|----------------------|--------------------------|-----------------------------|----------------------------|-----------------------------|---------------------------|---------------|
| 자유민주 주의 제도 | 26 1.6 72.2 1.2 | 416 26.2 77.3 18.6 | 221 13.9 72.5 9.9 | 821 51.6 70.4 36.8 | 106 6.7 57.0 4.7 | 1590 71.2 |
| 공산사회 주의 제도 | 3 2.5 8.3 .1 | 8 6.8 1.5 .4 | 6 5.1 2.0 .3 | 68 57.6 5.8 3.0 | 33 28.0 17.7 1.5 | 118 5.3 |
| 혼합절충 체 제 | 7 1.6 19.4 .3 | 96 21.3 17.8 4.3 | 63 14.0 20.7 2.8 | 244 54.1 20.9 10.9 | 41 9.1 22.0 1.8 | 451 20.2 |
| 별차이없다 | 0 0 0 0 | 17 23.9 3.2 .8 | 15 21.1 4.9 .7 | 33 46.5 2.8 1.5 | 6 8.5 3.2 .3 | 71 3.2 |
| 합 계 | 36 1.6 | 538 24.1 | 305 13.7 | 1167 52.3 | 186 8.3 | 2232 100.0 |

교육수준과 통일가능성인식과의 관계를 보면 무학인 경우 통일가능 (80 %) 을 매우 높게 보며 국졸인 경우 역시 통일가능 (50 %) 이 높은 반면 통일이 어렵거나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경향은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강한데 중졸 이상인 경우 통일가능성이 50 ~ 60 %에 달해 상당히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통일 가능성은 점점 회복하라고 보는 경향은 중졸 18.2 %, 고졸 24.1 %, 대졸 25.1 %, 대학원졸 28.9 %를 보여주어 고학력일수록 통일가능성에 비관적 견해는 갖고 있다.

< 표 2-3-2 >

교육수준에 따른 통일가능성

| 통일의 교육 수준 | 통일 가능 성 | 절대불가능 | 매우어려움 | 조금어려움 | 노력하면가능 | 머지않아성사 | 합 계 |
|-----------------|---------------|-------|-------|-------|--------|--------|---------------|
| 국 졸 | | 0 | 1 | 0 | 3 | 1 | 5 .2 |
| | | 0 | 20.0 | 0 | 60.0 | 20.0 | |
| | | 0 | .2 | 0 | .3 | .5 | |
| | | 0 | .0 | 0 | .1 | .0 | |
| 국 졸 | | 1 | 4 | 1 | 5 | 1 | 12 .5 |
| | | 8.3 | 33.3 | 8.3 | 42.7 | 8.3 | |
| | | 2.8 | .7 | .3 | .4 | .5 | |
| | | .0 | .2 | .0 | .2 | .0 | |
| 중 졸 | | 1 | 7 | 7 | 24 | 5 | 44 2.0 |
| | | 2.3 | 15.9 | 15.9 | 54.5 | 11.4 | |
| | | 2.8 | 1.3 | 5.3 | 2.0 | 2.7 | |
| | | .0 | .3 | .3 | 1.1 | .2 | |
| 고 졸 | | 10 | 83 | 63 | 196 | 28 | 380 16.9 |
| | | 2.6 | 21.8 | 16.6 | 51.6 | 7.4 | |
| | | 27.8 | 15.3 | 20.7 | 16.6 | 14.9 | |
| | | .4 | 3.7 | 2.8 | 8.7 | 1.2 | |
| 대 졸 | | 16 | 326 | 165 | 721 | 136 | 1364 60.6 |
| | | 1.2 | 23.9 | 12.1 | 52.9 | 10.0 | |
| | | 44.4 | 60.1 | 54.1 | 61.1 | 72.3 | |
| | | .7 | 14.5 | 7.3 | 32.0 | 6.0 | |
| 대학원졸 | | 8 | 121 | 69 | 231 | 17 | 446 19.8 |
| | | 1.8 | 27.1 | 15.5 | 51.8 | 3.8 | |
| | | 22.2 | 22.3 | 22.6 | 19.6 | 9.0 | |
| | | .4 | 5.4 | 3.1 | 10.3 | .8 | |
| 합계 | | 36 | 542 | 305 | 1180 | 188 | 2251 100.0 |
| | | 1.6 | 24.1 | 13.5 | 52.4 | 8.4 | |

한편 남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내용에 만족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높고 남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을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2-3-3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내용평가와 통일가능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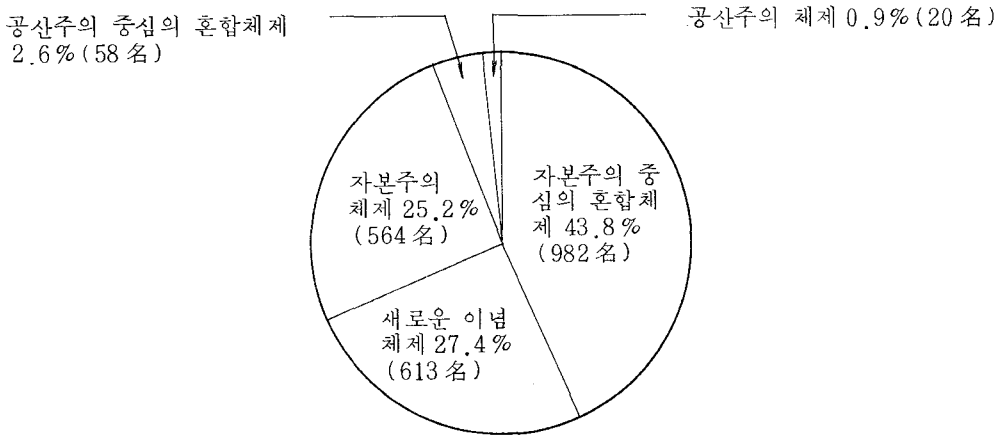
| 남한 통일방안 평가 | 통일 가능성 | 절대불가 | 매우힘듦 | 조금힘듦 | 노력하면 가능 | 곧이어어짐 | 합 계 |
|------------------|-----------|-------------------------|----------------------------|----------------------------|-----------------------------|---------------------------|---------------|
| 그대로 | | 4 2.4 11.4 .2 | 42 24.9 8.0 1.9 | 26 15.4 8.5 1.2 | 78 46.2 6.7 3.5 | 19 11.2 10.1 .9 | 169 7.6 |
| 통일평화 부 각 | | 14 1.6 40.0 .6 | 193 21.8 36.8 8.7 | 122 13.8 39.9 5.5 | 500 56.4 43.1 22.6 | 57 6.4 30.3 2.6 | 886 40.0 |
| 전면수정 | | 6 1.2 17.1 3 | 87 18.0 16.6 3.9 | 51 10.5 16.7 2.3 | 276 57.0 23.8 12.5 | 64 13.2 34.0 2.9 | 484 21.9 |
| 추 가 | | 1 .4 2.9 .0 | 64 25.6 12.2 2.9 | 38 15.2 12.4 1.7 | 130 52.0 11.2 5.9 | 17 6.8 9.0 .8 | 250 11.3 |
| 모 름 | | 10 2.4 28.6 .5 | 138 32.5 26.3 6.2 | 69 16.3 22.5 3.1 | 176 41.5 15.2 8.0 | 31 7.3 16.5 1.4 | 424 19.2 |
| 합 계 | | 35 1.6 | 524 23.7 | 306 13.8 | 1160 52.4 | 188 8.5 | 2213 100.0 |

4. 統一後의 理念體制

통일후 고려하는 이념체제에 관해서는 전체의 약 4할이상 (43.8 %) 이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를 선택하고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이념체제 (27.4 %), 현행의 자본주의 체제 (25.2 %),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2.6 %), 공산주의 체제 (0.9 %)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본주의 내지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를 7할정도가 선호하고 있지만, 큰 변화의 흐름은 혼합절충 내지 새로운 이념체제를 7.3할 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 2 - 4 > 統一後의 理念體制



이것을 국민 또는 국민계층의 통일인식성향과 비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후의 이념체제로서 혼합절충 내지 새로운 이념체제를 지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국민보다도 여론선도계층은 그러한 경향을 강하게 된다.

< 표 2-4-1 >

통일후의 이념체제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자 본 주 의 | 공 산 주 의 | 혼 합 절 충 | 공 산주의 이외체제 | 새 로 운 이념체제 |
|------|----------------|------------|------------|------------|---------------|---------------|
| 1982 | 국 민 | 76.3 | 0.5 | 12.5 | 8.6 | |
| 1985 | 공 직 자 | 60.92 | 1.36 | 22.07 | 15.19 | |
| 1986 | 고 교 생 | 69 | 0.5 | 23.39 | 6.22 | |
| 1986 | 고교교사 | 78.49 | | 10.81 | 8.67 | |
| 1986 | 북한주민 (귀순용사) | 19 | 54 | 22 | | |
| 1986 | 대 학 생 | 47.8 | 268 | 38.28 | 8.59 | |
| 1987 | 대 학 생 | 41.8 | 3.8 | 47.3 | 6.9 | |
| 1987 | 국 민 | 46.0 | 0.9 | 14.5 | | 37.2 |
| 1988 | 국 민 | 43.4 | 0.7 | 19.8 | | 35.5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25.2 | 0.9 | 46.4 | | 27.4 |

이같은 통일후의 이념체제에 대한 선호를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31.6%), 예체능인 (32.6%), 법조인 (35%), 경제 및 노동단체 간부 (29.6%)의 경우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며 종교인 (45.1%), 교수 (30.7%)는 새로운 이념이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학생간부의 경우는 9.3%가 공산주의, 21.1%가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42.3%가 새로운 이념체제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정치가, 법조인, 예체능인 등이 보수적 경향을 보이며 대학생간부, 종교인 등이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 표 2-4-2 > 직업과 통일이후의 이념체제와의 관계

| 통일이후 의이념 직업 체제 | 공산주의 | 자본주의 | 공산주의 중심 혼합체제 | 자본주의 중심 혼합체제 | 새로운 이념체제 | 합계 |
|----------------------|----------------------|----------------------------|-----------------------|----------------------------|---------------------------|------------------------|
| 공무원 | 1 .2 5.0 .0 | 141 31.6 25.0 6.3 | 1 .2 1.7 .0 | 210 47.1 21.4 9.4 | 92 20.6 15.0 4.1 | 1 .2 33.3 .0 |
| 정치인 | 0 0 0 0 | 23 26.1 4.1 1.0 | 0 0 0 0 | 42 47.7 4.3 1.9 | 21 23.9 3.4 .9 | 2 2.3 66.7 .1 |
| 법조인 | 0 0 0 0 | 7 35.0 1.2 .3 | 0 0 0 0 | 11 55.0 1.1 .5 | 2 10.0 .3 .1 | 0 0 0 0 |
| 기업체간부 | 0 0 0 0 | 47 23.0 8.3 2.1 | 3 1.5 5.2 .1 | 103 50.5 10.5 4.6 | 51 25.0 8.3 2.3 | 0 0 0 0 |
| 경제 노동단체간부 | 0 0 0 0 | 29 29.6 5.1 1.3 | 0 0 0 0 | 48 49.0 4.9 2.1 | 21 21.4 3.4 .9 | 0 0 0 0 |
| 언론인 | 0 0 0 0 | 22 22.0 3.9 1.0 | 2 2.0 3.4 1 | 49 49.0 4.9 2.1 | 27 27.0 4.4 1.2 | 0 0 0 0 |
| 종교인 | 1 1.2 5.0 0 | 19 23.2 3.4 .8 | 1 1.2 1.7 .0 | 24 29.3 2.4 1.1 | 37 45.1 6.0 1.7 | 0 0 0 0 |

| 통일이후 의이념 직업 체제 | 공 산 주 의 | 자 본 주 의 | 공 산 주 의 중 심 의 혼 합 체 제 | 자 본 주 의 중 심 의 혼 합 체 제 | 새 로 운 이 념 체 제 | 합 계 |
|-----------------------|---------|---------|-----------------------------|-----------------------------|------------------|---------------|
| 예 체 능 인 | 0 | 15 | 0 | 21 | 10 | 46 2.1 |
| | 0 | 32.6 | 0 | 45.7 | 21.7 | |
| | 0 | 2.7 | 0 | 2.1 | 1.6 | |
| | 0 | .7 | 0 | .9 | .4 | |
| 교 수 | 0 | 34 | 4 | 118 | 69 | 225 10.0 |
| | 0 | 15.1 | 1.8 | 52.4 | 30.7 | |
| | 0 | 6.0 | 6.9 | 12.0 | 11.3 | |
| | 0 | 1.5 | .2 | 5.3 | 3.1 | |
| 대 학 생 간 부 | 18 | 13 | 41 | 40 | 82 | 194 8.7 |
| | 9.3 | 6.7 | 21.1 | 20.6 | 42.3 | |
| | 90.0 | 2.3 | 70.7 | 4.1 | 13.4 | |
| | .8 | .6 | 1.8 | 1.8 | 3.7 | |
| 국 책 및 민 간 연 구 소 | 0 | 8 | 0 | 20 | 13 | 41 1.8 |
| | 0 | 19.5 | 0 | 48.8 | 31.7 | |
| | 0 | 1.4 | 0 | 2.0 | 2.1 | |
| | 0 | .4 | 0 | .9 | .6 | |
| 농 촌 지 도 자 | 0 | 30 | 0 | 28 | 29 | 87 3.9 |
| | 0 | 34.5 | 0 | 32.2 | 33.3 | |
| | 0 | 5.3 | 0 | 2.9 | 4.7 | |
| | 0 | 1.3 | 0 | 1.2 | 1.3 | |
| 통 일 연 수 원 | 0 | 122 | 4 | 187 | 120 | 433 19.3 |
| | 0 | 28.2 | .9 | 32.2 | 27.7 | |
| | 0 | 21.6 | 6.9 | 2.9 | 19.6 | |
| | 0 | 5.4 | .2 | 1.2 | 5.4 | |
| 평 통 자 문 위 원 | 0 | 54 | 2 | 81 | 39 | 176 7.9 |
| | 0 | 30.7 | 1.1 | 46.0 | 22.2 | |
| | 0 | 9.6 | 3.4 | 8.2 | 6.4 | |
| | 0 | 2.4 | .1 | 3.6 | 1.7 | |
| 합 계 | 20 | 564 | 58 | 982 | 613 | 2240 100.0 |
| | .9 | 25.2 | 2.6 | 43.8 | 27.4 | |

한편 통일방안과 이념체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일후 공산주의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75%가 연방정부수립에 의한 통일을 선호하였고 자본주의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88.3%가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56.1%가 연방수립에 의한 통일을 원하였고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90.4%가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할수록 7할이상이 연방정부수립에 의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9할)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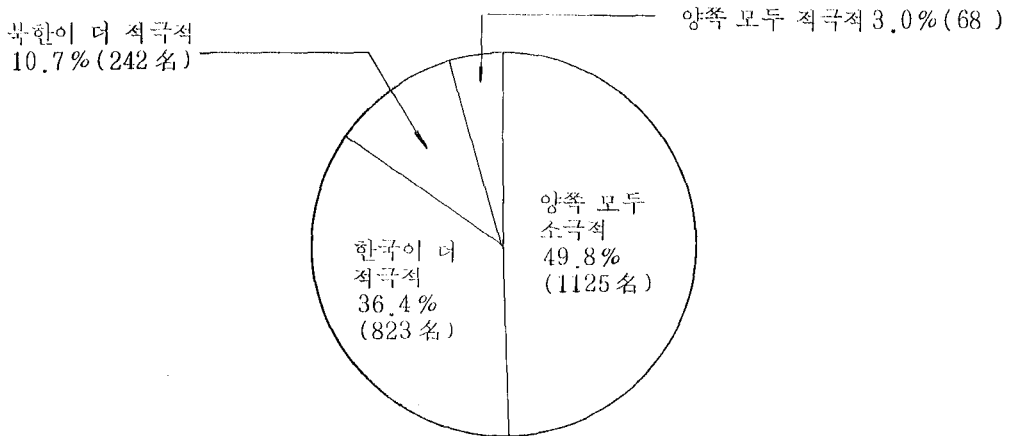
< 표 2-4-3 > 통일방안과 통일후 이념체제와의 관계

| 이념체제 통일방안 | 공산주의 체제 | 자본주의 체제 |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 새로운 이념체제 | 합계 |
|-----------------------|-------------------------|-----------------------------|---------------------------|-----------------------------|-----------------------------|---------------|
| 남북한 자유총선거 에의한통일 | 1 .7 5.0 .0 | 42 31.1 7.5 1.9 | 2 1.5 3.5 .1 | 41 30.4 4.2 1.8 | 48 35.6 7.9 2.2 | 135 6.1 |
| 무력통일 | 2 14.3 10.0 .1 | 5 35.7 .9 .2 | 1 7.1 1.8 .0 | 3 21.4 .3 .1 | 3 21.4 .5 .1 | 14 .6 |
| 강대국중재 에의한통일 | 0 0 0 0 | 13 21.7 2.3 .6 | 1 1.7 1.8 ..0 | 28 46.7 2.9 1.3 | 18 30.0 3.0 .0 | 60 2.7 |
| 교류를통한 점진적통일 | 2 .1 10.0 1.1 | 496 26.7 88.3 22.3 | 21 1.1 36.8 .9 | 881 47.4 90.4 39.6 | 455 24.5 75.0 20.5 | 1857 83.5 |
| 연방정부수립 에의한통일 | 15 9.5 75.0 .7 | 6 3.8 1.1 .3 | 32 20.3 56.1 1.4 | 22 13.9 2.3 1.0 | 83 52.5 13.7 3.7 | 158 7.1 |
| 합계 | 20 .9 | 562 25.3 | 57 2.6 | 975 43.8 | 607 27.3 | 2224 100.0 |

5. 南北韓의 統一努力 比較評價

남북한 중 어느 쪽이 통일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보는가에 관해서는 양쪽 모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 전체의 약 5할정도 (4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이 더 적극적 (36.4%), 북한이 더 적극적 (10.7%), 양쪽 모두 적극적 (3.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북한에 비해 남한의 통일노력을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극히 현재의 노력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이 특징이다. 통일의 당위성을 9.5할이 인정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불만 및 불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表 2 - 5> 南北韓의 統一努力 比較評價



이것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50.7%), 농촌지도자 (67.4%),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52.3%) 등이 한국이 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한데 비해 대학생 (51.7%)의 경우 북한이 보다 더 노력한다. 대답했으며 연구소 (78%), 언론인 (78.2%), 경제노동단체간부 (66%)

정치인 (60.7%) 의 경우는 모두 소극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언론인, 연구소직원등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비판적 성향이 강하며 특히 대학생간부의 경우는 정부에 대한 비판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2-5-1 > 직업과 남북한의 통일노력평가의 관계

| 남북한의 통일노력 직업 | 남북한 | | 양쪽모두 | | 합 계 |
|--------------------|-----------------------------|-------------------------|-------------------------|----------------------------|-------------|
| | 한 국 | 북 한 | 적 극 적 | 소 극 적 | |
| 공 무 원 | 226 50.7 27.5 10.0 | 11 2.5 4.5 .5 | 17 3.8 25.0 .8 | 192 43.0 17.1 8.5 | 446 19.7 |
| 정 치 인 | 23 25.8 2.8 1.0 | 11 12.4 4.5 .5 | 1 1.1 1.5 .0 | 54 60.7 4.8 2.4 | 89 3.9 |
| 법 조 인 | 9 45.0 1.1 .4 | 0 0 0 0 | 1 1.1 1.5 .0 | 10 59.0 .9 .4 | 20 .9 |
| 기 업 체 간 부 | 68 33.3 3.3 1.2 | 10 4.9 4.1 .4 | 5 5.5 1.4 .2 | 121 59.3 10.8 5.4 | 204 9.0 |
| 경 제 노동단체간부 | 27 27.8 3.3 1.2 | 3 3.1 1.2 .1 | 3 3.1 4.4 .1 | 64 66.0 5.7 2.8 | 97 4.3 |
| 언 론 인 | 12 11.9 1.5 .5 | 9 8.9 3.7 .4 | 1 1.0 1.5 .0 | 79 78.2 7.0 3.5 | 101 4.5 |
| 종 교 인 | 29 34.9 3.5 1.3 | 3 3.6 1.2 .1 | 3 3.6 4.4 .1 | 48 57.8 4.3 2.1 | 83 3.7 |

| 남북한의 통일노력 직업 | 한 국 | | 북 한 | | 합 계 | |
|--------------------|-------|-------|-------|-------|-------|-------|
| | 적 극 적 | 소 극 적 | 적 극 적 | 소 극 적 | 적 극 적 | 소 극 적 |
| 예 체 능 인 | 20 | 2 | 0 | 24 | 46 | 2.0 |
| | 43.5 | 4.3 | 0 | 52.2 | | |
| | 2.4 | .8 | 0 | 2.1 | | |
| | .9 | .1 | 0 | 1.1 | | |
| 교 수 | 42 | 22 | 4 | 159 | 227 | 10.0 |
| | 18.5 | 9.7 | 1.8 | 70.0 | | |
| | 5.1 | 9.1 | 5.9 | 14.1 | | |
| | 1.9 | 1.0 | .2 | 7.0 | | |
| 대학생간부 | 11 | 109 | 5 | 86 | 211 | 9.3 |
| | 5.2 | 51.7 | 2.4 | 40.8 | | |
| | 1.3 | 45.0 | 7.4 | 7.6 | | |
| | .5 | 4.8 | .2 | 3.6 | | |
| 국 책 및 민간연구소 | 4 | 5 | 0 | 32 | 41 | 1.8 |
| | 9.8 | 12.2 | 0 | 78.0 | | |
| | .5 | 2.1 | 0 | 2.8 | | |
| | .2 | .2 | 0 | 1.4 | | |
| 농촌지도자 | 58 | 3 | 2 | 23 | 86 | 3.8 |
| | 67.4 | 3.5 | 2.3 | 26.7 | | |
| | 7.0 | 1.2 | 2.9 | 2.0 | | |
| | 2.6 | .1 | .1 | 1.0 | | |
| 통일연수원 | 203 | 16 | 23 | 191 | 434 | 19.2 |
| | 46.8 | 3.7 | 5.3 | 44.0 | | |
| | 24.7 | 6.6 | 33.8 | 17.0 | | |
| | 9.0 | .7 | 1.0 | 8.5 | | |
| 평 통 자 문 위 원 | 91 | 38 | 3 | 42 | 174 | 7.7 |
| | 52.3 | 21.8 | 1.7 | 24.1 | | |
| | 11.1 | 15.7 | 4.4 | 3.7 | | |
| | 4.0 | 1.7 | .1 | 1.9 | | |
| 합 계 | 823 | 242 | 68 | 1125 | 2259 | 100.0 |
| | 36.4 | 10.7 | 3.0 | 49.8 | | |

북한체제의 본받을점과 적극적인 통일노력 인식도와의 관계를 볼때 북한체제의 본받을 점으로 ‘자주성과 주체성’, ‘균등한 소득분배’ 등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통일노력을 보이는 것은 ‘북한’ 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조직력과 단결력’, ‘인내와 내핍생활’ 등을 본받을 점으로 지적한 사람들일수록 한국이 보다 통일노력에 적극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가 본받을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통일노력에서 한국이 더욱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아주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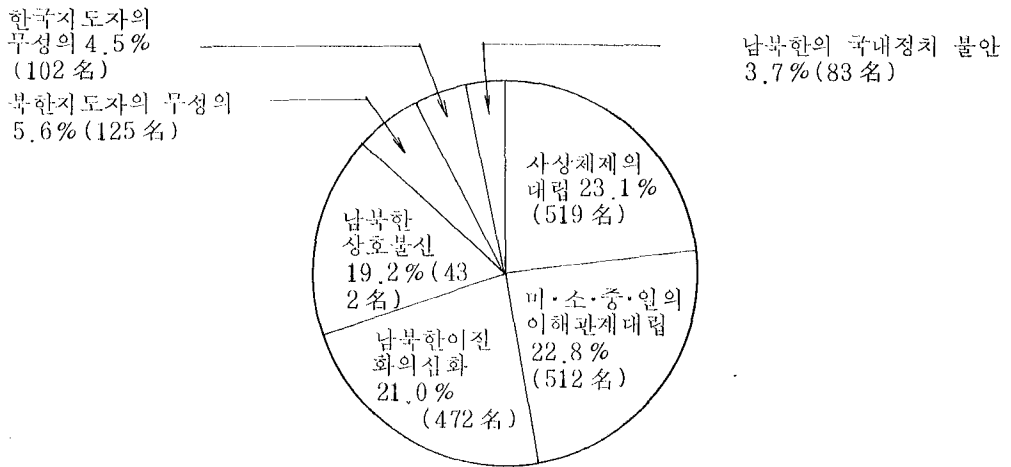
〈 표 2-5-2 〉 북한체제의 본받을점 평가와 남북한의 통일노력 평가와의 관계

| 적극적통일 북 한체 제의본받을점 | 한 국 | | 양 쪽 모 두 적 극 적 | | 합 계 |
|----------------------------|------|------|------------------|------|---------------|
| | 북 | 한 | 양 | 쪽 | |
| 조 직 력 과 단 결 력 | 323 | 36 | 27 | 280 | 666 30.7 |
| | 48.5 | 5.4 | 4.1 | 42.0 | |
| | 40.4 | 15.6 | 40.3 | 26.2 | |
| 자 주 성 과 주 체 성 | 126 | 154 | 17 | 415 | 712 32.9 |
| | 17.7 | 21.6 | 2.4 | 58.3 | |
| | 15.8 | 66.7 | 25.4 | 38.8 | |
| 인 내 와 내 핏 생 활 | 59 | 2 | 5 | 61 | 128 5.9 |
| | 46.1 | 1.6 | 3.9 | 47.7 | |
| | 7.4 | .9 | 7.5 | 5.7 | |
| 균 등 한 소 득 분 배 | 57 | 27 | 9 | 144 | 237 10.9 |
| | 24.1 | 11.4 | 3.8 | 60.8 | |
| | 7.1 | 11.7 | 13.4 | 13.5 | |
| 본 받 을 점 이 없 다 | 234 | 12 | 9 | 169 | 424 19.6 |
| | 55.2 | 2.8 | 2.1 | 39.9 | |
| | 29.3 | 5.2 | 13.4 | 15.8 | |
| 합 계 | 799 | 231 | 67 | 1069 | 2167 100.0 |
| | 36.9 | 10.7 | 3.1 | 49.3 | |
| | | | | | |

6. 統一沮害要因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에 관해서는 사상체제의 대립이라고 보는 입장이 약 2할이상 (23.1%)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소·중·일의 이해관계대립 (22.8%),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 (21.0%), 남북한 상호불신 (19.2%), 북한지도자의 무성의 (5.6%), 한국지도자의 무성의 (4.5%), 남북한 국내정치 불안 (3.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상체제의 대립과 강대국 이해관계 대립이 약 5할가까이 (45.9%) 이르고 있으며 강대국의 이해관계라는 국제요인 외에는 8할정도가 남북한 내부에 통일저해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 남북한 통일의 관련은 남북민족내부역량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다.

<表 2 - 6 > 統一沮害要因



1977년 이래 10년간의 본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사상체제의 대립을 통일저해요인으로 드는 비율이 줄어들고 남북한 지도자의 통일노력에의 무성의, 강대국 이해관계 혹은 한국의 정치불안, 남북불신등 다양한 장애요인을 예시하고 있다.

< 표 2-6-1 >

통일저해요인 비교

(단위 : %)

| 년 도 | 대 상 | 사 상 체 제 대 립 | 강 대 국 이 해 관 계 대 립 | 상 호 불 신 | 북한지도 자 의 무 성 의 | 남한지 도 자 의 무 성 의 | 국내 정 치 불안 | 심화된 이질화 |
|------|--------------|----------------|-------------------------|------------|----------------------|-----------------------|--------------|------------|
| 1977 | 대 학 생 | 41.14 | 22.85 | 19.39 | 12.21 | 4.12 | | |
| 1986 | 대 학 생 | 31.15 | 39.5 | 17.27 | 2.35 | 1.89 | | |
| 1987 | 대 학 생 | 28.4 | 33.6 | 25.2 | 3.2 | 5.04 | 4.4 | |
| 1978 | 산 업 근 로 자 | 42.13 | 22.67 | 16.59 | 12.25 | 2.04 | | |
| 1981 | 현역장병 | 31 | 20 | 12 | 32 | 5 | | |
| 1981 | 예비역 장 병 | 27 | 21 | 13 | 33 | 6 | | |
| 1986 | 고 교 생 | 42.25 | 26.58 | 13.33 | 12.14 | 0.81 | 3.68 | |
| 1986 | 고교교사 | 40.54 | 27.36 | 18.58 | 8.44 | 0.22 | 2.9 | |
| 1987 | 국 민 | 33.6 | 23.7 | 22.4 | 10.8 | 2.2 | 5.7 | |
| 1988 | 국 민 | 28.1 | 22.2 | 16.1 | 8.8 | | 4.7 | 20.1 |
| 1988 | 여론선도 계 층 | 23.1 | 22.8 | 19.2 | 5.6 | 4.5 | 3.7 | |

연령에 따른 통일저해요인 인식실태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에는 미·소·중·일의 이해대립(36.8%), 심화된 이질감(21.1%), 사상대립(15.8%) 순이며 20대는 약간 달리 미·소·중·일의 이해대립(27.6%) 사상대립(21.1%), 심화된 이질감(19.8%)을 들며 30대에서는 사상대립(24.3%), 미·소·중·일 이해대립(21.8%), 상호불신(20.5%), 심화된 이질감(20.3%)을 들어 연령이 젊을수록 미·소·중·일의 이해관계 갈등을 통일저해요인으로 드는 성향이 높다.

40대 역시 비슷하며 50대에서는 심화된 이질감(24.4%)이 가장 높고 사상대립(23.5%), 상호불신(19.4%), 이해대립(19.1%) 순이고 60대에선 심화된 이질감(24.5%), 사상대립(20.4%), 이해대립(20.4%) 그리고 특히 북한지도자의 무성의(20.4%)가 상당히 큰 이유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남북불신, 이질감, 사상대립등 민족 내부 요인을 거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저해요인에 사상대립, 이해대립, 심화된 이질감, 상호불신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에 따라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농·어업과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북한지도자의 무성의를 각각 16.2%와 20% 지적하여 전체평균 5.6%보다 월등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정치인과 학생회 간부는 사상체제의 대립보다는 열강의 이해대립을 가장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각기 3할에서 4할가량이 지적하여 외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회간부는 전체평균 4.6%가 한국지도자의 무성의에 대해 22.4%가 응답하여 일반의 인식과 크게 다른것을 알 수 있는데 한편 군인들의 경우는 전체응답비율과 거의 비슷한 응답을 하고 있다.

< 표 2-6-2 >

연령에 따른 통일저해 요인

| 연령 | 통일저 해요인 | 사상대립 | 미소중일 의 이해 대립 | 북한 지도자의 무성의 | 남한 지도자의 무성의 | 상호불신 | 상호국내 정치불안 | 심화된 이질감 | 합계 |
|-------------|------------|------|--------------------|-------------------|-------------------|------|--------------|------------|----|
| 10 대 | 3 | 7 | 2 | 1 | 2 | 0 | 4 | 19 | |
| | 15.8 | 36.8 | 10.5 | 5.3 | 10.5 | 0 | 21.1 | .8 | |
| | .6 | 1.4 | 1.6 | 1.0 | .5 | 0 | .8 | | |
| | .1 | .3 | .1 | .0 | .1 | 0 | .2 | | |
| 20 " | 133 | 174 | 15 | 58 | 112 | 14 | 125 | 631 | |
| | 21.1 | 27.6 | 2.4 | 9.2 | 17.7 | 2.2 | 19.8 | 28.1 | |
| | 25.6 | 34.1 | 12.0 | 56.9 | 25.9 | 16.9 | 26.5 | | |
| | 5.1 | 7.8 | .7 | 6.6 | 5.0 | .6 | 5.6 | | |
| 30 " | 166 | 149 | 25 | 26 | 140 | 38 | 139 | 684 | |
| | 24.3 | 21.8 | 3.7 | 3.8 | 20.5 | 5.6 | 20.3 | 30.5 | |
| | 32.0 | 29.2 | 20.0 | 25.5 | 32.4 | 45.8 | 29.4 | | |
| | 7.4 | 6.6 | 1.1 | 1.2 | 6.2 | 1.7 | 6.2 | | |
| 40 " | 122 | 102 | 40 | 8 | 103 | 22 | 104 | 501 | |
| | 24.4 | 20.4 | 8.0 | 1.6 | 20.6 | 4.4 | 20.8 | 22.3 | |
| | 23.5 | 20.0 | 32.0 | 7.8 | 23.8 | 26.5 | 22.0 | | |
| | 5.4 | 4.5 | 1.8 | .4 | 4.6 | 1.0 | 4.6 | | |
| 50 " | 85 | 69 | 33 | 9 | 70 | 7 | 88 | 361 | |
| | 23.5 | 19.1 | 9.1 | 2.5 | 19.4 | 1.9 | 24.4 | 16.1 | |
| | 16.4 | 13.5 | 26.4 | 8.8 | 16.2 | 8.4 | 18.6 | | |
| | 3.8 | 3.1 | 1.5 | .4 | 3.1 | .3 | 3.9 | | |
| 60 대 이 상 | 10 | 10 | 10 | 0 | 5 | 2 | 12 | 49 | |
| | 20.4 | 20.4 | 20.4 | 0 | 10.2 | 4.1 | 24.5 | 2.2 | |
| | 1.9 | 2.0 | 8.0 | 0 | 1.2 | 2.4 | 2.5 | | |
| | .4 | .4 | .4 | 0 | .2 | .1 | .5 | | |
| 합계 | 519 | 511 | 125 | 102 | 432 | 83 | 472 | 2245 | |
| | 23.1 | 22.8 | 5.6 | 4.5 | 19.2 | 3.7 | 21.0 | 100.0 | |

< 표 2-6-3 >

직업과 통일저해요인 인식의 관계

| 요 인 직 업 | 사상체제 대 | 열 강 의 해대립 | 북한지도 자 의 무 성 의 | 한국지도 자 의 무 성 의 | 남 북 한 상호불신 | 남 북 한 국내정치 불 | 남북한의 이 질 화 | 합 계 |
|------------|-----------|--------------|----------------------|----------------------|---------------|--------------------|---------------|-------------|
| 농·어업 | 33 | 25 | 22 | 4 | 22 | 5 | 25 | 136 6.1 |
| | 24.3 | 18.4 | 16.2 | 2.9 | 16.2 | 3.7 | 18.4 | |
| | 6.4 | 4.9 | 17.6 | 3.9 | 5.1 | 6.0 | 5.3 | |
| | 1.5 | 1.1 | 1.0 | .2 | 1.0 | .2 | 1.1 | |
| 공무원 | 123 | 90 | 25 | 17 | 103 | 29 | 110 | 497 22.3 |
| | 24.7 | 18.1 | 5.0 | 3.4 | 20.7 | 5.8 | 22.1 | |
| | 23.9 | 17.7 | 20.0 | 16.7 | 24.0 | 34.9 | 23.5 | |
| | 5.5 | 4.0 | 1.1 | .8 | 4.6 | 1.3 | 4.9 | |
| 군인 | 17 | 17 | 5 | 2 | 12 | 1 | 17 | 71 3.2 |
| | 23.9 | 41.9 | 7.0 | 2.8 | 16.9 | 1.4 | 23.9 | |
| | 3.3 | 3.3 | 4.0 | 2.0 | 2.8 | 1.2 | 3.6 | |
| | .8 | .8 | .2 | .1 | .5 | .0 | .8 | |
| 정치인 | 7 | 18 | 2 | 5 | 8 | 1 | 5 | 43 1.9 |
| | 16.3 | 41.9 | 4.7 | 4.7 | 18.6 | 2.3 | 11.6 | |
| | 1.4 | 3.5 | 1.6 | 2.0 | 1.9 | 1.2 | 1.1 | |
| | .3 | .8 | .1 | .1 | .4 | .0 | .2 | |
| 기업경영인 | 56 | 46 | 23 | 5 | 46 | 7 | 56 | 239 10.7 |
| | 23.4 | 19.2 | 9.6 | 2.1 | 19.2 | 2.9 | 23.4 | |
| | 10.9 | 9.0 | 18.4 | 4.9 | 10.7 | 8.4 | 11.9 | |
| | 2.5 | 2.1 | 1.0 | .2 | 2.1 | .3 | 2.5 | |
| 전문직업인 | 18 | 16 | 0 | 3 | 6 | 1 | 13 | 57 2.6 |
| | 31.6 | 28.1 | 0 | 5.3 | 10.5 | 1.8 | 22.8 | |
| | 3.5 | 3.1 | 0 | 2.9 | 1.4 | 1.2 | 2.8 | |
| | .8 | .7 | 0 | .1 | .3 | .0 | .6 | |
| 언론인 | 18 | 22 | 2 | 4 | 23 | 3 | 30 | 102 4.6 |
| | 17.6 | 21.6 | 2.0 | 3.9 | 22.5 | 2.9 | 29.4 | |
| | 3.5 | 4.3 | 1.6 | 3.9 | 5.3 | 3.6 | 6.4 | |
| | .8 | 1.0 | .1 | .2 | 1.0 | .1 | 1.3 | |

| 요 인 직 업 | 사상체제 대 령 | 열 강 의 이해대립 | 북한지도 자 의 무 성 의 | 한국지도 자 의 무 성 의 | 남 북 한 상호불신 | 남 북 한 국내정치 불 안 | 남북한의 이 질 화 | 합 계 |
|------------------|---------------------------|---------------------------|-------------------------|---------------------------|----------------------------|-------------------------|---------------------------|---------------|
| 교 육 자 | 87 22.0 16.9 3.9 | 91 23.0 17.9 4.1 | 10 2.5 8.0 .4 | 13 3.3 12.7 .6 | 101 25.6 23.5 4.5 | 20 5.1 24.1 .9 | 73 18.3 15.6 3.3 | 395 17.7 |
| 학생회간부 | 18 13.4 3.5 .8 | 46 34.3 9.0 2.1 | 0 0 0 0 | 30 22.4 29.4 1.3 | 22 16.4 5.1 1.0 | 1 .7 1.2 .0 | 17 12.7 3.6 .8 | 134 6.0 |
| 노 조 간 부 | 10 30.3 1.9 .4 | 13 39.4 2.6 .6 | 1 3.0 .8 .0 | 0 0 0 0 | 4 12.1 .9 .2 | 1 3.0 1.2 .0 | 4 12.1 .9 .2 | 33 1.5 |
| 예 체 능 인 | 3 20.0 .6 .1 | 3 20.0 .6 .1 | 3 20.0 2.4 .1 | 0 0 0 0 | 2 13.3 .5 .1 | 0 0 0 0 | 4 26.7 .9 .2 | 15 .7 |
| 종 교 인 | 20 26.3 3.9 .9 | 16 21.1 3.1 .7 | 11 14.5 8.8 .5 | 0 0 0 0 | 6 7.9 1.4 .3 | 3 3.9 3.6 .1 | 19 25.0 4.1 .9 | 76 3.4 |
| 사 회 단 체 임 직 원 | 43 28.7 8.4 1.9 | 29 19.3 5.7 1.3 | 9 6.0 7.2 .4 | 1 .7 1.0 .0 | 28 18.7 6.5 1.3 | 5 3.3 6.0 .2 | 35 23.3 7.5 1.6 | 150 6.7 |
| 기 타 | 60 21.6 11.7 2.7 | 75 27.0 14.7 3.4 | 12 4.3 9.6 .5 | 20 2.7.2 19.6 .9 | 46 16.5 10.7 2.1 | 6 2.2 7.2 .3 | 59 21.2 12.6 2.6 | 278 12.4 |
| 합 계 | 514 23.0 | 509 22.8 | 125 5.6 | 102 4.6 | 430 19.3 | 83 3.7 | 469 21.0 | 2233 100.0 |

第5節 南北韓 統一方案에 대한 認知度 및 評價

개 요

- ① 한국정부가 북한에 제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하여 여론선도계층은 약 5할 남짓이 어느정도 이상 알고있으며 2.5할정도는 거의 모르고 있다. 이해정도가 ‘보통, 이라고 응답한 나머지 조사대상자들도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②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의에 대해서는 비판적·부정적 견해를 갖고있는 응답자가 9할을 넘어선다. 특히 이중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거나 거부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한 사람이 6.7할을 상회했다.
- ③ 현재 정부의 통일대화정책에 대하여 여론선도계층은 약 4할정도가 긍정적으로 약 3할정도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당수 있는데 주로 대학생과 정치인들이 이런 응답을 하였다.
- ④ 현재의 정부통일방안은 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7할 이상이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통일과 평화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나아가서는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⑤ 통일방안 및 통일정책의 보완에 있어서는 약 9할 이상이 국민의사의 존중과 국민의견의 수렴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 행정부 내지 국회의 단독적 통일논의는 지양되고 행정부, 국회, 사법부도 참여한 국민협의체, 또는 다양한 국민의사를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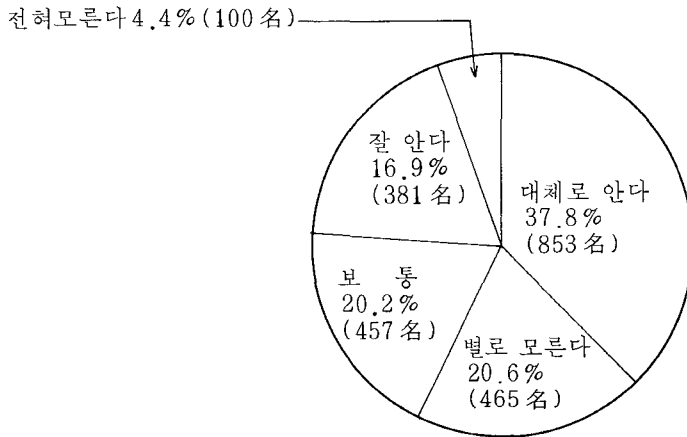
하여 최종적으로 국회를 거쳐 행정부에서 수립집행하는 것을 원한다.

1. 韓國側 統一方案에 대한 理解度 (民族和合 民主統一案)

한국 정부가 북한측에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82년 1월 22일)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안다는 입장이 약 4할미만 (37.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별로 모른다 (20.6%), 보통이다 (20.2%), 잘 안다 (16.9%), 전혀모른다 (4.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직능별 선도세력 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 견해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3-1 > 한국측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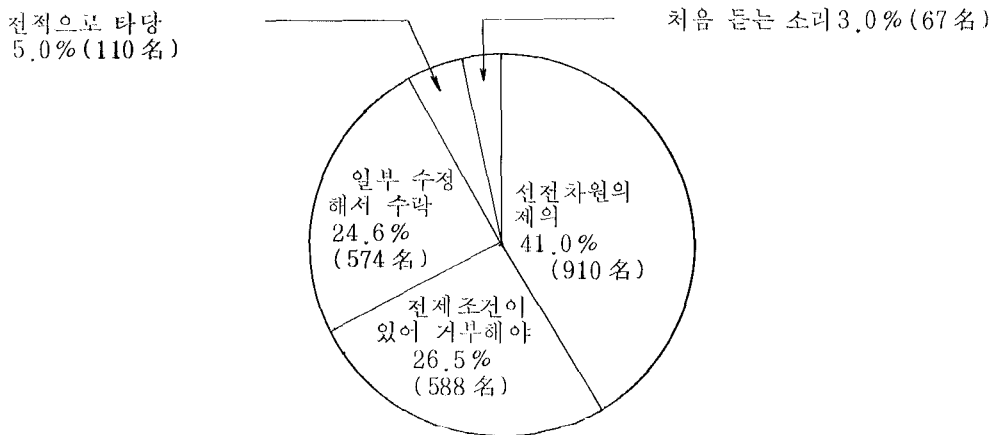


2. 北韓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提議에 대한 견해

북한이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제의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선전차원의 제의이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 약 4할정도 (41.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전체조건이 있으므로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 (26.5%), 일부 수정하여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 (24.6%), 전적으로 타당한 제의라는 입장 (5.0%), 처음 듣는다는 입장 (3.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전차원이나 전체조건이 있어 거부해야 한다는 견해는 7할가까이 되며 타당하다거나 일부수정하여 수락해야 된다는 견해도 3할가량 된다.

< 표 3-2 >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의에 대한 견해



< 표 3-3-1 >

직업과 통일정책평가와의 관계

| 통일대화정책에 대한평가 직업 | 매 우 | | 비 교 적 | | 그 저 | | 다 소 | | 매 우 | | 합 계 |
|-----------------------|------|------|-------|------|------|---|-----|---|-----|---|------|
| | 중 | 생 | 중 | 생 | 그 | 렇 | 다 | 생 | 생 | 각 | |
| 공 무 원 | 54 | 194 | 104 | 87 | 7 | | | | | | |
| | 12.1 | 43.5 | 23.3 | 19.5 | 1.6 | | | | | | 446 |
| | 23.5 | 25.0 | 22.1 | 17.4 | 2.5 | | | | | | 19.7 |
| | 2.4 | 8.6 | 4.6 | 3.9 | .3 | | | | | | |
| 정 치 인 | 4 | 20 | 18 | 31 | 14 | | | | | | |
| | 7.6 | 23.0 | 20.7 | 35.6 | 16.1 | | | | | | 87 |
| | 1.7 | 2.6 | 3.8 | 6.2 | 5.0 | | | | | | 3.9 |
| | .2 | .9 | 8 | 1.4 | .5 | | | | | | |
| 법 조 인 | 2 | 10 | 5 | 2 | 1 | | | | | | |
| | 10.0 | 50.0 | 25.0 | 10.0 | 5.0 | | | | | | 20 |
| | .9 | 1.3 | 1.1 | .4 | .4 | | | | | | .9 |
| | .1 | .4 | .2 | .1 | .0 | | | | | | |
| 기 업 체 간 부 | 3 | 69 | 60 | 57 | 16 | | | | | | |
| | 1.5 | 33.7 | 29.3 | 27.8 | 7.8 | | | | | | 205 |
| | 1.3 | 8.9 | 12.7 | 11.4 | 5.7 | | | | | | 9.1 |
| | .1 | 3.1 | 2.7 | 2.5 | .7 | | | | | | |
| 경 제 | 10 | 33 | 27 | 17 | 11 | | | | | | |
| | 10.2 | 33.7 | 27.6 | 17.3 | 11.2 | | | | | | 98 |
| | 4.3 | 4.3 | 5.7 | 3.4 | 3.9 | | | | | | 4.3 |
| 노동단체간부 | .4 | 1.5 | 1.2 | .8 | .5 | | | | | | |
| 언 론 인 | 3 | 27 | 22 | 33 | 16 | | | | | | |
| | 3.0 | 26.7 | 21.8 | 32.7 | 15.8 | | | | | | 101 |
| | 1.3 | 3.5 | 4.7 | 6.6 | 5.7 | | | | | | 4.5 |
| | .1 | 1.2 | 1.0 | 1.5 | .7 | | | | | | |
| 종 교 인 | 16 | 23 | 20 | 14 | 8 | | | | | | |
| | 19.5 | 28.0 | 24.4 | 17.1 | 9.8 | | | | | | 82 |
| | 7.0 | 3.0 | 4.2 | 2.8 | 2.8 | | | | | | 3.6 |
| | .7 | 1.0 | .9 | .6 | .4 | | | | | | |

| 통일대화정책에 대한평가 직업 | 매 우 | | 비 교 적 | | 다 소 | | 합 계 |
|-----------------------|---------------------------|----------------------------|---------------------------|---------------------------------|---------------------------------|---------------|-----|
| | 중 계 생 각 | 중 계 생 각 | 그 저 그 렇 다 | 비 관 적 으 로 생 각 | 비 관 적 으 로 생 각 | 합 계 | |
| 예 체 능 인 | 3 6.5 1.3 .1 | 18 39.1 2.3 .8 | 12 26.1 2.5 .5 | 11 23.9 2.2 .5 | 2 4.3 .7 .1 | 46 2.0 | |
| 교 수 | 10 4.4 4.3 .4 | 61 26.8 7.9 2.7 | 56 24.6 11.9 2.5 | 78 34.2 15.6 3.5 | 23 10.1 8.2 1.0 | 228 10.1 | |
| 대 학 생 간 부 | 1 .5 .4 .0 | 6 2.8 .8 .3 | 21 10.0 4.5 .9 | 47 22.3 9.4 2.1 | 136 64.5 48.4 6.0 | 211 9.3 | |
| 국 책 및 민 간 연 구 소 | 3 7.3 1.3 .1 | 9 22.0 1.2 .4 | 11 26.8 2.3 .5 | 12 29.3 2.4 .5 | 6 14.6 2.1 .3 | 41 1.8 | |
| 농 촌 지 도 자 | 14 16.1 6.1 .6 | 44 50.6 5.7 1.9 | 19 21.8 4.0 .8 | 10 11.5 2.0 .4 | 0 0 0 0 | 87 3.9 | |
| 통 일 연 수 원 | 77 17.8 33.5 1.4 | 163 37.7 21.0 7.2 | 82 19.0 17.4 3.6 | 84 19.4 16.8 3.7 | 26 6.0 9.3 1.2 | 432 19.1 | |
| 평 통 자 문 위 원 | 30 17.1 13.0 1.3 | 99 56.6 12.8 4.4 | 14 8.0 3.0 .0 | 17 9.7 3.4 .8 | 25 6.6 9.3 1.7 | 175 1.7 | |
| 합 계 | 230 10.2 | 776 34.4 | 471 20.8 | 500 22.1 | 281 12.4 | 2259 100.0 | |

그런데 여론선도계층중 대학가에 나도는 통일구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들일수록 (87.5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학가의 통일구호를 위협시킬수록 (72.8 %) 정부의 현 통일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대학가의 젊은세대 통일운동에 찬성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다. 회의적 시각을 가질수록 정부 통일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의 야당과 북한 노동당의 통일에 관한 직접 접촉에 대해, 야당이 통일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찬성을 표시한 응답자들중 68.7%가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8할이상 (82.6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양당의 직접회담이 대화 창구의 단일화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응답자들 중에서는 18.4%만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며 62.5%는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중 60.7%가 정부통일정책에 긍정적이고 약 2할 정도 (19.7 %)가 비판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야당과 북한노동당의 통일회담을 찬성하는 지도계층일수록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야당을 통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주장 하기도 한다.

〈 표 3-3-2 〉 대학가의 통일논의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와의 상관관계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 대학가 통일구호에 관한 견해 | 매우 좋음 | 비교적 좋음 | 그저 그렇다 | 다소 비관적 | 매우 비관적 | 합 계 |
|------------------------------------|----------------------------|-----------------------------|-----------------------------|-----------------------------|----------------------------|---------------|
| 매우 좋음 | 13 5.4 5.8 .6 | 17 7.1 2.2 .8 | 22 9.1 4.7 1.0 | 48 19.9 9.7 2.1 | 141 58.5 50.5 6.3 | 241 10.8 |
| 비교적 좋음 | 19 4.4 8.4 .8 | 93 21.6 12.1 4.2 | 97 22.6 20.7 4.3 | 146 34.0 29.4 6.5 | 75 17.4 26.9 3.4 | 430 19.2 |
| 다소 비관적 | 69 7.4 30.5 3.1 | 326 35.1 42.6 14.6 | 253 27.3 54.1 11.3 | 234 25.2 47.1 10.5 | 46 5.0 16.5 2.1 | 928 41.5 |
| 매우 위험 | 124 20.3 54.9 5.5 | 321 52.5 41.9 14.3 | 84 13.7 17.9 3.8 | 66 10.8 13.3 3.0 | 15 1.5 5.4 .7 | 611 27.3 |
| 모르겠다 | 1 3.7 .4 .0 | 9 33.3 1.2 .4 | 12 44.4 2.6 .5 | 3 11.1 .6 .1 | 2 7.4 .7 .1 | 27 1.2 |
| 합 계 | 226 10.1 | 766 34.2 | 468 20.9 | 497 22.2 | 279 12.5 | 2237 100.0 |

< 표 3-3-3 >

남한의 야당과 북한 노동당의 직접적 통일회담 개최에 관한 견해와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견해와의 관계

|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 한국 야당과 노동당의 직접적 통일회담 개최에 관한 견해 | 매 우 | | 비교적 | | 그 저 | | 다 소 | | 매 우 | | 합 계 |
|--|------|------|------|------|------|-------|-----|---|-----|---|-----|
| | 좋 | 다 | 좋 | 다 | 그 | 렇 | 다 | 비 | 판 | 그 | |
| 야당이 통일에 적극적이므로 찬성 | 13 | 42 | 44 | 92 | 125 | 316 | | | | | |
| | 4.1 | 13.3 | 13.9 | 29.1 | 39.6 | 14.4 | | | | | |
| | 5.8 | 5.5 | 9.6 | 18.7 | 49.2 | | | | | | |
| | .6 | 1.9 | 9.0 | 4.2 | 5.7 | | | | | | |
| 정부차원의 회담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 | 55 | 250 | 197 | 212 | 76 | 790 | | | | | |
| | 7.0 | 31.6 | 24.9 | 26.8 | 9.6 | 36.1 | | | | | |
| | 24.6 | 32.9 | 42.9 | 43.2 | 29.9 | | | | | | |
| | 2.5 | 11.4 | 9.0 | 9.7 | 3.5 | | | | | | |
| 대화창구의 단일화에 호선을 초래하니 반대 | 88 | 235 | 99 | 80 | 15 | 157 | | | | | |
| | 17.0 | 45.5 | 19.1 | 15.5 | 2.9 | 23.6 | | | | | |
| | 19.3 | 30.9 | 18.6 | 16.3 | 5.9 | | | | | | |
| | 4.0 | 10.7 | 3.5 | 3.7 | .7 | | | | | | |
| 북한의 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 | 60 | 199 | 83 | 75 | 9 | 427 | | | | | |
| | 14.1 | 46.6 | 19.4 | 17.6 | 2.1 | 19.5 | | | | | |
| | 26.8 | 26.2 | 18.1 | 15.3 | 3.5 | | | | | | |
| | 2.7 | 9.1 | 3.8 | 3.4 | .4 | | | | | | |
| 모르겠다. | 8 | 34 | 36 | 32 | 29 | 139 | | | | | |
| | 5.8 | 24.5 | 25.9 | 23.0 | 20.9 | 6.3 | | | | | |
| | 3.6 | 4.5 | 7.8 | 6.5 | 11.4 | | | | | | |
| | .4 | 1.6 | 1.6 | 1.5 | 1.3 | | | | | | |
| 합 계 | 224 | 760 | 459 | 491 | 254 | 2189 | | | | | |
| | 10.2 | 34.7 | 21.0 | 22.4 | 11.6 | 100.0 | | | | | |

통일장애요인과 정부의 현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무성의를 통일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사람들일수록 현 통일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국민의 현 정부통일대화정책 지지도를 고려하면 국내정치에서 통일정책과 관련된 부분만큼을 정권차원이 아닌 초당적 국민합의에 입각한 민족적 순수성에서 발로된 통일노력이어야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론선도계층의 교육수준별로 현 정부의 통일정책평가를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일수록 정부통일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무학 60%, 국졸 72.8% 중졸 71.4%, 고졸 63.6%)를 하고 있는 반면 대졸과 대학원졸업의 고학력자 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38.6%, 4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낮은 계층은 정부통일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나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서 때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다.

< 표 3-3-4 >

연령에 따른 현 정부의 통일정책평가

| 연령 \ 현 정부의 통일정책 | 매우 좋음 | 비교적 좋음 | 보통 | 다소 비관적 | 매우 비관적 | 합계 |
|-----------------|---------------------------|-----------------------------|----------------------------|----------------------------|----------------------------|---------------|
| 10 대 | 0 0 0 0 | 2 10.5 .3 .1 | 5 26.3 1.1 .2 | 7 36.8 1.4 .3 | 5 26.3 1.8 .2 | 19 .8 |
| 20 대 | 25 3.9 10.9 1.1 | 112 17.4 14.4 5.0 | 153 23.8 32.5 6.8 | 171 26.6 34.3 7.6 | 181 28.2 64.4 8.0 | 642 28.4 |
| 30 대 | 55 8.0 23.9 2.4 | 243 35.5 31.3 10.8 | 163 23.8 34.6 7.2 | 94 18.8 18.8 4.2 | 55 8.0 19.6 2.4 | 685 30.3 |
| 40 대 | 66 13.2 28.7 2.9 | 224 44.9 28.9 9.9 | 98 11.6 20.8 4.3 | 51 14.1 10.2 2.3 | 16 3.2 5.7 .7 | 499 22.1 |
| 50 대 | 69 19.1 30.0 3.1 | 173 47.8 22.3 7.7 | 48 13.3 10.2 2.1 | 51 14.1 10.2 2.3 | 21 5.8 7.5 .9 | 362 16.0 |
| 60 대이상 | 15 29.4 6.5 .7 | 22 43.1 2.8 1.0 | 4 7.8 .8 .2 | 7 13.7 1.4 .3 | 3 5.9 1.1 .1 | 51 2.3 |
| 합 계 | 230 10.2 | 776 34.4 | 471 20.9 | 499 22.1 | 281 12.4 | 2258 100.0 |

< 표 3-3-5 > 교육수준과 현 정부의 통일정책평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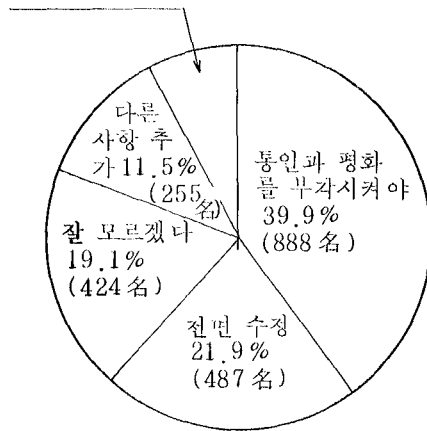
| 현 정부의 교육수준 통일정책 | 매 우 중 다 | 비 교 적 중 다 | 보 통 | 다 소 비 관 적 | 매 우 비 관 적 | 합 계 |
|-----------------------|---------------------------|-----------------------------|-----------------------------|-----------------------------|----------------------------|---------------|
| 무 학 | .1 20.0 .4 .0 | 2 40.0 .3 .1 | 2 40.0 .4 .1 | 0 0 0 0 | 0 0 0 0 | . 5 .2 |
| 국 졸 | 4 36.4 1.7 .2 | 4 36.4 .5 .2 | 1 9.1 .2 .0 | 1 9.1 .2 .0 | 1 9.1 .4 .0 | 11 .5 |
| 중 졸 | 12 19.7 31.2 3.5 | 20 44.4 2.6 .9 | 6 13.3 1.3 .3 | 4 8.9 .8 .2 | 3 6.7 1.1 .1 | 45 2.0 |
| 고 졸 | 73 19.2 31.9 3.2 | 169 44.4 21.8 7.5 | 84 22.0 17.9 3.7 | 46 12.1 9.2 22.0 | 9 2.4 3.2 .4 | 381 16.9 |
| 대 졸 | 107 7.8 46.7 4.7 | 420 30.8 54.1 18.6 | 285 20.9 60.8 12.6 | 329 24.1 65.8 14.6 | 222 16.3 79.3 9.8 | 1364 60.5 |
| 대학원졸 | 32 7.1 14.0 1.4 | 161 35.9 20.7 7.1 | 91 20.3 19.4 4.0 | 120 26.7 24.0 5.3 | 45 10.0 16.1 2.0 | 449 19.9 |
| 합 계 | 229 10.2 | 776 34.4 | 469 20.8 | 500 22.2 | 280 12.4 | 2255 100.0 |

4.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한 內容補完

한국 정부가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한 내용상의 보완에 관해서는 통일과 평화문제를 좀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약 4할정도 (3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 (21.9%)로 대별된다. 잘 모르겠다 (19.1%), 다른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11.5%),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7.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일과 평화문제를포함 새로운 사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 견해는 전체 응답자의 약 7할이상 (73.3%)을 점하고 있다.

< 표 3-4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한 내용보완

그대로가 좋다
7.6% (169名)



한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인식도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보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부통일방안을 보통이상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통일과 평화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보완에 있어 다른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보다 전면 수정 및 새로운 안을 제시해야 한다 (21.9%)는 의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보완 수정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평화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이를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새로운 통일대화 노력이나 통일정책 수립의 절차나 내용면의 변화는 이런면에서 파악되고 또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표 3-4-1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인식도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보완과의 관계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보완 인식도 | 그대로서 좋다 | 통일과 평화문제를 부시켜야한다. | 전면수정 및 새로운 안제시 | 다른 항가 추 | 잘 모름 | 합 계 |
|-----------------------|---------------------------|-----------------------------|----------------------------|----------------------------|-----------------------------|---------------|
| 잘 안다 | 73 19.3 43.2 3.3 | 136 36.0 15.4 6.1 | 104 27.5 21.4 4.7 | 60 15.9 23.6 2.7 | 5 1.3 1.2 .2 | 378 17.1 |
| 대체로 안다 | 62 7.3 36.7 2.8 | 423 49.8 47.9 19.1 | 212 25.0 43.6 9.6 | 115 13.5 45.3 5.2 | 37 4.4 8.7 1.7 | 849 38.3 |
| 보통이다 | 26 5.8 15.4 1.2 | 236 52.4 26.7 10.6 | 71 15.8 14.6 3.2 | 57 12.7 22.4 2.6 | 60 13.3 14.2 2.7 | 450 20.3 |
| 별로 모른다 | 7 1.6 4.1 .3 | 84 18.8 9.5 3.8 | 91 20.3 18.7 4.1 | 19 4.2 7.2 .9 | 247 55.1 58.3 11.1 | 448 20.2 |
| 전혀 모른다 | 1 1.1 .6 .0 | 5 5.4 .6 .2 | 8 8.7 1.6 .4 | 3 3.3 1.2 .1 | 75 81.5 17.7 3.4 | 92 4.1 |
| 합 계 | 169 7.6 | 884 39.9 | 486 21.9 | 254 11.5 | 424 19.1 | 2217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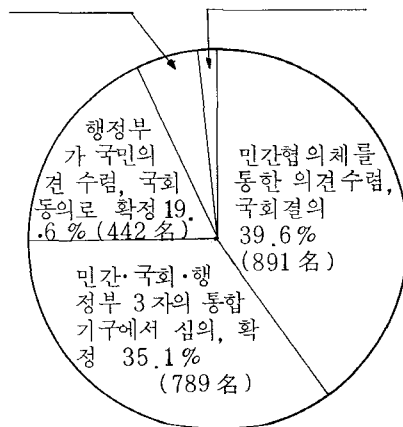
5. 統一輿論收斂 方案

금후 한국의 통일방안,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수렴방안에 관해서는 민간협의체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국회결의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약 4할정도 (39.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민간·국회·행정부의 3자통합기구에서 심의 확정하는 방식 (35.1%), 국민의 의견을 행정부가 수렴·국회의 동의로 확정하는 방식 (19.6%),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후 결의 형식으로 확정하는 방식 (4.2%), 행정부주도의 자체보완방식 (1.5%)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통일방안통일정책의 보완에 있어서 약 9할이상 (94.3%)이 국민의사의 존중과 국민의견의 수렴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단독 방식의 통일논의는 지양되고 국민의 참여와 의견이 수렴되게 민간협의, 국회토론 의결, 행정부의 정책집행 순의 절차와 본질면에서 개방화와 참여폭의 확대를 원한다.

< 표 3-5 >

통 일 여론 수 령 방 안

국회에서 논의, 결정
형식으로 확정
4.2% (95名)



행정부주도의 자체보완
1.5% (34名)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적 과제로서 국방력 강화와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통일정책의 보완방법으로서 민간협의체제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결의하는 방법, 민간·국회·행정부의 통합기구에서 심의 확정하는방법, 행정부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 동의로 확정하는 방법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 한편 국내적 과제로서 경제발전·복지사회건설, 이념교육강화라는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는 민간·국회·행정부의 통합기구를 통한방법, 민간협의체를 통한 방법, 행정부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 동의로 확정하는 방법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결국 여론주도세력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통일정책의 보완 방향을 국회·행정부·민간협의체의 각기 독자적인 보완방법보다는 국회·행정부·민간협의체 3자의 공동노력을 통한 해결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5-1 〉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적 과제와 통일여론수렴 방안의
관계

| 통일여론수렴방안 국내적 과제 | 국 회 에 서 논 의 후 확 정 | 민간협의회에 서 수 렴 국회에서결의 | 행 정 부 가 의견을 수렴 국 회 의 동의로확정 | 민간·국회· 행 정 부 의 통합기구에서 심 의 확 정 | 행 정 부 주 도 로 자 체 보 완 | 합 계 |
|-----------------------|----------------------|---------------------------|-------------------------------------|--|---------------------------|-------|
| 국방력강화 | 10 | 75 | 38 | 59 | 5 | 187 |
| | 5.3 | 40.1 | 20.3 | 31.6 | 2.7 | |
| | 10.9 | 8.5 | 8.1 | 7.6 | 15.2 | |
| | .5 | 3.4 | 1.7 | 2.7 | .2 | |
| 민 주 주 의 확 립 | 32 | 447 | 143 | 354 | 3 | 979 |
| | 3.3 | 45.7 | 14.6 | 36.2 | .3 | |
| | 34.8 | 50.8 | 32.9 | 45.4 | 9.1 | |
| | 1.4 | 20.2 | 6.4 | 16.0 | .1 | |
| 경 제 발 전 | 23 | 140 | 116 | 147 | 10 | 436 |
| | 5.3 | 32.1 | 26.6 | 33.7 | 2.3 | |
| | 25.0 | 15.9 | 26.7 | 18.9 | 30.3 | |
| | 1.0 | 6.3 | 5.2 | 6.6 | .5 | |
| 복 지 사 회 건 설 | 17 | 141 | 83 | 55 | 8 | 394 |
| | 4.3 | 35.8 | 21.1 | 32.8 | 2.0 | |
| | 18.5 | 16.0 | 19.1 | 18.6 | 24.2 | |
| | .8 | 6.4 | 3.7 | 6.5 | .4 | |
| 이 념 교 육 강 화 | 9 | 46 | 50 | 53 | 6 | 164 |
| | 5.5 | 28.0 | 30.5 | 32.3 | 3.7 | |
| | 9.8 | 5.2 | 11.5 | 6.8 | 18.2 | |
| | .4 | 2.1 | 2.3 | 2.4 | .3 | |
| 기 타 | 1 | 31 | 4 | 21 | 1 | 58 |
| | 1.7 | 53.4 | 6.9 | 36.2 | 1.7 | |
| | 1.1 | 3.5 | .9 | 2.7 | 3.0 | |
| | .0 | 1.4 | .2 | .9 | .0 | |
| 합 계 | 92 | 880 | 434 | 779 | 33 | 2218 |
| | 4.1 | 39.7 | 19.6 | 35.1 | 1.5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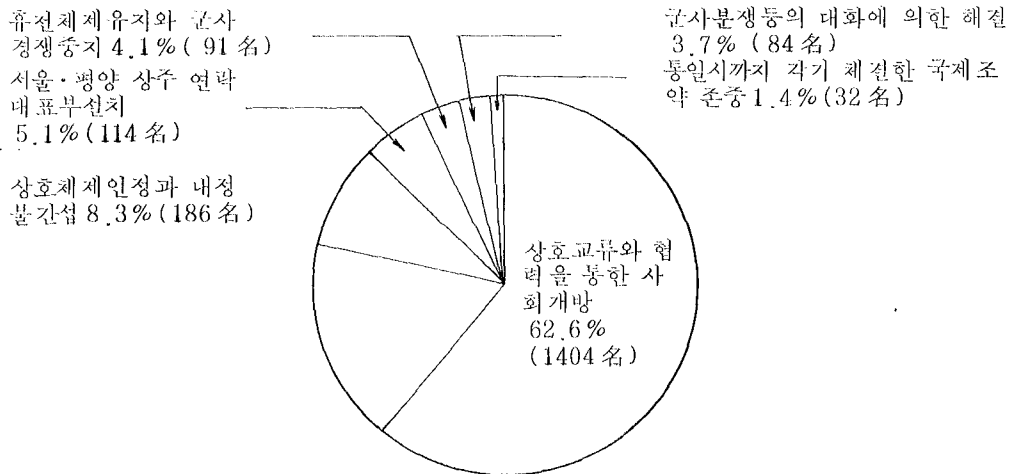
6.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제시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 協定案의 要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개방이 전체의 6할 이상 (62.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유지 (14.8%), 상호체제 인정과 내정불간섭 (8.3%), 서울·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5.1%), 휴전체제 유지와 군사경쟁중지 (4.1%), 군사분쟁등의 대화에 의한 해결 (3.7%), 통일시까지 각기 체결한 국제조약의 존중 (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개방 및 협력체제유지로 상호관계유지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안의 주요내용이라는 견해가 8할 이상 (85.7%)이 됨을 알 수 있다.

< 표 3-6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안의 요지



第6節 統一의 方案과 對話에 대한 見解

개 요

- ① 통일방법으로서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방법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60대이상에서는 자유총선거에 의한 방법이, 20대에 있어서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방안이 상대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 ② 통일논의는 국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거나 또는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20대와 60대가 제일 개방을 요구하는 연령층인데 최고책임자 회담, 각계 대표회담, 경제·스포츠·적십자·국회 회담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지금까지의 남북대화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과반수를 넘으며 대화접근방법도 정당 사회단체등의 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회담에 27%가량이 찬성하고 있다.
- ④ 북한이 실질적인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북한체제의 변화위협성때문 혹은 한국의 개방사회적 우위성만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⑤ 현재 대학가에서 주장되는 「남북학생회담」내지「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등의 통일구호에 대해서는 약 7할이 부정적으로, 약 3할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북한사회를 빈곤·폐쇄사회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대학가의 통일구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 ⑥ 한국야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직접대화에 대해 약 5할가량 찬성

하고 약 4할 가량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민족화합 민 주통일방안」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북한노동당 한국야당과 북한노동간의 직접대화접촉을 찬성한다.

- ⑦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는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것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7할에 이른다. 남한의 대북 우위성에 자신이 없거나 우위성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공동개최에 적극적이다. 반면 농촌지도자, 예체능인, 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이 상대적으로 공동개최에 부정적이 견해를 보인다.
- ⑧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남북 상호 신뢰 회복우선의 조건부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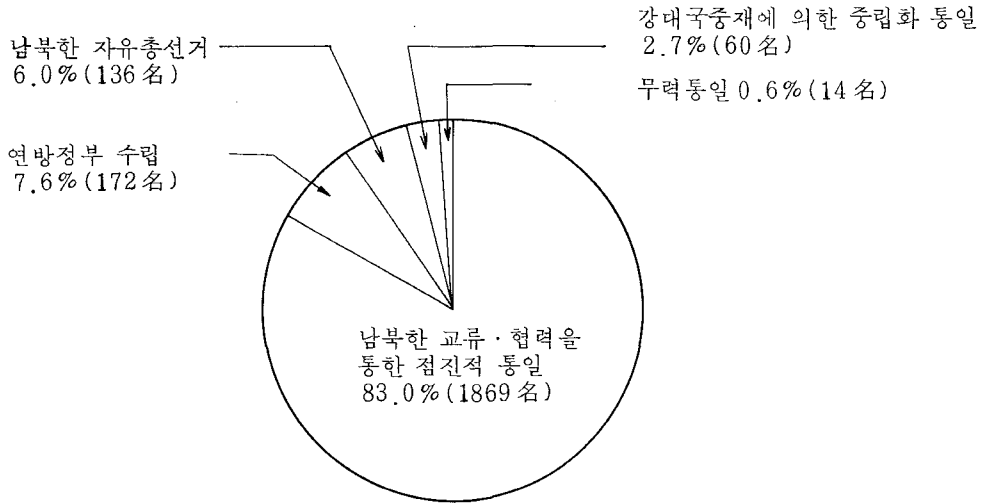
1. 統一方法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관해 살펴보면,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 전체의 약 83.0%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연방정부수립(7.6%), 남북한 자유총선거(6.0%), 강대국 중재에 의한 중립화 통일(2.7%), 무력통일(0.6%)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인 것을 볼 때 자체적인 노력과 공동체의식에 상호협력 등을 통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 표 5-1 >

통 일 방 법



그런데 자유민주체제가 우월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중에서는 9 할에 이르는 사람 (88.9 %) 이 남북한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산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58.5 %) 연립정부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류압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방안을 선호한데반해 공산주의를 선호한 사람일수록 연립정부에 의한 통일을 주장한다.

< 표 5-1-1 > 상호체제와 바람직한 통일방안과의 관계

| 바람직한 상호체제 \ 통일방법 | 남북한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 | 무력통일 | 중립화 통일 | 교류·협력 통일 점진적통일 | 연정에의한 통일 | 합 계 |
|------------------------|---------------------------|------------------------|--------------------------|------------------------------|---------------------------|---------------|
| 자유민주 주의제도 | 102 6.4 76.1 4.6 | 5 .3 35.7 .2 | 35 2.2 58.3 1.6 | 1415 88.9 76.1 63.4 | 34 2.1 20.6 1.5 | 1591 71.2 |
| 공산사회 주의제도 | 8 6.8 6.0 .4 | 1 .8 7.1 .0 | 5 4.2 8.3 .2 | 35 29.7 1.9 1.6 | 69 58.5 41.8 3.1 | 118 5.3 |
| 혼합절충 체제 | 20 4.4 14.9 .9 | 4 .9 28.6 .2 | 15 3.3 25.0 .7 | 358 79.6 19.2 16.0 | 53 11.8 32.1 2.4 | 450 20.2 |
| 별차이없음 | 4 5.6 3.0 .2 | 4 5.6 28.6 .2 | 4 5.6 6.7 .2 | 51 70.8 2.7 2.3 | 9 12.5 5.5 .4 | 72 3.2 |
| 합 계 | 134 6.0 | 14 .6 | 60 2.7 | 1860 83.3 | 165 7.4 | 2233 100.0 |

이러한 경향은 연령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연령에 따른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을 살펴보면 전 연령계층에 걸쳐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의 방법이 지배적인 견해이긴하나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높으며 (10대 5.3%, 40대 6.2%, 60대 20%) 연방정부수립을 통일방안으로 보는 견해는 젊은층일수록 높은 편이다. (20대 17.7%, 30대 5.1%, 40대 2.8%, 60대 2%)

< 표 5-1-2 > 연령과 바람직한 통일방법과의 관계

| 바람직한 통일방법 연령 | 남북한자유 총선거에 의한통일 | 무력통일 | 강대국중재에 의한 증립화통일 | 교류·협력 을 통한 점진적통일 | 연방정부 수립 | 합계 |
|--------------------|---------------------------|-----------------------|-------------------------|-----------------------------|----------------------------|---------------|
| 10 대 | 1 5.3 .7 .0 | 0 0 0 0 | 0 0 0 0 | 18 94.7 1.0 .8 | 0 0 0 0 | 19 .8 |
| 20 대 | 28 4.4 020.7 .2 | 6 .9 42.9 .3 | 13 2.0 21.7 .6 | 477 74.9 25.5 21.2 | 113 17.7 65.7 4.0 | 637 28.3 |
| 30 대 | 20 2.9 14.8 .9 | 5 .7 35.7 .2 | 17 2.5 28.3 .8 | 608 88.8 32.5 27.0 | 35 5.1 20.3 1.6 | 685 30.4 |
| 40 대 | 31 6.2 23.0 1.4 | 1 .2 7.1 .0 | 12 2.4 20.0 .5 | 443 88.4 23.7 19.7 | 14 2.8 8.1 .6 | 501 22.3 |
| 50 대 | 45 12.6 33.3 2.0 | 2 .6 14.3 .1 | 12 3.4 20.0 .5 | 290 81.0 15.5 12.9 | 9 2.5 5.2 .4 | 358 15.9 |
| 60 대이상 | 10 20.0 7.4 .4 | 0 0 0 0 | 6 12.0 10.0 .3 | 33 66.0 1.8 1.5 | 1 2.0 .6 .0 | 50 2.2 |
| 합계 | 135 6.0 | 14 .6 | 60 2.7 | 1869 83.1 | 172 7.6 | 2250 100.0 |

이같은 응답을 통일후의 이념체제 선호경향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비록 체제가 어떠한간에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교류를 선호하고 있지만 공산국의 체제 및 공산국 중심의 혼합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연방정부 수립에 의한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지도계층일수록 정부통일대화정책이나 방안에 비판적이고 연방정부수립을 통일방안으로 그리고 통일후 체제로 혼합 절충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젊은 계층에서도 그 성향에 있어 보다 급진적이거나 (Radical Orientation) 온전한 점진적성향 (Incrementalism) 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또 남한사회의 우위성설명능력과 통일방안 선호와의 관계를 볼 때 북한동포에게 남한사회의 우위설명이 자신 있다는 응답자들은 통일방안으로 '남북한 교류를 통한 점진적통일'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별로 자신이없다'거나 '우위설설명이 무의미'하다는 응답자들은 '연방 정부수립에 의한 통일'을 비교적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3 > 통일후의 이념체제와 통일방법과의 관계

| 통일방법 통일 후의 이념체제 | 남북한 자유선 군거 에의한 통일 | 무 력 통 일 | 강대국의 중재에의 한 중립화 통일 | 남북한교류 협력을통 한 접진적 통일 | 연방정부 에의 한 통일 | 합 계 |
|--------------------------|-------------------------------|------------------|--------------------------------|---------------------------------|-----------------------|--------|
| 공산주의 체제 | 1 | 2 | 0 | 2 | 15 | 20 |
| | 5.0 | 10.0 | 0 | 10.0 | 75.0 | |
| | .7 | 14.3 | 0 | .1 | 9.5 | |
| 자본주의 체제 | 42 | 5 | 13 | 496 | 6 | 562 |
| | 7.5 | .9 | 2.3 | 88.3 | 1.1 | |
| | 31.1 | 35.7 | 21.7 | 26.7 | 3.8 | |
| 공산주의중 심혼합체제 | 2 | 1 | 1 | 21 | 32 | 57 |
| | 3.5 | 1.8 | 1.8 | 90.8 | 56.1 | |
| | 1.5 | 7.8 | 1.7 | 47.1 | 20.3 | |
| 자본주의중 심의혼합체제 | 341 | 3 | 28 | 481 | 22 | 975 |
| | 4.2 | .3 | 2.9 | 75.4 | 2.3 | |
| | 30.4 | 21.4 | 46.7 | 24.4 | 13.9 | |
| 새로운 이념의체제 | 48 | 3 | 18 | 55 | 83 | 607 |
| | 7.9 | .5 | 3.0 | .0 | 13.7 | |
| | 35.6 | 21.4 | 30.0 | .5 | 52.5 | |
| 합계 | 135 | 14 | 60 | 1857 | 158 | 2224 |
| | 6.1 | .6 | 2.7 | 83.5 | 7.1 | |
| | | | | | | |

〈 표 5-1-4 〉 북한동포에게 남한사회 우위성 설명능력과 통일방법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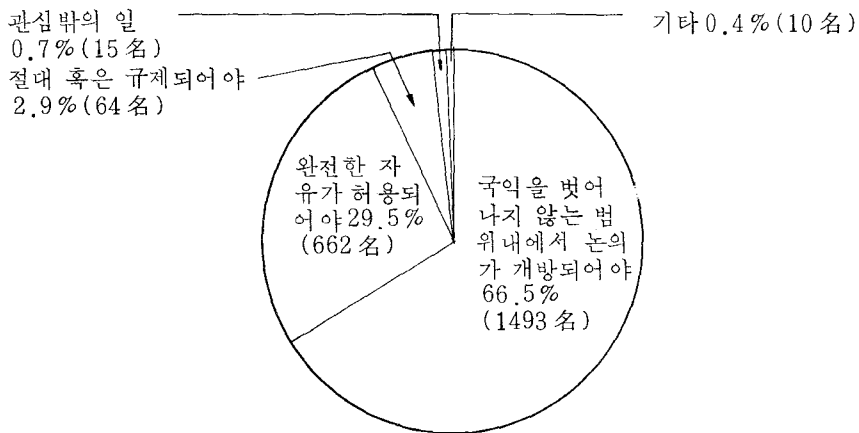
| 남한사회 우위성설명 방법 |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 | 무 통 일 | 력 일 | 강대국중재에 의한 중립화통일 | 남북교류를 통 한 점진적통일 | 연방정부를 통 한 통일 | 합 계 |
|---------------------|--------------------------|------------------------|--------------------------|-----------------------------|--------------------------|--------------------|--------|
| 아주 자신있음 | 46 6.4 34.8 2.1 | 4 .6 28.6 .2 | 26 3.6 44.1 1.2 | 630 87.9 34.0 28.3 | 11 1.5 6.6 .5 | 717 32.2 | |
| 약간 자신있음 | 27 5.4 20.5 1.2 | 4 .8 28.6 .2 | 10 2.0 16.9 .4 | 456 90.8 24.6 20.5 | 5 1.0 3.0 .2 | 502 22.5 | |
| 만나 봐야 알겠음 | 40 6.9 30.3 1.8 | 3 .5 21.4 .1 | 8 1.4 13.6 .4 | 497 85.5 26.8 22.3 | 33 5.7 19.8 1.5 | 581 26.1 | |
| 별로 자신없음 | 5 5.7 3.8 .2 | 3 3.4 21.4 .1 | 6 6.9 10.2 .3 | 53 60.9 2.9 2.4 | 20 23.0 12.0 .9 | 87 3.9 | |
| 우위성설명 이 무의미함 | 14 4.1 10.6 .6 | 0 0 0 0 | 9 2.6 15.3 .4 | 219 64.4 11.8 9.8 | 98 28.8 58.7 .4 | 340 15.3 | |
| 합 계 | 132 5.9 | 14 .6 | 59 2.6 | 1855 83.3 | 167 7.5 | 2227 100.0 | |

2. 統一論義 許容範圍

국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6할이상 (66.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완전히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29.5%)이다. 그러므로 국익을 고려하면서 신축성있게 각계에 걸친 통일논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96.0%)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 표 5-2 >

통일논의 허용범위



남북한의 현안문제 대화 방안과 통일문제논의 범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분적 허용에 답한 사람은 남북한 최고 책임자 회담 (27.9%), 각계각층의 대표 회담 (22.5%), 적십자, 경제, 스포츠, 국회 회담 (46.2%)로 대답한다.

완전허용에 응답한 사람은 남북한 최고 책임자 회담 (1.68%), 각계각층 대표 회담 (39.2%), 적십자, 경제, 스포츠, 국회 회담 (37.5%)으로 나타났다.

통일논의를 절제 혹은 규제해야 된다고 답한 사람은 남북한 최고 책임자 회담 (29.7%), 각계각층 대표 회담 (14.1%), 적십자, 경제, 스포츠, 국회 회담 (39.1%)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통일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대화장구를 다원화하길 원하는 경향이 짙고 절제 혹은 규제에 답한 사람일수록 대화 장구를 일원화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에 따른 통일논의 허용범위 인식 경향을 보면 국익범위내의 개방이 상당부분 (평균 66.5%)을 차지하고 완전자유 (29.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국익범위내 개방에서 30,40,50대가 70%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10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면서 완전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30,40,50대가 완전개방 (24.2, 20.2%, 22.4%)에 대해 소극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낮거나 아주 높은 계층에서 통일논의의 완전개방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 표 5-2-1 〉 남북한의 현안문제 해결방안과 통일논의 허용범위와의
관계 (대화)

| 통일논의 대화방안 | 자유롭게 완전허용 | 한계적 허용 | 절제 후규 | 제한 없음 | 관심 없음 | 기 타 | 합 계 |
|-----------------------|-----------------------------|-----------------------------|--------------------------|-----------------------|------------------------|---------------|--------|
| 남북한최고 책임자회담 | 111 20.3 16.9 5.0 | 415 75.7 27.9 18.6 | 19 3.5 29.7 .8 | 2 .4 13.3 .1 | 1 .2 10.0 .0 | 548 24.5 | |
| 각계각층의 대표회담 | 258 42.2 39.2 11.5 | 335 54.7 22.5 15.0 | 9 1.5 14.1 .4 | 5 .8 33.3 .2 | 5 .8 50.0 .2 | 612 27.4 | |
| 적십자경제 스포츠 국회회담 | 247 25.5 37.5 11.0 | 688 71.0 46.2 30.8 | 25 2.6 39.1 1.1 | 7 .7 46.7 .3 | 2 .2 20.0 .1 | 969 43.3 | |
| 미·소·중 공등의다국 적회담 | 21 28.4 3.2 .9 | 41 55.4 2.8 1.8 | 11 14.9 17.2 .5 | 1 1.4 6.7 .0 | 0 0 0 0 | 74 3.3 | |
| 기 타 | 21 63.6 3.2 .9 | 10 30.3 .7 .4 | 0 0 0 0 | 0 0 0 0 | 2 6.1 20.0 .1 | 33 1.5 | |
| 합 계 | 658 29.4 | 1490 66.6 | 64 2.9 | 15 .7 | 10 .4 | 2237 100.0 | |

< 표 5-2-2 >

연령과 통일논의 허용범위와의 관계

| 연령 \ 통일논의 정도 | 완전자유 | 국익범위내 개 방 | 절제규제 | 무관심 | 기 타 | 합 계 |
|--------------|------|--------------|------|------|------|-------|
| 10 대 | 9 | 9 | 0 | 0 | 1 | 19 |
| | 47.4 | 47.4 | 0 | 0 | 5.3 | |
| | 1.4 | .6 | 0 | 0 | 10.0 | |
| | .4 | .4 | 0 | 0 | .0 | |
| 20 대 | 290 | 325 | 13 | 4 | 5 | 637 |
| | 45.5 | 51.0 | 2.0 | .6 | .8 | |
| | 43.8 | 21.8 | 20.3 | 26.7 | 50.0 | |
| | 12.9 | 14.5 | .6 | .2 | .2 | |
| 30 대 | 165 | 491 | 21 | 4 | 1 | 682 |
| | 24.2 | 72.0 | 3.1 | .6 | .1 | |
| | 24.9 | 32.9 | 32.8 | 26.7 | 10.0 | |
| | 7.4 | 21.9 | .9 | .2 | .0 | |
| 40 대 | 101 | 378 | 12 | 5 | 3 | 499 |
| | 20.2 | 75.8 | 2.4 | 1.0 | .6 | |
| | 15.3 | 25.3 | 18.8 | 33.3 | 30.0 | |
| | 4.5 | 16.9 | .5 | .2 | .1 | |
| 50 대 | 80 | 261 | 14 | 2 | 0 | 357 |
| | 22.4 | 73.1 | 3.9 | .6 | 0 | |
| | 12.1 | 17.5 | 21.9 | 13.3 | 0 | |
| | 3.6 | 11.6 | .6 | .1 | 0 | |
| 60 대이상 | 17 | 28 | 4 | 0 | 0 | 49 |
| | 34.7 | 57.1 | 8.2 | 0 | 0 | |
| | 2.6 | 1.9 | 6.3 | 0 | 0 | |
| | .8 | 1.2 | .2 | 0 | 0 | |
| 합 계 | 662 | 1492 | 64 | 15 | 10 | 2243 |
| | 29.5 | 66.5 | 2.9 | .7 | .4 | 100.0 |

한편 공산주의를 이론·실제 모두 나쁘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국
 의의 한계라는 단서하에 통일논의를 허용한다는 견해가 많은 반면에
 (78.2%) 공산주의를 이론·실제 모두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수 (74%) 가 통일논의를 완전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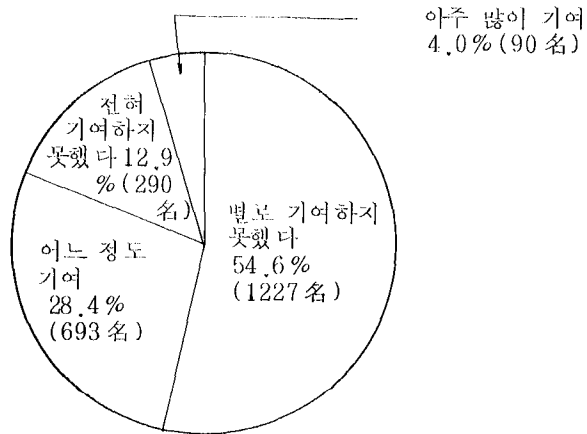
< 표 5-2-3 >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와 통일논의의 허용범위와의 관계

| 통일논의의 공허용범위 산주 의에대한평가 | 완 전 한 허 용 | 국 의 의 한계내허용 | 통일논의의 절제, 규제 | 관 심 없 음 | 기 타 | 합 계 |
|--------------------------------|-----------------------------|-----------------------------|--------------------------|------------------------|------------------------|---------------|
| 이론·실제 모두 나쁨 | 126 17.5 19.9 5.7 | 563 78.2 38.0 25.6 | 24 3.3 38.1 1.1 | 5 .7 33.3 .2 | 2 .3 20.0 .1 | 720 32.7 |
| 이론은 좋은나 실제는나쁨 | 348 29.4 55.0 15.8 | 798 67.5 53.9 36.3 | 25 2.1 9.7 1.1 | 5 .4 33.3 .2 | 7 .6 70.0 .3 | 1183 53.7 |
| 이론은 나쁘나 실제는 좋음 | 5 31.3 .8 .2 | 8 50.0 .5 .4 | 3 18.8 4.8 .1 | 0 0 0 0 | 0 0 0 0 | 16 .7 |
| 모두 좋음 | 74 74.0 11.7 3.4 | 17 17.0 1.1 .8 | 5 5.0 7.9 .2 | 3 3.0 20.0 .1 | 1 1.0 10.0 .0 | 100 4.5 |
| 잘 모름 | 80 44.0 12.6 3.6 | 94 51.6 6.4 4.3 | 6 3.3 9.5 .3 | 2 1.1 13.3 .1 | 0 0 0 0 | 182 8.3 |
| 합 계 | 633 28.8 | 1480 67.2 | 63 2.9 | 15 .7 | 10 .5 | 2201 100.0 |

3. 南北對話의 寄與度 評價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 그 동안의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는가에 관해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과반수(54.6%)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28.4%) 그리하여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의 남북대화가 기여했다고 보는 견해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와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4%)를 포함, 3할 정도가 긍정적 반응이다. 반면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견해(12.9%)를 포함, 한국의 직능별 사회지도세력의 7할 가까이 현재까지의 남북긴장완화나 통일성취에 남북대화 노력이 부정적이라고 본다.

< 표 5-3 > 통일에 대한 남북대화의 기여도



그런데 남한의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일수록 긴장완화에 남북대화가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한국의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선도 계층일수록 남북대화가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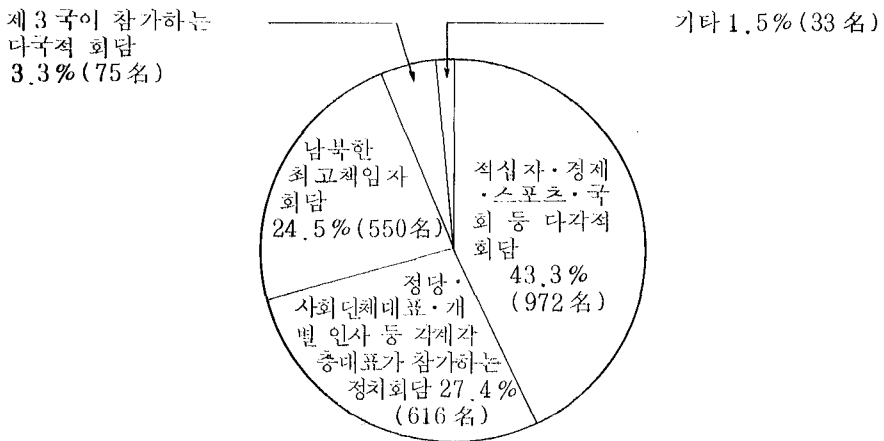
< 표 5-3-1 > 민주통일방안과 대화의 기여도 평가와의 관계

| 남북대화의 통일기여정도 방안평가 | 많이 기여 | 어느 정도 | 별로 기여 못함 | 전혀 못함 | 합 계 |
|-------------------------|---------------------------|-----------------------------|-----------------------------|----------------------------|---------------|
| 그 대 로 | 25 14.9 28.4 1.1 | 68 40.5 10.8 3.1 | 66 39.3 5.5 3.0 | 9 5.4 3.2 .4 | 168 7.6 |
| 통일·평화 부 각 | 41 4.6 46.6 1.9 | 312 35.3 49.6 14.1 | 453 51.3 37.7 20.5 | 76 8.6 26.7 3.4 | 883 40.0 |
| 전면 수정 | 10 2.1 11.4 .5 | 76 15.7 12.1 3.4 | 279 57.6 23.2 12.7 | 119 24.6 41.8 5.4 | 484 22.0 |
| 추 가 | 5 2.0 5.7 .2 | 83 33.1 13.2 3.8 | 137 54.6 11.4 6.2 | 26 10.4 9.1 1.2 | 251 11.4 |
| 모 름 | 7 1.7 8.0 .3 | 90 21.5 14.3 4.1 | 267 63.7 22.2 12.1 | 55 13.1 19.3 2.5 | 419 19.0 |
| 합 계 | 88 4.0 | 629 28.5 | 1202 54.5 | 285 12.9 | 2205 100.0 |

4. 南北韓 對話接近 方法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스포츠회담, 국회회담 등 다각적 회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의 4할을 상회(43.3%)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정당, 사회단체대표, 개별인사등 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가하는 정치회담개최(27.4%), 남북한 최고책임자 회담개최(24.5%), 미국·소련·중공 등 제3국이 참가하는 다국적회담(3.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5-4 > 남북한 대화 접근 방법



이같은 경향을 남북한 양측의 통일외지, 비교성향과 연계시켜보면 북한이 남북한 통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북대화의 방법으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 개별적 인사등 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회담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외의 사람들은 적십자 회담, 경제회담, 스포츠회담, 국회회담 등 다각적인 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남북대화의 방법으로는 다각적 회담을 선호하고 있으며 남북한은 모두 통일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므로 남북한 모두 적십자 회담, 경제회담, 스포츠회담, 국회회담등 다각적인 회담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통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주요기능별 지도세력은 인식한다.

< 표 5-4-1 > 적극적 통일추구세력과 남북대화 접근방법과의 관계

| 남북대화 통일 추구세력 | 남북한 최고 책임자 회담 | 각계각층의 대표자참가 하는정치회담 | 다각적인 회 담 | 다 국 적 회 담 | 기 타 | 합 계 |
|--------------------|-----------------------------|-----------------------------|-----------------------------|--------------------------|-------------------------|---------------|
| 한 국 | 276 33.9 50.4 12.3 | 165 20.3 26.9 7.4 | 340 41.8 35.1 15.2 | 29 3.6 38.7 1.3 | 3 .4 9.1 .1 | 813 36.3 |
| 북 한 | 33 13.7 6.0 1.5 | 133 55.2 21.7 5.9 | 58 24.1 6.0 2.6 | 10 4.1 13.3 .4 | 7 2.9 21.2 .3 | 241 10.8 |
| 양쪽모두 적 극 적 | 12 17.9 2.2 .5 | 20 29.9 3.3 .9 | 30 44.8 3.1 1.3 | 3 4.5 4.0 .1 | 2 3.0 6.1 .1 | 67 3.0 |
| 양쪽모두 소 극 적 | 227 20.3 41.4 10.1 | 296 26.5 48.2 13.2 | 540 48.3 55.7 24.1 | 33 3.0 44.0 1.5 | 21 1.9 63.6 .9 | 1118 49.9 |
| 합 계 | 548 24.5 | 614 27.4 | 969 43.3 | 75 3.3 | 33 1.5 | 2240 100.0 |

그리고 남한의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에 만족할수록 남북대화의 방식으로 최고 책임자 회담을 지지(42.9%) 하고, 남한의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할수록 각계 각종 대표의 정치회담(43.2%)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 표 5-4-2 >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화접근과의 관계

| 남한의 대화의 방식 통일방안평가 | 최고책임자 회 담 | 각종대표의 정 치 회담 | 다가적회담 | 다국적회담 | 기 타 | 합 계 |
|----------------------|--------------|-----------------|-------|-------|------|-------|
| 그 대 로 | 72 | 19 | 75 | 1 | 1 | 168 |
| | 42.9 | 11.3 | 44.6 | .6 | .6 | 7.6 |
| | 13.3 | 3.1 | 7.9 | 1.4 | 3.0 | |
| | 3.3 | .9 | 3.4 | .0 | .0 | |
| 통일·평화 부 각 | 245 | 212 | 394 | 21 | 8 | 880 |
| | 27.8 | 24.1 | 44.8 | 2.4 | .9 | 39.9 |
| | 45.3 | 34.9 | 41.4 | 28.8 | 24.2 | |
| | 11.1 | 9.6 | 17.9 | 1.0 | .4 | |
| 전면수정 | 68 | 209 | 171 | 21 | 14 | 484 |
| | 14.0 | 43.2 | 35.3 | 4.3 | 2.9 | 21.9 |
| | 12.6 | 34.4 | 18.0 | 28.8 | 42.4 | |
| | 3.1 | 9.5 | 7.8 | 1.0 | .6 | |
| 추 가 | 76 | 52 | 109 | 13 | 4 | 254 |
| | 29.9 | 20.5 | 42.9 | 5.1 | 1.6 | 11.5 |
| | 14.0 | 8.6 | 11.5 | 17.8 | 12.1 | |
| | 3.4 | 2.4 | 4.9 | .6 | .2 | |
| 모 름 | 80 | 115 | 202 | 17 | 6 | 420 |
| | 19.0 | 27.4 | 48.1 | 4.0 | 1.4 | 19.0 |
| | 14.8 | 18.9 | 21.2 | 23.3 | 18.2 | |
| | 3.6 | 5.2 | 9.2 | .8 | .3 | |
| 합 계 | 541 | 607 | 951 | 73 | 33 | 2206 |
| | 24.5 | 27.5 | 43.1 | 3.3 | 1.5 | 100.0 |

한편 북한체제의 우위성평가와 선호하는 남북대화 방식간의 관계를 볼 때 ‘조직력과 단결력’, ‘인내력과 내핍생활’ 등의 가시적 물리적 속성을 북한의 강점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남북대화 방식에서 ‘최고책임자회담’을 비교적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자주성과 주체성’, ‘균등한 소득분배’ 등 정치적, 이념적 사항을 북한체제의 우위성으로 꼽는 사람들은 ‘정당·사회단체, 개별적 접촉등의 각계 각종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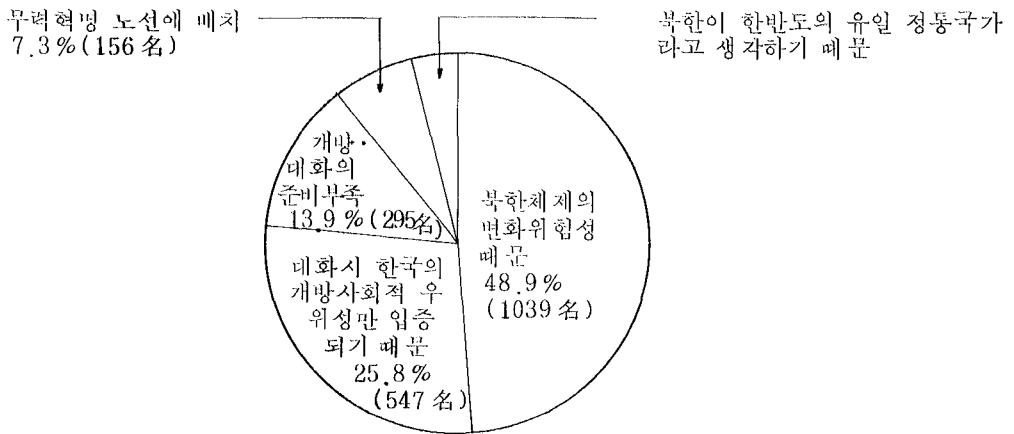
< 표 5-4-3 > 북한 체제의 본받을 점과 남북한 대화 접근방법의 관계

| 대화접근 북한체제 의본받을점 | 최고책임자 회 담 | 정당사회단체 개별적 각계 각종 회담 | 적십자, 경제 스포츠, 국회 회 담 등 | 미·소·중등 제3자가참여 하는외국적회담 | 기 타 | 합 계 |
|-----------------------|----------------------------|-----------------------------|-----------------------------|-----------------------------|-------------------------|---------------|
| 조직력과 단결력 | 192 28.9 35.8 8.9 | 158 23.8 27.0 7.3 | 287 43.2 30.6 13.3 | 22 3.3 30.1 1.0 | 5 .8 16.1 .2 | 664 30.7 |
| 자주성과 주체성 | 125 17.5 23.3 5.8 | 251 35.2 42.9 11.6 | 300 42.0 31.9 13.9 | 21 2.9 28.8 1.0 | 17 2.4 54.8 .9 | 714 33.0 |
| 인내력과 내핍생활 | 38 29.7 7.1 1.8 | 28 21.9 4.8 1.3 | 55 43.0 5.9 2.5 | 7 5.5 9.6 .3 | 0 0 0 0 | 128 5.9 |
| 균등한 소득분배 | 51 21.6 9.5 2.4 | 75 31.8 12.8 3.5 | 94 39.8 10.0 4.3 | 9 3.8 12.3 .4 | 6 2.5 19.4 .3 | 236 10.9 |
| 본받을것이 없음 | 130 30.7 24.3 6.0 | 73 17.3 12.5 3.4 | 203 48.0 21.6 9.4 | 14 3.3 19.2 .6 | 3 .7 9.7 .1 | 423 19.5 |
| 합 계 | 536 24.8 | 585 27.0 | 939 43.4 | 73 3.4 | 31 1.4 | 2165 100.0 |

5. 北韓의 對話不應 理由

북한이 실질적인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북한 체제의 변화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이 전체 응답자의 약 반수 (48.9%)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대화를 하면 한국의 개방사회의 우위성만 입증되기 때문이라는 입장 (25.8%)으로 연결된다. 그외의 이유로, 아직도 개방·대화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13.9%), 북한의 무력 혁명노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견해 (7.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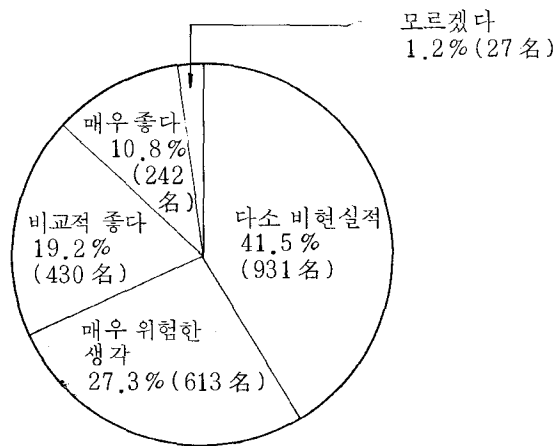
< 표 5-5 > 북한측의 대화불응 이유



6. 南北學生會談에 대한 見解

현재 대학가에서 주장되고 있는 “남북학생회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등의 통일구호들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 약 4할정도 (4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입장 (27.3%)이라고 보아 7할정도의 여론선도계층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비교적 좋다는 입장 (19.2%), 매우 좋다는 견해 (10.8%)를 포함, 남북학생 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13할이 된다.

<표 5-6> 남북학생 회담에 대한 견해



이것을 전쟁가능성 인식도와의 관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북한 전쟁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대학가의 남북학생회담구호에 회의적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전쟁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응답할수록 대학가의 통일, 남북학생회담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표 5-6-1> 전쟁가능성 인식도와 대학가의 통일구호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 전쟁가능성 인식도 | 매우 좋다 | 비교적 좋다 | 다소비현실적이다 | 매우위험한 생각이다 | 모르겠다 | 합계 |
|-----------|----------------------------|----------------------------|-----------------------------|-----------------------------|-------------------------|---------------|
| 아주 높다 | 32 15.8 13.4 1.4 | 15 7.4 3.5 .7 | 46 22.7 4.9 2.1 | 110 54.2 18.0 4.9 | 0 0 0 | 203 9.1 |
| 약간 높다 | 30 4.8 12.6 1.3 | 75 11.9 17.4 3.4 | 259 41.2 27.8 11.6 | 257 40.9 42.1 11.5 | 7 1.1 25.9 .3 | 628 28.1 |
| 보통이다 | 38 6.3 15.9 1.7 | 108 18.0 25.1 4.8 | 305 50.8 32.8 13.6 | 139 23.2 22.8 6.2 | 10 1.7 37.0 .4 | 600 26.8 |
| 약간 낮다 | 39 9.2 16.3 1.7 | 116 27.2 27.0 5.2 | 202 47.4 21.7 9.0 | 63 14.8 10.3 2.8 | 6 1.4 22.2 .3 | 426 19.0 |
| 아주 낮다 | 100 26.3 41.8 4.5 | 116 30.5 27.0 5.2 | 119 31.3 12.8 5.3 | 41 10.8 6.7 1.8 | 4 1.1 14.8 .2 | 380 17.0 |
| 합계 | 239 10.7 | 430 19.2 | 931 41.6 | 610 27.3 | 27 1.2 | 2237 100.0 |

또한 북한 사회를 빈곤폐쇄사회로 보는 응답자들 중 8할 이상 (83.9%)은 대학가의 통일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을 공산권 중진국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82.3%가 대학가의 통일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빈곤폐쇄사회로 보는 응답자일수록 대학가의 통일논의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진국으로 보는 응답자일수록 대학가의 통일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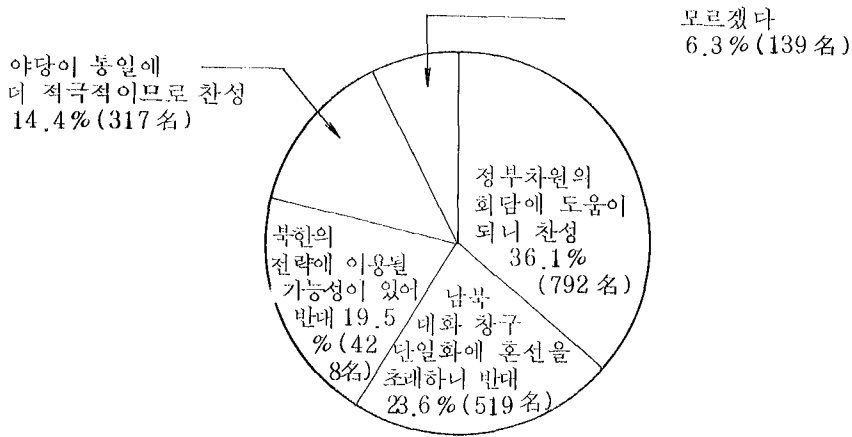
< 표 5-6-2 > 북한사회에 관한 견해와 대학가 통일논의에 대한 견해와의 상관관계

| 통일구호에 북한 관한 견해 사회에 관한 견해 | 매 우 중 다 | 비 교 적 중 다 | 다 소 비현실적 | 매 우 위 험 | 모르겠다 | 합 계 |
|--------------------------------|---------------------------|----------------------------|-----------------------------|-----------------------------|-------------------------|---------------|
| 빈곤·폐쇄 사 회 | 39 3.1 16.7 1.8 | 151 12.2 35.9 6.8 | 536 43.2 58.2 24.3 | 505 40.7 83.2 22.9 | 9 .7 34.6 .4 | 1240 56.1 |
| 개발도상국 | 80 13.7 34.2 3.6 | 166 28.4 39.4 7.5 | 262 44.9 28.4 11.9 | 71 12.2 11.7 3.2 | 5 .9 19.2 .2 | 584 26.4 |
| 중 진 국 | 85 53.8 36.3 3.8 | 45 28.5 10.7 2.0 | 23 14.6 2.5 1.0 | 4 2.5 .7 .2 | 1 .6 3.8 .0 | 158 7.2 |
| 선진공업사회 | 3 20.0 1.3 .1 | 4 26.7 1.0 .2 | 7 46.7 .8 .3 | 1 6.7 .2 .0 | 0 0 0 0 | 15 .7 |
| 모르겠다 | 26 12.4 11.1 1.2 | 54 25.7 12.8 2.4 | 93 44.3 10.1 4.2 | 26 12.4 4.3 1.2 | 11 5.2 42.3 .5 | 210 9.5 |
| 합 계 | 234 10.6 | 421 19.1 | 921 41.7 | 607 27.5 | 26 1.2 | 2209 100.0 |

7. 野黨과 北韓 勞動黨간의 直接對話에 대한 意見

한국의 야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직접적인 통일회담개최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정부 차원의 회담에 도움이 되니 찬성한다 (36.1%), 야당이 통일에 적극적이므로 찬성한다 (14.4%) 라는 견해로 5할 가량이 찬성하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대화 창구 단일화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23.6%), 북한의 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19.5%) 반대하는 견해는 4할 정도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야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직접 대화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5할과 4할로 야당의 북한노동당과의 직접대화를 찬성하는 견해가 약간 높으나 크게 보아 엇비슷한 견해로 대별된다.

< 표 5-7 > 야당과 북한노동당간의 직접 대화에 대한 견해



이들 여론선도계층 중에서 한국의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에 찬성할 수록 야당과 노동당의 직접대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고 남한의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야당과 노동당의 직접대화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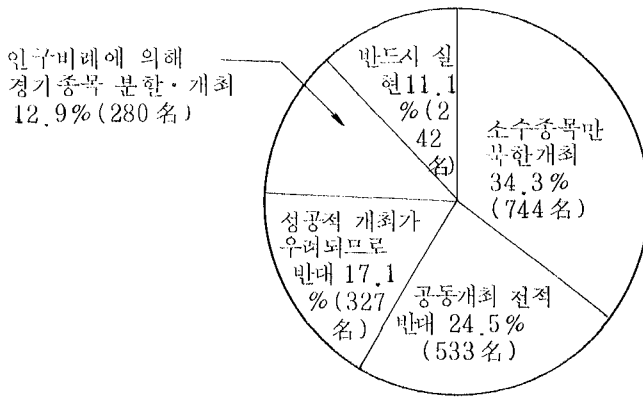
< 표 5-7-1 > 민주통일방안의 평가와 야당과 노동당의 대화에 대한 견해의 관계

| 노동당의 통일 방안평가 | 노동당의 직접대화 | 찬 성 | 정부차원에 도움됨으로 찬 성 | 혼선초래로 반 대 | 전략에이용될 가능성반대 | 모 름 | 합 계 |
|--------------------|--------------|--------|--------------------------|-----------------|-----------------|--------|--------|
| 그 대 로 | | 12 | 36 | 65 | 53 | 2 | 168 |
| | | 7.1 | 21.4 | 38.7 | 31.5 | 1.2 | 7.8 |
| | | 3.8 | 4.7 | 12.8 | 12.6 | 1.4 | |
| | | .6 | 1.7 | 3.0 | 2.5 | .1 | |
| 통일·평화부각 | | 75 | 330 | 233 | 197 | 31 | 866 |
| | | 8.7 | 38.1 | 26.9 | 22.7 | 3.6 | 40.1 |
| | | 23.9 | 42.6 | 45.8 | 46.7 | 22.5 | |
| | | 3.5 | 15.3 | 10.8 | 9.1 | 1.4 | |
| 전면 수정 | | 145 | 166 | 60 | 55 | 35 | 461 |
| | | 31.5 | 36.0 | 13.0 | 11.9 | 7.6 | 21.4 |
| | | 46.2 | 21.4 | 11.8 | 13.0 | 25.4 | |
| | | 6.7 | 7.7 | 2.8 | 2.5 | 1.6 | |
| 추 가 | | 27 | 97 | 64 | 46 | 15 | 249 |
| | | 10.8 | 39.0 | 25.7 | 18.5 | 6.0 | 11.5 |
| | | 8.6 | 12.5 | 12.6 | 10.9 | 10.9 | |
| | | 1.3 | 4.5 | 3.0 | 2.1 | .7 | |
| 모 름 | | 55 | 145 | 87 | 71 | 55 | 413 |
| | | 13.3 | 35.1 | 21.1 | 17.2 | 13.3 | 19.1 |
| | | 17.5 | 18.7 | 17.1 | 16.8 | 39.9 | |
| | | 2.5 | 6.7 | 4.0 | 3.3 | 2.5 | |
| 합 계 | | 314 | 774 | 509 | 422 | 138 | 2157 |
| | | 14.6 | 35.9 | 23.6 | 19.6 | 6.4 | 100.0 |

8. 올림픽 共同開催에 대한 見解

소수 종목만 북한에서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는 3할을 상회(34.3%)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개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24.5%), 성공적 개최가 의심스러우므로 반대한다는 입장(17.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 전반적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 응답자의 약 6할(58.3%),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약 4할(41.6%)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5-8>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견해



남한 우위성 설명능력과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견해와의 관계를 볼 때, 북한 동포에게 남한 사회의 우위성을 설명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응답자들은 올림픽 공동개최를 반대하거나 소수 종목만을 북한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견해가 비교적 높은데 비해, ‘자신이 없다’거나 ‘우위성 설명이 무의미하다는 응답자들은 ‘반드시 공동개최를 실현해야 한다’거나 ‘인구비례로 경기분할·개최’를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1> 남한사회의 우위성 설명능력과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견해와의 관계

| 남한 우위성설명 올림픽공동 개최에대한 견해 | 북한주장 대로라도 반드시실현 | 인구비례로 분할·개최 | 북한에서 소수종목 개최 | 성공적개최 에지장있어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합계 |
|----------------------------------|----------------------------|---------------------------|-----------------------------|----------------------------|----------------------------|---------------|
| 아주 자신있음 | 34 4.9 14.2 1.6 | 59 8.4 21.4 2.7 | 267 38.1 35.9 12.4 | 129 18.4 34.9 6.0 | 211 30.1 39.8 9.8 | 700 32.4 |
| 약간 자신있음 | 19 3.8 7.9 .9 | 54 10.9 19.6 2.5 | 186 37.6 25.0 8.6 | 108 21.8 29.2 5.0 | 128 25.9 24.2 5.9 | 495 22.9 |
| 만나 봐야 알겠음 | 50 8.8 20.9 2.3 | 82 14.5 29.7 3.8 | 188 33.2 25.3 8.7 | 99 17.5 26.8 4.6 | 147 26.0 27.7 6.8 | 566 26.2 |
| 별로 자신없음 | 18 21.4 7.5 .8 | 17 20.2 6.2 .8 | 26 31.0 3.5 1.2 | 9 10.7 2.4 .4 | 13 15.5 2.5 .6 | 84 3.9 |
| 우위성설명 이 무의미함 | 118 37.6 49.4 5.5 | 64 20.4 23.2 3.0 | 76 24.2 10.2 3.5 | 25 8.0 6.8 1.2 | 31 9.9 5.8 1.4 | 314 14.5 |
| 합계 | 239 11.1 | 276 12.8 | 743 34.4 | 370 17.1 | 530 24.5 | 2159 100.0 |

직업분포와 관련시켜보면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농촌지도자(67.8%),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63%), 예체능인(60%) 등이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반면에 대학생간부(57.2%), 정치인(18.6%)의 경우에는 올림픽 공동개최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8-2> 올림픽 공동개최여부의 관계

| 올림픽 공동개최 직업 | 반드시 실현 | 인구비례에 의한 분할개최 | 소수종목 제한개최 | 성공적개최 우려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합계 |
|-------------------|--------------------------|---------------------------|----------------------------|---------------------------|----------------------------|-------------|
| 공무원 | 25 5.7 10.3 1.2 | 28 6.4 10.0 1.3 | 183 41.7 24.6 8.4 | 74 16.9 19.9 3.4 | 129 29.4 24.2 5.9 | 439 20.2 |
| 정치인 | 16 18.6 6.6 .7 | 13 15.3 4.6 .6 | 27 31.8 3.6 1.2 | 9 10.6 2.4 .4 | 20 23.5 3.8 .9 | 85 3.9 |
| 법조인 | 0 0 0 0 | 0 0 0 0 | 12 60.0 1.6 .6 | 2 10.0 .5 .1 | 6 30.0 1.1 .3 | 20 .9 |
| 기업체간부 | 11 5.6 4.5 .5 | 32 16.3 11.4 1.5 | 74 37.8 9.9 3.4 | 37 18.9 9.9 1.7 | 42 21.4 7.9 1.9 | 196 9.0 |
| 경제노동단체 | 8 8.6 3.3 .4 | 10 10.8 3.6 .5 | 32 34.4 4.3 1.5 | 22 23.7 5.9 1.0 | 21 22.6 3.9 1.0 | 93 4.3 |
| 언론인 | 7 7.1 2.9 .3 | 17 17.2 6.1 .8 | 37 37.4 5.0 1.7 | 22 22.2 5.9 1.0 | 16 16.2 3.0 .7 | 99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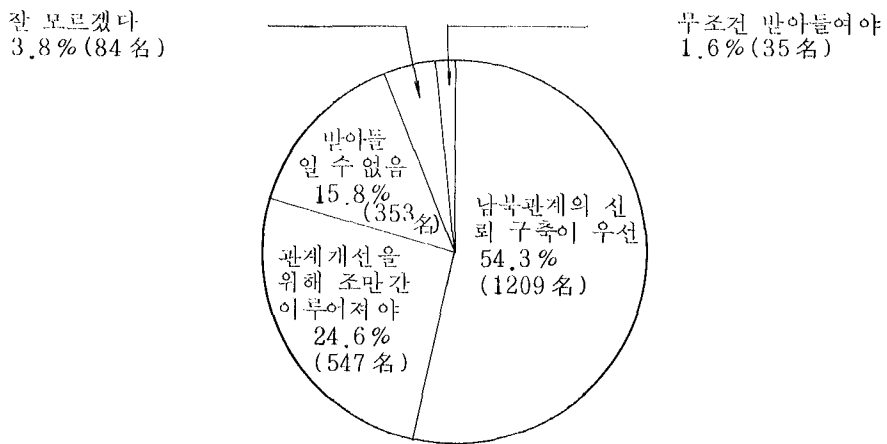
| 올림픽 공동개최 직업 | 반드시 실현 | 인구비례에 의한 분할개최 | 소수종목 복한개최 | 성공적개최 우려반대 | 전적으로 반대 | 합계 |
|-------------------|----------------------------|---------------------------|----------------------------|---------------------------|----------------------------|---------------|
| 종교인 | 8 10.1 3.3 .4 | 16 20.3 5.7 .7 | 18 22.8 2.4 .8 | 10 12.7 2.7 .5 | 27 34.2 5.1 1.2 | 79 3.6 |
| 예체능인 | 3 6.7 1.2 .1 | 3 6.7 1.1 .1 | 12 26.7 1.6 .6 | 10 22.2 2.7 .5 | 17 37.8 3.2 .8 | 45 2.1 |
| 대학교수 | 14 6.5 5.8 .6 | 42 19.6 15.0 1.9 | 96 44.9 12.9 4.4 | 30 14.0 8.1 1.4 | 32 15.0 6.0 1.5 | 214 9.9 |
| 대학생간부 | 111 57.2 45.9 5.1 | 44 22.7 15.7 2.0 | 22 11.3 3.0 1.0 | 6 3.1 1.6 .3 | 10 5.2 1.9 .5 | 194 8.9 |
| 연구소 | 3 7.7 1.2 .1 | 7 17.9 2.5 .3 | 17 43.6 2.3 .8 | 5 12.8 1.3 .2 | 7 17.9 1.3 .3 | 39 1.8 |
| 농촌지도자 | 2 2.3 .8 .1 | 7 8.0 2.5 .3 | 19 21.8 2.6 .9 | 28 32.2 7.5 1.3 | 31 35.6 5.8 1.4 | 87 4.0 |
| 기타 | 33 8.1 13.6 .5 | 57 13.9 20.4 2.6 | 136 33.3 18.3 6.3 | 75 18.3 20.2 3.5 | 108 26.4 20.3 5.0 | 409 18.8 |
| 평통자문위원 | 1 .6 .4 .0 | 4 2.3 1.4 .2 | 59 34.1 7.9 2.7 | 42 24.3 11.2 1.9 | 67 38.7 12.6 3.1 | 173 8.0 |
| 합계 | 242 11.1 | 280 12.9 | 744 34.3 | 372 17.1 | 533 24.5 | 2172 100.0 |

9. 南北韓 軍事會談에 대한 意見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군사회담에 관해서는, 군사분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체의 과반수(54.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24.6%),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략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15.8%),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수견해(1.6%)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북한측이 제시한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조건부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신중한 견해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5-9 > 남북한 군사회담에 대한 견해



第7節 統一의 課題와 展望

概 要

① 현 南北關係에서 統一問題는 平和기조하에서 漸進的인 方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統一의 선결과제로서 약 7할이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는 非政治分野로부터의 解決을 1.6할 가량이 주장한다.

② 統一을 위한 國際的 課題로서는 美·日·中·蘇의 남북한 교차승인, 中·蘇와의 관계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8할 이상이 인식하고 있다. 美·日등 우방과의 단순한 관계개선을 지적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③ 統一을 위한 國內的 課題로서는 民主主義의 確立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4할을 상회하는 응답자가 대답했다. 그다음이 經濟發展과 福祉社會 建設인데, 젊은世代일수록 民主主義확립을 중시하고 노년층일수록 經濟發展과 福祉社會 建設을 중시한다.

④ 統一-安保教育上 더욱 주력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北韓實情 소개가 4할로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 國民의 統一意識 고취가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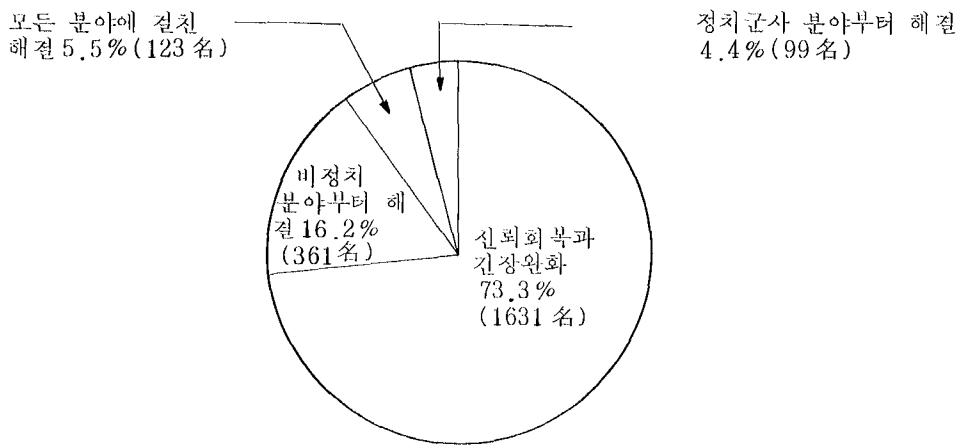
1. 統一을 위한 先決課題

현 남북한관계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결과제에 있어서는 신뢰회복과 긴장완화가 전체의 7할을 상회(73.3%)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의 해결(16.2%), 모든 분야에

결친 해결 (5.5%), 정치군사분야에서부터의 해결 (4.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평화적 무도내에서의 통일노력과 이를 통한 점진적인 통일 점진적인 통일성취가 지배적 견해라고 하겠다.

<표 7- 1> 統一을 위한 先決課題



이같은 응답을 통일장애요인 인식태도와 연결시켜 살펴보면 통일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든간에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남북한 상호불신을 통일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만이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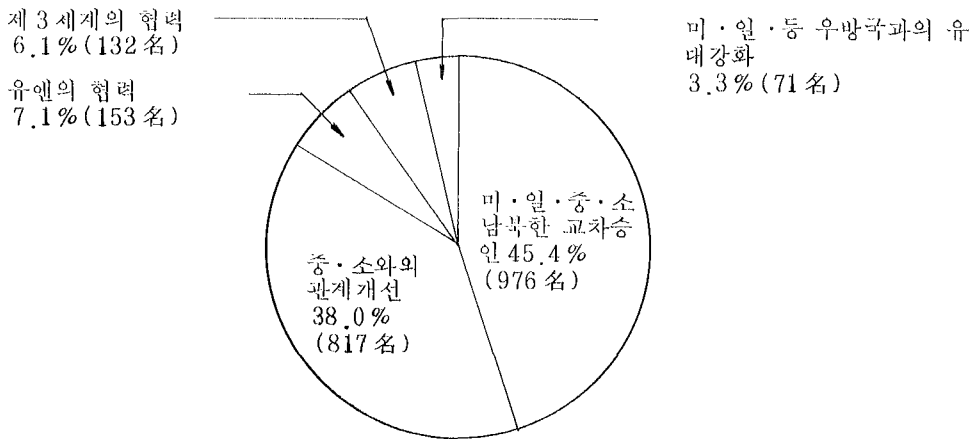
<표 7-1-1> 統一障礙要因과 統一을 위한 先決課題와의 關係

| 통일 장애 요인 | 통일문제를 풀기 위한 선결과제 | 신뢰회복과 긴장완화 | 비정치분야 부터 해결 | 정치 군사 분야부터 해결 | 모든분야를 통틀어해결 | 합 계 |
|------------------|------------------|------------|-------------|---------------|-------------|-----|
| 사상체제의 대립 | 375 | 98 | 19 | 19 | 541 | |
| | 73.0 | 19.1 | 3.7 | 3.7 | 23.3 | |
| | 23.2 | 27.2 | 19.6 | 15.7 | | |
| | 17.0 | 4.4 | .9 | .9 | | |
| 미·소·중·일의 이해관계 대립 | 351 | 84 | 30 | 30 | 498 | |
| | 70.5 | 16.9 | 6.0 | 6.0 | 22.6 | |
| | 21.7 | 23.3 | 30.9 | 24.8 | | |
| | 15.9 | 3.8 | 1.4 | 1.4 | | |
| 북한지도자의 무성의 | 81 | 26 | 4 | 10 | 122 | |
| | 66.4 | 31.3 | 3.3 | 8.2 | 5.5 | |
| | 5.0 | 7.2 | 4.1 | 8.3 | | |
| | 3.7 | 1.2 | .2 | .5 | | |
| 한국지도자의 무성의 | 60 | 10 | 10 | 19 | 100 | |
| | 60.0 | 10.0 | 10.0 | 19.0 | 4.5 | |
| | 3.7 | 2.8 | 10.3 | 15.7 | | |
| | 2.7 | .5 | .5 | .9 | | |
| 남북한 상호불신 | 344 | 44 | 16 | 18 | 424 | |
| | 81.1 | 10.4 | 3.8 | 4.2 | 19.2 | |
| | 21.3 | 12.2 | 16.5 | 14.9 | | |
| | 15.6 | 2.0 | .7 | .8 | | |
| 남북한의 국제정치불안 | 55 | 16 | 4 | 7 | 82 | |
| | 67.1 | 19.5 | 4.9 | 8.5 | 3.7 | |
| | 3.4 | 4.4 | 4.1 | 5.8 | | |
| | 2.5 | .7 | .2 | .3 | | |
|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화 | 350 | 82 | 14 | 18 | 465 | |
| | 75.3 | 17.6 | 3.0 | 3.9 | 21.1 | |
| | 21.6 | 22.8 | 14.4 | 14.9 | | |
| | 15.9 | 3.7 | .6 | .8 | | |
| 합 계 | 1617 | 360 | 97 | 121 | 2206 | |
| | 73.3 | 16.3 | 4.4 | 5.5 | 100.0 | |

2. 統一을 위한 國際的 課題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적 과제에 관해서는, 첫째로 미·일·중·소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4할을 상회(45.4%)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소와의 관계개선(38.0%), 유엔의 협력(7.1%), 제3세계의 협력(6.1%), 미·일등 우방국과의 유대강화(3.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 및 이러한 역학관계의 개선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무드조성을 위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 입장이 전체응답자의 8할을 상회(86.7%)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2> 統一을 위한 國際的 課題



통일을 위한 국제과제와 통일후의 이념체제와의 관계를 보면 공산주의체제 및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과제로 제3세계와의 협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 및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남북한 교차승인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이념의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남북한 교차(41.1%) 승인과 중·소와의 관계개선(37.3%)을 국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완화가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적 국제과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과제와 연령별 인식태도와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 10대 20대에선 중소와의 관계개선(52.9%, 44.9%)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30,40,50,60대에선 미소중일의 남북교차 승인(49.6%, 53.2%, 47.6%, 42.9%)을 가장 많이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와의 관계개선에 관한 중요성은 낮게 평가되고 (20代 44.9%, 40代 34.0%, 60代 28.6%)있으며 미소중일의 교차승인은 청장년층일수록 중요시 하고 있다.

<표 7-2-1> 統一後의 理念體制와 統一을 爲한 國際的 課題와의 關係

| 평화통일을 위 한 국제적 과제 | 남북한교 차승인 | 미·일·동 방·국·과 의·유·대·강 화 | 중·소·와 의·관계 개선 | 제 3 세계 의 협력 | 유엔의협 력 | 합 계 |
|---------------------|-------------|--------------------------------|---------------------|----------------|-----------|-------|
| 공산주의 체제 | 2 | 1 | 3 | 9 | 0 | 15 |
| | 13.3 | 6.7 | 20.0 | 60.0 | 0 | .7 |
| | .2 | 1.4 | .4 | 7.0 | 0 | |
| | .1 | .0 | .1 | .4 | 0 | |
| 자본주의 체제 | 258 | 17 | 220 | 21 | 40 | 556 |
| | 46.4 | 3.1 | 39.6 | 3.8 | 7.2 | 26.1 |
| | 26.6 | 23.9 | 27.2 | 16.4 | 26.5 | |
| | 12.1 | .8 | 10.3 | 1.0 | 1.9 | |
|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 8 | 1 | 13 | 18 | 1 | 41 |
| | 19.5 | 2.4 | 31.7 | 43.9 | 2.4 | 1.9 |
| | .8 | 1.4 | 1.6 | 14.1 | .7 | |
| | .4 | .0 | .6 | .8 | .0 | |
|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 469 | 26 | 362 | 30 | 64 | 951 |
| | 49.3 | 2.7 | 38.1 | 3.2 | 6.7 | 44.6 |
| | 48.4 | 36.6 | 44.7 | 23.4 | 42.4 | |
| | 22.0 | 1.2 | 17.0 | 1.4 | 3.0 | |
| 새로운 이념의 체제 | 232 | 26 | 211 | 49 | 46 | 565 |
| | 41.1 | 4.6 | 37.3 | 8.7 | 8.1 | 26.5 |
| | 23.9 | 36.6 | 26.0 | 38.3 | 30.5 | |
| | 10.9 | 1.2 | 9.9 | 2.3 | 2.2 | |
| 합 계 | 970 | 71 | 810 | 128 | 151 | 2131 |
| | 45.5 | 3.3 | 38.0 | 6.0 | 7.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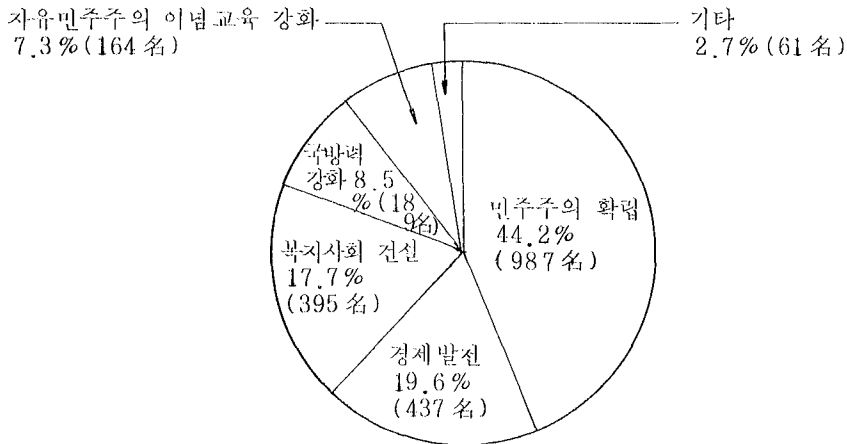
<표 7-2-2> 年齡과 統一을 위한 國際的 課題와의 關係

| 연령 | 평화통일 국제적과제 | 미소중일의 남북교차 승인 | 미일등 우 방과유대 강화 | 중소와의 관계개선 | 제3 세계 협력 | UN의 협력 | 합 계 |
|---------|---------------|---------------------|---------------------|--------------|-------------|-----------|-----|
| 10 대 | 4 | 2 | 9 | 1 | 1 | 17 | |
| | 23.5 | 11.8 | 52.9 | 5.9 | 5.9 | .8 | |
| | .4 | 2.8 | 1.1 | .8 | .7 | | |
| | .2 | .1 | .4 | .0 | .0 | | |
| 20 대 | 190 | 15 | 257 | 76 | 35 | 573 | |
| | 33.2 | 2.6 | 44.9 | 13.3 | 6.1 | 26.7 | |
| | 19.5 | 21.1 | 31.5 | 75.6 | 22.9 | | |
| | 8.8 | .7 | 12.0 | 3.5 | 1.6 | | |
| 30 대 | 332 | 18 | 244 | 27 | 47 | 669 | |
| | 49.6 | 2.7 | 36.5 | 4.0 | 7.0 | 31.1 | |
| | 34.1 | 25.4 | 29.9 | 20.5 | 30.7 | | |
| | 15.4 | .8 | 11.4 | 1.3 | 2.2 | | |
| 40 대 | 263 | 18 | 168 | 16 | 29 | 494 | |
| | 53.2 | 3.6 | 34.0 | 3.2 | 5.9 | 23.0 | |
| | 27.0 | 25.4 | 20.6 | 12.1 | 19.0 | | |
| | 12.2 | .8 | 7.8 | .7 | 1.3 | | |
| 50 대 | 165 | 13 | 125 | 12 | 32 | 347 | |
| | 47.6 | 3.7 | 36.0 | 3.5 | 9.2 | 16.1 | |
| | 16.9 | 18.3 | 15.3 | 9.1 | 20.9 | | |
| | 7.7 | .6 | 5.8 | .6 | 1.5 | | |
| 60 대 이상 | 21 | 5 | 14 | 0 | 9 | 49 | |
| | 42.9 | 10.2 | 28.6 | 0 | 18.4 | 2.3 | |
| | 2.2 | 7.0 | 1.7 | 0 | 5.9 | | |
| | 1.0 | .2 | .7 | 0 | .4 | | |
| 합 계 | 975 | 71 | 817 | 132 | 153 | 2149 | |
| | 45.4 | 3.3 | 38.0 | 6.1 | 7.1 | 100.0 | |

3. 統一을 위한 國內的 課題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국내적 과제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확립이 전체의 4할을 상회(44.2%)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경제발전(19.6%), 복지사회건설(17.7%) 국방력강화(8.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노력이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을 볼때 평화통일 달성의 분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표 7-3> 統一을 위한 國內的 課題



이같은 반응을 통일후의 이념체제 선호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공산주의 체제 및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를 선호하는 여론선도계층일수록 다른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보다 더욱 민주주의의 확립을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표 7-3-1> 統一後의 理念體制와 統一을 위한 國內의 課題와의 關係

| 통일후의 이념체제 |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 | 국방력 강화 | 민주주의 확립 | 경제 발전 | 복지사회 건설 | 자유민주주의 이념 교육 강화 | 기타 | 합계 |
|---------------|---------------------|--------|---------|-------|---------|-----------------|-------|----|
| 공산주의 체제 | 1 | 17 | 0 | 0 | 0 | 0 | 2 | 20 |
| | 5.0 | 85.0 | 0 | 0 | 0 | 0 | 10.0 | 9 |
| | .5 | 1.8 | 0 | 0 | 0 | 0 | 3.5 | |
| | .0 | .8 | 0 | 0 | 0 | 0 | .1 | |
| 자본주의 체제 | 71 | 202 | 141 | 94 | 52 | 2 | 562 | |
| | 12.6 | 35.9 | 25.1 | 16.7 | 9.3 | .4 | 25.4 | |
| | 37.8 | 20.8 | 32.3 | 23.9 | 31.7 | 3.5 | | |
| | 3.2 | 9.1 | 6.4 | 4.3 | 2.4 | .1 | | |
| 공산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 2 | 40 | 2 | 4 | 0 | 9 | 57 | |
| | 3.5 | 70.2 | 3.5 | 7.0 | 0 | 15.8 | 2.6 | |
| | 1.1 | 4.1 | .5 | 1.0 | 0 | 15.8 | | |
| | .1 | 1.8 | .1 | .2 | 0 | .4 | | |
| 자본주의 중심의 혼합체제 | 69 | 411 | 199 | 201 | 68 | 18 | 966 | |
| | 7.1 | 42.5 | 20.6 | 20.8 | 7.0 | 1.9 | 43.7 | |
| | 36.7 | 42.3 | 45.6 | 51.1 | 41.5 | 31.6 | | |
| | 3.1 | 18.6 | 9.0 | 9.1 | 3.1 | .8 | | |
| 새로운 이념의 체제 | 44 | 300 | 94 | 93 | 44 | 26 | 601 | |
| | 7.3 | 49.9 | 15.6 | 15.5 | 7.3 | 4.3 | 27.2 | |
| | 23.4 | 30.9 | 21.6 | 23.7 | 26.8 | 45.6 | | |
| | 2.0 | 13.6 | 4.3 | 4.2 | 2.0 | 1.2 | | |
| 합계 | 188 | 971 | 436 | 393 | 164 | 57 | 2209 | |
| | 8.5 | 44.0 | 19.7 | 17.8 | 7.4 | 2.6 | 100.0 | |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 자본중심의 혼합체제, 새로운 이념의 체제를 선호할수록 민주주의 확립, 경제발전, 복지사회 건설 순으로 보고있어 보다 광범위한 민주가치 실현을 통일을 위한 국내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연령별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전 연령계층에 걸쳐서 민주주의의 확립(평균 44.2%)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통일선결과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며 경제발전, 복지사회 건설 등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10,20,30대에서 민주주의 확립(47.4%, 56.1%, 44.9%)이 크게 강조되지만 60대의 경우 민주주의확립, 경제발전, 복지건설(24.5%, 22.4%, 16.3%)이 고른 중요성을 띠고 보여지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교육강화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통일장애요인과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지도자의 무성의를 통일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응답한 사람일수록 경제발전을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요인들을 제시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확립을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도자의 무성의를 주된 통일장애요인으로 제시한 사람들은 다른 요인들을 제시한 사람에 비해서 민주주의 확립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결국 통일은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내적 기반을 다져 안정을 이룰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현 통일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지도계층일수록 통일기반위한 국내과업으로 국방력강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고

<표 7-3-2> 年齡과 統一을 위한 國內的 課題와의 關係

| 연령 | 평화통일 에의 국내적과제 | 국방강화 | 민주주의 의 확립 | 경제발전 | 복지사회 건설 | 자유민주 주의이념 교육강화 | 기 타 | 합 계 |
|--------|---------------------|------|--------------|------|------------|----------------------|--------|--------|
| 10 대 | 2 | 9 | 2 | 5 | 1 | 0 | 19 | |
| | 10.5 | 47.4 | 10.5 | 26.3 | 5.3 | 0 | .9 | |
| | 1.1 | .9 | .5 | 1.3 | .6 | 0 | | |
| | .1 | .4 | .1 | .2 | .0 | 0 | | |
| 20 대 | 51 | 356 | 77 | 72 | 33 | 46 | 635 | |
| | 8.0 | 56.1 | 12.1 | 11.3 | 5.2 | 7.2 | 28.4 | |
| | 27.0 | 36.1 | 17.7 | 18.2 | 20.1 | 75.4 | | |
| | 2.3 | 15.9 | 3.4 | 3.2 | 1.5 | 2.1 | | |
| 30 대 | 57 | 305 | 145 | 132 | 32 | 8 | 679 | |
| | 8.4 | 44.9 | 21.4 | 19.4 | 4.7 | 1.2 | 30.4 | |
| | 30.2 | 30.9 | 33.3 | 33.4 | 19.5 | 13.1 | | |
| | 2.6 | 13.7 | 6.5 | 5.9 | 1.4 | .4 | | |
| 40 대 | 40 | 174 | 123 | 111 | 44 | 6 | 498 | |
| | 8.0 | 34.9 | 24.7 | 22.3 | 8.8 | 1.2 | 22.3 | |
| | 21.2 | 17.6 | 28.2 | 28.1 | 26.8 | 9.8 | | |
| | 1.8 | 7.8 | 5.5 | 5.0 | 2.0 | .3 | | |
| 50 대 | 31 | 131 | 78 | 67 | 44 | 1 | 352 | |
| | 8.8 | 37.2 | 22.2 | 19.0 | 12.5 | .3 | 15.8 | |
| | 16.4 | 13.3 | 17.9 | 17.0 | 26.8 | 1.6 | | |
| | 1.4 | 5.9 | 3.5 | 3.0 | 2.0 | .0 | | |
| 60 대이상 | 8 | 12 | 11 | 8 | 10 | 0 | 49 | |
| | 16.3 | 24.5 | 22.4 | 16.3 | 20.4 | 0 | 2.2 | |
| | 4.2 | 1.2 | 2.5 | 2.0 | 6.1 | 0 | | |
| | .4 | .5 | .5 | .4 | .4 | 0 | | |
| 합 계 | 189 | 987 | 436 | 395 | 164 | 61 | 2232 | |
| | 8.5 | 44.2 | 19.5 | 17.7 | 7.3 | 2.7 | 100.0 | |

<표 7-3-3> 統一障礙要因과 統一을 위한 國內的
課題와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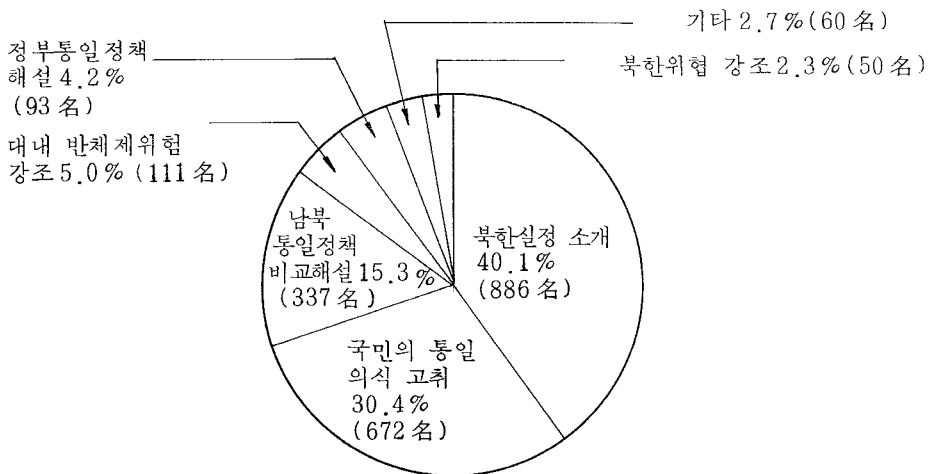
| 평화통일기반 조성을위한 장애요인 국제적 과제 | 국방력 강화 | 민주주의 확립 | 경제 발전 | 복지사회 건설 | 자유민주 주의 이념 교육 강화 | 기 타 | 합 계 |
|--------------------------------|-----------|------------|----------|------------|------------------------|------|-------|
| 사상체제의 내립 | 49 | 198 | 126 | 81 | 51 | 8 | 513 |
| | 9.6 | 38.6 | 24.6 | 15.8 | 9.9 | 1.6 | 23.2 |
| | 25.9 | 20.4 | 28.8 | 20.5 | 31.3 | 13.6 | |
| | 2.2 | 8.9 | 5.7 | 3.7 | 2.3 | .4 | |
| 미.소.중.일의 이해관계대립 | 37 | 256 | 85 | 80 | 27 | 18 | 503 |
| | 7.4 | 50.9 | 16.9 | 15.9 | 5.4 | 3.6 | 22.7 |
| | 19.6 | 26.4 | 19.5 | 20.3 | 16.6 | 30.5 | |
| | 1.7 | 11.6 | 3.8 | 3.6 | 1.2 | .8 | |
| 북한지도자의 무성의 | 30 | 28 | 33 | 12 | 18 | 2 | 123 |
| | 24.4 | 22.8 | 26.8 | 9.8 | 14.6 | 1.6 | 5.6 |
| | 15.9 | 2.9 | 7.6 | 3.0 | 11.0 | 3.4 | |
| | 1.4 | 1.3 | 1.5 | .5 | .8 | .1 | |
| 한국지도자의 무성의 | 5 | 65 | 3 | 17 | 0 | 9 | 99 |
| | 5.1 | 65.7 | 3.0 | 17.2 | 0 | 9.1 | 4.5 |
| | 2.6 | 6.7 | .7 | 4.3 | 0 | 15.3 | |
| | .2 | 2.9 | .1 | .8 | 0 | .4 | |
| 남북한 상호불신 | 27 | 197 | 78 | 94 | 19 | 9 | 424 |
| | 6.4 | 46.5 | 18.4 | 22.2 | 4.5 | 2.1 | 19.2 |
| | 14.3 | 20.3 | 17.8 | 23.8 | 11.7 | 15.3 | |
| | 1.2 | 8.9 | 3.5 | 4.2 | .9 | .4 | |
| 남북한의 국내정치 불안 | 5 | 34 | 6 | 33 | 3 | 2 | 83 |
| | 6.0 | 41.0 | 7.2 | 39.8 | 3.6 | 2.4 | 3.8 |
| | 2.6 | 3.5 | 1.4 | 8.4 | 1.8 | 3.4 | |
| | .2 | 1.5 | .3 | 1.5 | .1 | .1 | |
|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화 | 36 | 191 | 106 | 78 | 45 | 11 | 467 |
| | 7.7 | 40.9 | 22.7 | 16.7 | 9.6 | 2.4 | 21.1 |
| | 19.0 | 19.7 | 24.3 | 19.7 | 27.6 | 18.6 | |
| | 1.6 | 8.6 | 4.8 | 3.5 | 2.0 | .5 | |
| 합 계 | 189 | 970 | 437 | 395 | 163 | 59 | 2213 |
| | 8.5 | 43.8 | 19.7 | 17.8 | 7.4 | 2.7 | 100.0 |

정부의 현 통일대화를 매우 비판적으로 볼수록 민주주의 확립을 통일기반위한 국내적 과업으로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다.

4. 統一安保教育의 重點方向

우리나라 통일안보교육상 더욱 주력해야 할 점에 관해서는 북한실정 소개가 4할(40.1%)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 통일의식고취(30.4%), 남북 통일정책 비교해설(15.3%), 대내 반체제 위협강조(5.0%), 정부 통일정책 해설(4.2%), 기타(2.7%), 북한위협강조(2.3%)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 통일 안보교육의 방향은, 접근이 차단된 북한의 실제 정세에 관한 객관적 소개와 아울러 국민의 전반적인 통일의식고취가 가장 시급히 보완되고 주력해야 할 문제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체의 약 7할)

<표 7-4> 統一安保教育의 重點方向



<표 7-3-4> 政府의 現 統一對話 評價와 統一위한 國內的 課業과의 關係分析

| 통일기반위한 국내적과업 정부의 현통일대화평가 | 국방력 강화 | 민주주의 확립 | 경제발전 | 복지사회 건설 | 자유민주 주의의 교육강화 | 기타 | 합계 |
|-----------------------------------|-----------|------------|------|------------|---------------------|------|-------|
| 매우 좋다 | 45 | 60 | 61 | 30 | 29 | 0 | 225 |
| | 20.0 | 26.7 | 27.1 | 13.3 | 12.9 | 0 | 10.1 |
| | 23.8 | 6.1 | 14.0 | 7.6 | 17.7 | 0 | |
| | 2.0 | 2.7 | 2.7 | 1.3 | 1.3 | 0 | |
| 비교적 좋다 | 82 | 240 | 187 | 182 | 64 | 7 | 762 |
| | 10.8 | 31.5 | 24.5 | 23.9 | 8.4 | .9 | 34.2 |
| | 43.4 | 24.4 | 42.9 | 46.3 | 39.0 | 11.5 | |
| | 3.7 | 10.8 | 8.4 | 8.2 | 2.9 | .3 | |
| 그저 그렇다 | 30 | 215 | 95 | 87 | 34 | 8 | 470 |
| | 6.4 | 46.0 | 20.2 | 18.5 | 7.2 | 1.7 | 21.1 |
| | 15.9 | 22.0 | 21.8 | 22.1 | 20.7 | 13.1 | |
| | 1.3 | 9.7 | 4.3 | 3.9 | 1.5 | .4 | |
| 다소 비판적 | 24 | 274 | 77 | 75 | 29 | 15 | 494 |
| | 4.9 | 55.5 | 15.6 | 15.2 | 5.9 | 3.0 | 22.2 |
| | 12.7 | 27.8 | 17.7 | 19.1 | 17.7 | 24.6 | |
| | 1.1 | 12.3 | 3.5 | 3.4 | 1.3 | .7 | |
| 매우 비판적 | 8 | 194 | 16 | 19 | 7 | 31 | 275 |
| | 2.9 | 70.5 | 5.8 | 6.9 | 2.5 | 11.3 | 12.3 |
| | 4.2 | 19.7 | 3.7 | 4.8 | 4.3 | 50.8 | |
| | .4 | 8.7 | .7 | .9 | .3 | 1.4 | |
| | 0 | 0 | 0 | 0 | 1 | 0 | 1 |
| | 0 | 0 | 0 | 0 | 100.0 | 0 | .0 |
| | 0 | 0 | 0 | 0 | .6 | 0 | |
| | 0 | 0 | 0 | 0 | .0 | 0 | |
| 합계 | 189 | 984 | 436 | 393 | 164 | 61 | 2227 |
| | 8.5 | 44.2 | 19.6 | 17.6 | 7.4 | 2.7 | 100.0 |

그런데 統一安保教育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것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代는 國民통일의식고취 (36.8%), 북한실정소개 (31.6%) 순이고 20代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 (40%, 33.3%)이며 30代는 북한실정소개 (45.2%) 통일의식 고취 (25.1%) 이고 40代 50代역시 마찬가지로 순서이고 60代는 31.3, 33.3%로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실정소개 (40.1%)가 가장 요구되고 있고 다음으로 국민통일의식고취 (30.4%), 남북통일정책비교해설 (15.3%) 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현 통일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여론선도 계속일수록 통일안보 교육에서 강조점으로 북한 위협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고 정부의 현 통일 대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일수록 통일안보교육에서의 강조점을 통일의식고취로 보는 경향이 높다.

<표 7-4-1> 年齡과 統一安保教育의 重點方向의 關係

| 연령 | 통일안보교육의 역점 | 북한위협 강조 | 북한실정 소개 | 대내민채 제위협강 조 | 정부의통 일정책해 설 | 남북의통 일정책비 교해설 | 국민의통 일의식고 취 | 기 타 | 합 계 |
|---------|---------------|------------|------------|-------------------|-------------------|---------------------|-------------------|------|-------|
| 10 대 | | 0 | 6 | 0 | 2 | 2 | 7 | 2 | 19 |
| | | 0 | 31.6 | 0 | 10.5 | 10.5 | 36.8 | 10.5 | .9 |
| | | 0 | .7 | 0 | 2.2 | .6 | 1.0 | 3.3 | |
| | | 0 | .3 | 0 | .1 | .1 | .3 | .1 | |
| 20 대 | | 10 | 206 | 23 | 10 | 92 | 247 | 30 | 618 |
| | | 1.6 | 33.3 | 3.7 | 1.6 | 14.9 | 40.0 | 4.9 | 28.0 |
| | | 20.0 | 23.3 | 20.7 | 10.8 | 27.3 | 36.8 | 50.0 | |
| | | .5 | 9.3 | 1.0 | .5 | 4.2 | 11.2 | 1.4 | |
| 30 대 | | 11 | 304 | 35 | 41 | 101 | 169 | 11 | 672 |
| | | 1.6 | 45.2 | 5.2 | 6.1 | 15.0 | 25.1 | 1.6 | 30.4 |
| | | 22.0 | 34.3 | 31.5 | 44.1 | 30.0 | 25.2 | 18.3 | |
| | | .5 | 13.8 | 1.6 | 1.9 | 4.6 | 7.7 | .5 | |
| 40 대 | | 9 | 217 | 30 | 26 | 73 | 127 | 16 | 498 |
| | | 1.8 | 43.6 | 6.0 | 5.2 | 14.7 | 25.5 | 3.2 | 22.6 |
| | | 18.0 | 24.5 | 27.0 | 28.0 | 21.7 | 18.9 | 26.7 | |
| | | .4 | 9.8 | 1.4 | 1.2 | 3.3 | 5.8 | .7 | |
| 50 대 | | 17 | 138 | 21 | 12 | 59 | 105 | 1 | 353 |
| | | 4.8 | 39.1 | 5.9 | 3.4 | 16.7 | 29.7 | .3 | 16.0 |
| | | 34.0 | 15.6 | 18.9 | 12.9 | 17.5 | 15.6 | 1.7 | |
| | | .8 | 6.3 | 1.0 | .5 | 2.7 | 4.8 | .0 | |
| 60 대 이상 | | 3 | 15 | 2 | 2 | 10 | 16 | 0 | 48 |
| | | 6.3 | 31.3 | 4.2 | 4.2 | 20.8 | 33.3 | 0 | 2.2 |
| | | 6.0 | 1.7 | 1.8 | 2.2 | 3.0 | 2.4 | 0 | |
| | | .1 | .7 | .1 | .1 | .5 | .7 | 0 | |
| 합 계 | | 50 | 886 | 111 | 93 | 337 | 671 | 60 | 2208 |
| | | 2.3 | 40.1 | 5.0 | 4.2 | 15.3 | 30.4 | 2.7 | 100.0 |

<표 7-4-2> 政府의 現 統一對話評價와 統一安保教育에서의
中點方向과의 關係分析

| 안보교육에서 정부의 강조될 사항 현통일대화평가 | 북한위협 강조 | 북한실정 소개 | 반체제위 협강조 | 통일정책 해설 | 남북통일 정책비교 해설 | 통일의식 고취 | 기 타 | 합 계 |
|---------------------------------|------------|------------|-------------|------------|--------------------|------------|------|-------|
| 매우 좋다 | 23 | 78 | 17 | 14 | 38 | 53 | 2 | 225 |
| | 10.2 | 34.7 | 7.6 | 6.2 | 16.9 | 23.6 | .9 | 10.2 |
| | 46.0 | 8.8 | 15.5 | 15.1 | 11.4 | 7.9 | 3.3 | |
| | 1.0 | 3.5 | .8 | .6 | 1.7 | 2.4 | .1 | |
| 비교적 좋다 | 19 | 320 | 61 | 41 | 139 | 166 | 13 | 759 |
| | 2.5 | 42.2 | 8.0 | 5.4 | 18.3 | 21.9 | 1.7 | 34.5 |
| | 38.0 | 36.1 | 55.5 | 44.1 | 41.6 | 24.8 | 21.7 | |
| | .9 | 14.5 | 2.8 | 1.9 | 6.3 | 7.5 | .6 | |
| 그저 그렇다 | 5 | 196 | 21 | 22 | 70 | 147 | 6 | 467 |
| | 1.1 | 42.0 | 4.5 | 4.7 | 15.0 | 31.5 | 1.3 | 21.2 |
| | 10.0 | 22.1 | 19.1 | 23.7 | 21.0 | 21.9 | 10.0 | |
| | .2 | 8.9 | 1.0 | 1.0 | 3.2 | 6.7 | .3 | |
| 다소 비판적 | 2 | 201 | 11 | 12 | 68 | 184 | 12 | 490 |
| | .4 | 41.0 | 2.2 | 2.4 | 13.9 | 37.6 | 2.4 | 22.2 |
| | 4.0 | 22.7 | 10.0 | 12.9 | 20.4 | 27.5 | 20.0 | |
| | .1 | 9.1 | .5 | .5 | 3.1 | 8.4 | .5 | |
| 매우 비판적 | 0 | 91 | 0 | 4 | 19 | 120 | 27 | 261 |
| | 0 | 34.9 | 0 | 1.5 | 7.3 | 46.0 | 10.3 | 11.8 |
| | 0 | 10.3 | 0 | 4.3 | 5.7 | 17.9 | 45.0 | |
| | 0 | 4.1 | 0 | .2 | .9 | 5.4 | 1.2 | |
| 합 계 | 50 | 886 | 110 | 93 | 334 | 670 | 60 | 2203 |
| | 2.3 | 40.2 | 5.0 | 4.2 | 15.2 | 30.4 | 2.7 | 100.0 |

5.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의提言

與論先導階層이 統一政策에 대한 提言으로서 개진한 의견중 대표적인 것들을 주요항목별로 분류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 관련자료 공개

- 6.25 미체험 세대들에게 북한의 언론매체를 개방하여 자발적으로 남한의 우위를 깨닫게 하자.
- 북한실태를 알려줄 신문·서적·홍보물을 자유열람시킬것.
- 북한사정에 대한 사실진파를 해달라.
- 주도권 싸움만 하지말고 1차자료를 달라.
- 북한현실에 대한 정보통제의 완화.
- 자유민주체제의 우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이 필요.
- 진실되고 정확한 보도.
- 북한에 대한 지나친 긍정도 부정도 금물이므로 사실자료 개방.
-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말라.
- 연구된 자료의 제한없는 공개·열람·토의.

② 자유로운 통일논의

- 학생들의 통일논의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의지가 기성인들을 반성케 하고있다.
- 정부가 통일정책을 주도하지만 고압적으로 교육·계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의견수렴할 것.
-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도 국민단합에서 나올수 밖에 없다.
- 통일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 허용

- 통일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정책 등이 폐지되어야 한다.
- 통일논의는 정부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 창구도 다원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이나 학생들의 감정적 독점도 배제돼야
- 학생과 재야에서 활성화된 통일논의도 심층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의 통일정책 세부 추진사항도 공개하기 바란다.
- 공청회 같은 것으로 의견수렴
- 통일논의 기구 설치
- 모든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케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후 창구를 한곳으로 하여 집결시키자.
- 통일논의와 운동은 민중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③ 비정치적 교류

- 자유로운 왕래가 가장 중요하다.
- 이질화된 언어와 감정해소가 우선
- 예술의 교류는 동족이라는 의식을 느끼게 한다.
- 급진적 논의는 오히려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서신교환만이라도 하자
- 남북인이 학생을 포함한 인적교류를 적어도 인구 10,000 명당 1명꼴로 하라.
- 민간차원의 주도가 국민공감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남북한 학술교류 추진
- 쌍방 언론매체의 자유로운 교환
- 관문점에 공동경기장 건설

- 생존자 명단만이라도 속히 교환하자
- 휴전선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자
- 남북한 관광객의 왕래 허용
- 고향방문단 재방문
- 이제 비방이라도 멈추고 동질성을 찾아가자

④ 통일교육의 개선

- 통일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높여야 한다.
-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로 되어 마땅하다.
- 북한실태를 왜곡교육하지 말고 그대로 반공교육을 하라.
- 민방위 정신교육을 실시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대상자들에게는 귀순자 강연보다 학자강연을 들려달라.
- 객관적 판단능력 제고가 중요
- 각급 교육기관의 반공교육을 대폭 수정하여 필요이상의 적개심을 없애자.
- 이념교육의 개방화→스스로 판단 유도
- 좌·우의 이념은 민족이란 개념의 하위개념이다.
- 20-30년전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교과서에 사실을 실도록 하자
- 반공보다는 평화통일 교육에 중점을 두자
- 대학생의 무분별한 공산주의 지지를 이론적으로 제교육시키자
- 「눈으로 보는 안보교육」으로
- 북한 좋아하는 대학생들은 북으로 보내보라.

⑤ 체제의 민주화

- 북한의 체제에 변화가 곧 올 것이므로 그때를 대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자
- 각계각층 고위책임자들이 기득권 포기의 각오를 하고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가야 통일은 가능하다.
- 대내정치의 민주화, 복지의 균등이 통일의 필수조건이다.
- 남한사회 자체내에 있는 비민주적, 독재적, 이기적,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 고위층과 부유층의 정신자세가 고쳐져야
- 군사독재가 종식되지 않고서는 절대 통일은 이룰수 없다.
-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대내적 민주개혁이 필요
-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체제공지가 필요하다.
- 민주주의 확립이 곧 평화통일
- 북한문제는 외교가 아니고 국내정치차원이어야 한다.
-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이땅의 자주화·민주화 성취

<표 5 - 1>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빈도순)

| 직업 제언내용 | 국회 정당 | 법조 | 언론 | 교수 | 종교 | 경제 단체 | 통일 연수생 | 공무원 | 예·체능 농·축·지도 | 학생 간부 | 계 |
|----------------|-------------|-------------|-------------|-------------|-------------|--------------|--------------|--------------|----------------|--------------|--------------|
| 북한관련자료 공 개 | 8 (26.7) | 2 (33.3) | 8 (22.9) | 4 (10.3) | 3 (7.7) | 13 (20.6) | 14 (12.2) | 13 (19.7) | 9 (14.5) | 18 (12.7) | 92 (15.4) |
| 자유로운 통일 논의 | 2 (6.7) | · (0) | 3 (8.6) | 4 (10.3) | 2 (5.1) | 8 (12.7) | 18 (15.7) | 7 (10.6) | 4 (6.5) | 18 (12.7) | 66 (11.1) |
| 비정치적 교류 | 6 (20) | · (0) | 5 (14.3) | 4 (10.3) | 2 (5.1) | 7 (11.1) | 11 (9.6) | 10 (15.2) | 11 (17.7) | 8 (5.6) | 64 (10.7) |
| 통일교육의 개선 | · (0) | · (0) | 4 (11.4) | 3 (7.7) | 2 (5.1) | 11 (17.5) | 15 (13.0) | 6 (9.1) | 4 (6.5) | 11 (7.7) | 56 (9.4) |
| 체제의 민주화 | 1 (3.3) | · (0) | 1 (2.9) | 4 (10.3) | 6 (15.4) | 3 (4.8) | 11 (9.6) | 3 (4.5) | 8 (12.9) | 13 (9.2) | 50 (8.4) |
| 민족의 동질성회복 | 1 (3.3) | 2 (33.3) | · (0) | 4 (10.3) | 1 (2.6) | 6 (9.5) | 10 (8.7) | 4 (6.1) | 6 (9.7) | 14 (9.9) | 48 (8.0) |
| 통일정책의 탈정권화 | 2 (6.7) | · (0) | 6 (17.1) | 3 (7.7) | 8 (20.5) | 6 (9.5) | 8 (7.0) | 5 (7.6) | 2 (3.2) | 6 (4.2) | 46 (7.7) |
| 남북 상호 체제인정 | 3 (10) | 1 (16.7) | 6 (17.1) | 6 (15.4) | 8 (20.5) | 4 (6.3) | 6 (5.2) | 5 (7.6) | 3 (4.8) | 4 (2.8) | 46 (7.7) |
| 대화창구 일원화 | 1 (3.3) | 1 (16.7) | · (0) | 4 (10.3) | 3 (7.7) | 4 (6.3) | 12 (10.4) | 6 (9.1) | 3 (4.8) | 3 (2.1) | 37 (6.2) |
| 자유로운 상호방분 | 5 (16.7) | · (0) | · (0) | 1 (2.6) | 2 (5.1) | 1 (1.6) | 9 (7.8) | 5 (7.6) | 4 (6.5) | 3 (2.1) | 30 (5.0) |
| 군축·미군철수 연방제 | · (0) | · (0) | 2 (5.7) | 2 (5.1) | 2 (5.1) | · (0) | 1 (0.9) | · (0) | 1 (1.6) | 20 (14.1) | 28 (4.7) |
| 민간 주도 통일운동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1 (1.6) | · (0) | 18 (12.7) | 19 (3.2) |
| 국민의 화합과단결 | 1 (3.3) | · (0) | · (0) | · (0) | · (0) | · (0) | · (0) | 1 (1.6) | 7 (11.3) | 6 (4.2) | 15 (2.5) |
| 계 | 30 (100) | 6 (100) | 35 (100) | 39 (100) | 39 (100) | 63 (100) | 115 (100) | 66 (100) | 62 (100) | 142 (100) | 597 (100) |

<표 5 - 2> 제시된 제언의 요약표 (정책성질 별)

| 제시된 基本方向 (빈도수) | 제시된 政策方案 (빈도수) | 제시된 實踐課題 |
|---------------------------------|----------------------|--------------------------------------|
| ○공존기조하의 동질성 회복 (210) | ○비정치적 교류 (64) | ○문화, 스포츠, 학술교류 ○경제적 협력 (ex: 경제특구) |
| | ○민족 동질성회복 (48) | ○상호방문 및 서신교환 ○신민족주의 창출 |
| | ○상호 체제인정 (46) | ○휴전선 공동 자치구 설정 ○불가침협정·교차승인 |
| | ○대화창구 일원화 (37) | ○학생·야당과의 협력 ○여론수렴 기구 설치 |
| | ○국민화합 (15) | ○대내적 민주화를 선결 ○분배 및 복지통한 갈등해결 |
| ○점차적 통일논의 자료 개방 (177) | ○일차자료 공개 (92) | ○객관적·직접적 판단력제고 ○언론 및 각계인사 교환 |
| | ○통일논의 허용 (66) | ○냉전 이데올로기 청산 ○의사개진 자유 허용 |
| | ○민간주도 통일운동 (19) | ○대화창구를 다양화 ○학생교환 등을 긍정검토 |
| ○통일정책의 탈 정권 화 (102) | ○통일교육 개선 (56) | ○북한실정 왜곡금지 ○통일의지 제고 |
| | ○정치적 이용 지양 (46) | ○소모전 지양, 불신해소 ○외세의 영향력 극소화 |

第8節 南北韓의 豫想事態 豫測 (1988-1995)

우리나라 각 직능, 기능별 지도계층에 의해 記述된 1995년까지 예상되는 주요 예견사태를 동일한 내용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가장 빈도수가 큰 항목으로 재정리하였다.

1. 주요예상사태 분석 (한국)

민주화와 실질적 정권교체

탈권위주의에 대한 시대적 열망, 지자제등 분권화에 대한 요구, 야당의 집권가능성 등이 예상사태로 강력히 제시된 가운데 민주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정권교체는 비군인출신 집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야당집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9~1991년사이 남북한의 實利的 共存 및 統一을 위한 전환기적 변화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대내적 국민요구, 분단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상징으로 파악하는 左派의 압력, 여기서 정권의 정통성을 획득하려는 지도자의 반사적 노력, 新데탕트의 국제정치무드 등의 요인때문에 남북한 관계는 '89 '91사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북한에서 개혁주체세력이 집권하거나 이들이 현재의 제1세대들에게 압력세력으로 작용할 시 대대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등 공산권과의 무역확대와 수교 가능성

중공과의 교역, 헝가리의 무역사무소, 대표부 개설이후 올림픽후인 '89~'90년 사이 공산권과 관계발전은 낙관한다. 물품교역 및 자본과 기술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대소 관계개선이 조심스레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필요성과 외교적 北方政策이 엇물려 대 공산권 교역과 외교가 실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후 정치소요와 정국불안 예측

재신임투표, 재야와 대학가 동향, 노사관계를 쟁점으로 차기 집권을 향한 정치적 공방이 예측되었고 올림픽후 右派세력의 대응적 부상도 소수 전망되었다. 소수이긴 하나 광주사태와 5.16비리 문제는 올림픽 직후 매듭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올림픽후의 화해무드, 기존 정치지도자의 집권을 위한 이미 지쇄신 노력등이 정치진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도 판단된다.

<표 8 - 1> 금후의 한국에서 예견되는 예상사태 집계

| 예 상 사 태 | | 빈도수 (응답자 지적횟수) | | | | 총빈도수 |
|-----------------|----------------------------|------------------|---------|---------|---------|------|
| | | 1988-89 | 1990-91 | 1992-93 | 1994-95 | |
| 정 치 | ○ 민주화 정착 및 실질적 정권교체 | 21 | 14 | 34 | 8 | 77 |
| | ○ 정치소요와 정국불안정 | 39 | 3 | 5 | 1 | 48 |
| | ○ 야당 대통령 탄생 | | 2 | 20 | 1 | 23 |
| | ○ 반민주화세력 부상·정변 | 8 | 3 | | | 11 |
| 군 사 | ○ 주한미군철수 본격화 | 1 | 14 | 8 | 7 | 30 |
| 남북한 및 외 교 | ○ 남북수뇌 회담·교차승인· 평화협정 체결 | 25 | 23 | 14 | 13 | 75 |
| | ○ 중공비롯한 공산권과 수교 | 28 | 29 | 9 | 8 | 74 |
| | ○ 국제적 지위향상 | 2 | 4 | 6 | 7 | 19 |
| | ○ U.N. 단독 혹은 동시가입 | 1 | 8 | 7 | 1 | 17 |
| 경 제 | ○ 경제발전과 복지확충 | 4 | 15 | 11 | 12 | 42 |
| | ○ 경제침체 및 물가양등 | 19 | 4 | · | · | 23 |
| | ○ 노사분규 심화 | 12 | 1 | 2 | · | 15 |
| 사 회 분 화 | ○ 남북대화 요구를 위시 한 대화가 소요 | 20 | 7 | 4 | 8 | 39 |
| | ○ 광주사태 및 5공비리 문제 매듭 | 5 | · | · | · | 5 |
| | ○ 반미감정 고조 | 2 | · | · | · | 2 |
| | ○ 사회 안정 | · | 1 | · | 1 | 2 |

2. 주요예상사태분석 (북한)

김일성 사망 내지 은퇴

1990 ~ 91 년 사이에 김일성은 건강의 한계로 사망 내지 은퇴하게 될 것으로 대부분의 여론선도계층이 예측한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 가운데, 김일성의 생존시에는 체제도전이나 이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특징이다.

정치적 개방탐색과 경제적 무역노력

북한은 '90 ~ '91 년 사이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요구에 직면하는 동시에,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개방의 필요성에 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중공의 실용주의 노선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시도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내적인 主體思想의 한계 및 教條化에 대한 반발,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등이 개방정책을 촉발시킬 것이며 남한측의 대공산권 관계급진전도 북한의 대서방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일·대미 관계정상화가 전망되며 經濟特區 설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집단지도체제 시도와 개혁주체세력 부상

김정일이 정권을 승계하리라 예측하지만 대부분은, 체제구축작업에는 실패할 것이라 전망하고 노동당, 군, 경제관료중에서 개혁주체 세력을

자처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며 김정일은 최소한 이들을 정권안으로 진입시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실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경우, 김정일이 개혁주체세력과 연립을 시도하는 경우 최소한의 집단지도형태가 되고, 김정일이 실각하는 경우 명실상부한 집단지도체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1994 ~ 95년 사이 經濟的 實利추구와
긴장완화·군축을위한 남북한 협상

경제적 實利추구, 정치적 정통성 획득노력, 新 데탕트 무드, 주민요구가 남한측과의 관계개선으로 유도할 가능성 유력하다.

특히 북한에서 개혁주체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되어 統一世代끼리 접촉이 가능케 되면 南北關係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될 가능성 있다고 본다.

南北韓 모두 현재로서는 權力構造內的 소수엘리트에 의한 국면변환이 가능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接近法은 실천력을 상실할 것이며, 반면 광범위한 국민이해와 토의에서 도출된 합의적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표 8 - 2> 금후의 북한에서 예견되는 예상사태집계

| 예상사태 | | 빈도수 (응답자 지적횟수) | | | | 총빈도수 |
|----------|--------------------------|----------------|---------|---------|---------|------|
| | | 1988-89 | 1990-91 | 1992-93 | 1994-95 | |
| 정치 | ○김일성 사망 | 19 | 68 | 28 | 27 | 142 |
| | ○지도체제를 둘러싼 권력 투쟁과 정치적 소요 | 8 | 29 | 12 | 8 | 57 |
| | ○정권승계한 김정일체제 붕괴 | 3 | 13 | 5 | 11 | 32 |
| | ○개혁주체세력 정권장악 (제1세대의 퇴진) | 1 | 1 | 10 | 6 | 18 |
| 군사 | ○대남도발 내지 테러행위 | 8 | 7 | 2 | 1 | 18 |
| | ○대남선전 강화 | 2 | . | . | . | 2 |
| 남북한 및 외교 | ○수뇌회담, 경제협력등 실질적 남북교류 모색 | 11 | 13 | 10 | 17 | 51 |
| | ○U.N.단독 혹은 동시가입 | . | 5 | 3 | 1 | 9 |
| | ○대 미국 관계개선 | 2 | . | 1 | . | 3 |
| | ○대 일본 무역사무소설치 내지 국교수교 | 1 | 1 | . | . | 2 |
| 경제 | ○개방모색과 무역노력 | 20 | 40 | 12 | 10 | 82 |
| | ○북한경제의 악화 | 1 | 6 | 1 | | 8 |
| 사회 문화 | ○북한 사회의 사상적 이념적 혼란 | 4 | 11 | 7 | 7 | 29 |

<표 8 - 3>

예상사태중 최다빈도 항목

| 구분 | 순위 | 예 상 사 태 | 빈도수 |
|--------|----|-----------------------|-----|
| 한 국 | 1 | 민주화 정착 및 실질적 정권교체 | 77 |
| | 2 | 남북 수뇌회담 · 교차승인 · 협정체결 | 75 |
| 북 한 | 1 | 김일성사망에 이은 지도체제 동요 | 142 |
| | 2 | 개방화의 모색과 무역노력 | 82 |

시기별 최다빈도 항목

| 구분 | 시기 순위 | 19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
| | | 한 | 1 | 정국불안 (39) | 공산권과 수교 (29) |
| 국 | 2 | 공산권과 수교 (28) | 남북관계 급진전 (23) | 야당 집권 (20) | 경제발전 · 복지 (12) |
| 북 한 | 1 | 개방 · 무역노력 (20) | 김사망 · 소요 (68) | 김 사망 · 소요 (28) | 김사망 · 소요 (27) |
| | 2 | 김사망 · 소요 (19) | 개방 · 무역노력 (40) | 권력투쟁 (12) | 남북관계 개선 (17) |

3. 政策代案

(1) 政策 方向

*. <포괄적 통일논리>

자유민주체제하의 진보적 중산층 (Liberal Middle Class) 에 공감될 수 있는 설득력있는 통일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 <여론 수렴체계>

평화무드의 국민심리와 북한과의 탈경쟁시대, 통일정책의 탈정치화에 부응하는 여론수렴이 요청된다.

통일관련 국민협의체, 국회, 정당, 행정부의 조정 등을 거쳐 세대별의 다양한 '이념성향에 맞는 정책을 강구한다.

*. <1 차자료공개와 통일논의 허용>

대학생 및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대다수국민의 요구사항인 동시에 위험 부담이 크지않은 사항일 것이다.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보완>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더 부각시키고 통일방법으로서 인구비례에 의한 체제결정을 유도하고 연방제 (1국 2체제)와 군축 등의 방안을 구체화, 다원화하고 토론을 거쳐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 남북관계개선의 장기적 낙관전망과 점진적 방안의 효율성을 고려 북한에 문화적→경제적→정치적 접근법을 통한 개방화

유도와 이의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 <대내적 민주화와 대외적 북방정책>

통일과 북한개방화의 선진과제는 국내 민주화와 대외적 북방정책이 지적되며 89 - 90년의 정치불안 해소와 92 - 94년의 실질적 민주화 예측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을 국내민주화 관계 속에서 추진할 것이 필요하다.

*. <통일원 조직>

통일원자체는 물론 통일관련 실무, 전문가의 효율적 협력과 진보적이고 융통성있는 통일정책감각 이해를 위해 조직관리면에서 정책부서의 통합 조정으로 정책관리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것이 요구된다.

(2) 정책 참고사항

*. 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정책 입안에 있어 좌, 우파성향, 진보, 보수성향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정책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 현재 한국사회의 여론선도계층은 이념과 행태면에서 국민일반보다는 진보적이고 젊은 대학생보다는 보수적이어서 여론선도계층이 포괄적 통일정책전개에 중간역할 기능을 할것임을 정책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한다.

*. 40세 이하의 여론선도계층이 인구분포면에서 70%를 차지하

므로 여론선도세력내에서도 더욱 진보적 성향을 가진것에 정책적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 *. 그러므로 통일원의 정책도 시대적 계층적 국민적 감정을 참고하고 근본적으로 그러나 점진적, 융통성있는 정책감각과 집행이 요구된다.